

인권정보자료실
R1.1.16

인권하루소식

제1769호 ~ 제1886호

합본 16호
(2001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합본 16호

2001년
1월 ~ 6월

인권정보자료실
R1.1.16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설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장제도, 단팔 없는 단팔뿔

"어머니 미안합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달부터 한달 급여액이 6만 몇천원이라고 하데요. 그거 가지고 도저히 살 용기가 안나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18일 장애인 실업자 김남희(46) 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 다. 시혜가 아닌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은커녕 심지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부족과 파행적인 운영 등이 그 원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지나치게 적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지출을 하고 있는 1천만명 중 149만명만이 지원을 받았다. 결국 '국민의 정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토록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4월 25일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등의 집계결과 지난해 이후 폐암·폐기종·간농양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각종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단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일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승인' 통보를 했다. 95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가 2000년 7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병을 발견해내는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지지 못하

고 산업재해 인정절차도 복잡하다. 고용보험도 상환은 마찬가지. 서울 구로3공단에 위치한 마이크로(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보험료를 미납시켰다는 이유로 지원을 회피하고 책임을 사장에게 떠넘겼다.

국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외면하고 질실한 국민의 생존권을 유린했다.

외형적으로 4대 보험이 갖춰졌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예산의 규모가 너무 빈약한 탓이다. 2000년도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의 7.4%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을 위해 사회보장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거권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96년 제2차 유엔인간장주회의에서 채택된 하비타트 의제 등은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했다.

정부는 99년 제2차 정부보고서에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택을 19만호를 건축하여 거택보호대상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택정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은 93년에 이미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빈곤가구가 무려 69.8%에 달했다. 방 하나에 세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려 9명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율암마을 비닐하우스에서는 잠자던 일가족 10명이 숨지는 화재사고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잘못

된 주거정책에서 나온 결과이다.

지난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철거에 직면해 대책위원회가 세워진 지역이 전국적으로 30곳 7500여 세대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철거 때 세입자들에게 임시수용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강제로 철거용역원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내쫓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진다. 2000년 1월 28일에도 관악구 봉천3동 재개발지역에 철거용역원들이 들이닥쳤다. 세입자들이 정부에, 구청에 회사에 수없이 항의했었지만 각자에게 책임만 떠넘기며 해야 할 의무를 회피했다. 결국 철거민의 세입자들은 회사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거리로 내몰려야 한다.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위해

'삶의 질 향상기획단'까지 꾸리며 '인권 경시와 복지 최소한의 폐단을 시정'한다던 생산적 복지가 어두운 현실을 가리는 외피역할만 수행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향상시킬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 이는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사회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영원]

(→1면에서 계속) 법안을 존중해 인권단체의 비판적 지지를 받을 수준의 법안이라도 여야합의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적 명분축적과 흥정거리 마련을 위해 독자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행동을 통해 입증하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인권신장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27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윤기원 민변 사무총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정숙 민가협 운영위원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허울뿐인 개혁, 빈껍데기 인권위법안 반대'라는 글귀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공대위는 28일에도 광노련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작정이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2001년 5월

(제1844호 - 제1865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1일(화)

제 18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깍대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올해 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던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인권기구공대위)는 이 법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어떻게 통과됐나?

30일 여의도는 팽팽한 긴장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남겨놓고 오전 8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아래 소위)는 여권내부의 사전 조율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에야 열린 소위는 그러나 미리 '밀실'에서 합의된 결론에 따라 쇼를 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마지막 심사소위에서 천정배 의원은 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이 터무니없이 약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며 반발. 그러나 이 '반란'은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대거 물러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진압'되고 말았다. 저녁 8시부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7표, 밤 10시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137표, 반대 133표, 기권 3표로 '빈 깍대기' 인권위원회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무엇을 담았나?

이번에 통과된 인권위법에 의하면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하여 총 11인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는 △국

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 실태 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위원장이 법무부의 협의 없이도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일보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인권위의 실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깍대기'법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이 가장 큰 맹점으로 꼽힌다(32조 1항 5호). 또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피진정인을 초동에 소환조사 할 수가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키고 있다(36조 4항 4조). 이 밖에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63조). 게다가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분노와 좌절”

한편 인권기구공대위는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성명을 발표, “여권은 법무부와 검찰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야권은 좁은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권력의지가 없었다”면서 “정치권에 대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인권위법에 대한 '전면 반대'를 천명한 이 성명서는 강한 어조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원]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4월 30일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국회에서 4인의 위원(상임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화해분위기' 속에 인권단체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국가인권위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 천정배 의원의 발언은 '들충행동'이 돼 버렸다. 수사진행중인 사건이라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민주당 천 의원의 주장은 이내 소속 정당의 당론에 묻혀 빛을 잃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까지 가세하여 천 의원의 들충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 '당론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논지였다. 천 의원의 주장은 한나라당 안과 유사한 점이 많았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결국 천 의원의 주장은 무시됐고, 이에 반발한 천 의원이 법사위원을 사퇴, 다른 의원으로 대체돼 법사위 표결이 이뤄졌다. 결국 민주당이 법무부의 기득권을 우선시 하고,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민주당안이 통과되는 걸 지켜보는 가운데, 만신창이 인권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용)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흐름과 쟁점

1. 이무영 등 경찰관 250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하다
경찰은 부평에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는 노동자들을 짓밟았다(4.10). 카메라 앵글에 피가 될 정도로 저항할 능력도 없는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군화발로 짓밟은 범죄행위가 인터넷에 공개됐다(4.12). 네티즌들은 사이위시위 지침에 따라 순식간에 청와대·경찰청·부평경찰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기도 했다(4.13). 경찰폭력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무영 경찰청장부터 폭력담당자까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4.17)했다.

한편 경찰은 '노조원에겐 잡힌 의경을 구하다가 우발적으로...'라며 재판집행 동영상을 공개했다(4.15). 대통령은 "뜻하지 않은 실수로 폭력이 발생한 것에 유감"(4.17)을 표시하고, 이무영 등 경찰관 25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4.25)했다.

2. 모든 집회를 날날이 감시하겠다
'신중화염병 제조법'이 민주노총 사이트에 올라오자 시연회를 여는 등 난리법석을 떨던 정부는 관련법률을 개정해 집회신고 때 '평화시위!'를 다짐하는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염병 투척전력자의 공직취임 제한 등을 검토(4.6)하기로 했다. 부평의 경찰만행으로 주춤하던 정부는 대신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소송을 청구(4.16)"하고, "시위도중 경찰에게 찰과상 등 부상을 입힌" 노동자에게 손해소송을 제기하겠다고(4.24)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합법 시위·쟁의는 보장하되 불법 시위·쟁의는 엄단"(4.26)하라고 한 날, 경찰은 "외국공관이 있는 곳까지 행진하는 것은 안된다"며 노동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4.26)하고, 체증반을 구성해 모든 시위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겠다고(4.20)고 선언했다.

3. 레미콘 노동자가 조직한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
건설노동자들이 꼭 한 번 타보고 싶어하는 타워크레인이 멈췄다(4.30). '안전장비를 갖추고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무시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노조를 만들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에 앞서 모든 건축물의 피와 살이 될 레미콘을 운송해주는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았다(4.10). 사용자들은 '레미콘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라며 이들이 만든 노조를 무시했다. '법원의 결정을 구한다'며 '노조 부존재' 소송을 낸(4.12), 사용주는 '레미콘 기사는 노동자'라고 법원이 '결정'하자 이제는 본안소송까지 가겠다고 버텨고 있다.

4.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 안 된다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 대해 슬그머니 검열의 축수를 내밀었다. 정부는 시행령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기술적조치"를 추가(4.23)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단선을 치는 행위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4.26)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넘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인터넷에서 정보유통을 방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4.26)했다.

5. 노동자가 불온해? 그레 교수도 노동자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자 사법당국이 전공권 간부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4.11). 공무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박한 발상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운운하는 '품위 없는 조치'로 정부는 응수하고 있는 것. 한편 강의하고 연구하는 교수들도 자신들이 '감히'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조직을 결성했다(4.14). 이 조직의 대표는 '노동자를 불온하시하는 시각을 바로 잡을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 관련활동은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며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드러냈다(4.17).

논평

-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4.7)
-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4.14)
-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4.21)
-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4.28)

인권이야기

- 신자유주의 통치-취민식(4.10)
-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엄혜진(4.17)
-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정태욱(4.25)

기획-'민생공안'의 실체

- ① 부활한 공안정국
-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4.12)
- 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 '필요하면 생존권도 버림으로 본다'(4.14)
- 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 '살기 힘들어도 숨죽이고 있어야'(4.20)
- ④ 공안대책협의회
- 공안감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4.24)

기획-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 ① 뒤떨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4.26)
-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4.27)
-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4.28)

법원 판결

- 창원지법 진주지원, 거창화살 민간인 유족의 손해소송에서 당시 '판결문' 제출요구(3.30)
- 인천지법, "대우차 노조원의 노조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4.6)
- 서울민사지법, '미군 폭력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받은 매항리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4.11)
- 인천지법 부천지원, '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이들이 만든 노조도 적법'(4.18)
- 서울지법 남부지원, "요건 못 갖춘 영장재청구는 위법", 각하(4.20)-4.23
- 3번째 청구한 영장 발부

장애인에게 이동하게 하라

· 오이도 공대위 1인시위 마지막 날 '장애인 이동권 연대회의' 발족(4.1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3일(목)

제 18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이 김대중 정부의 위선적인 '인권외교'를 질타하고 나섰다. 2일 민주노총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제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버마 정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활동 중인 버마민주화운동 한국지부 회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강제노동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제재대상이 된 버마 정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마 군사정부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강제노동력을 투입하고 어린이들마저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등 끊임없이 인권유린

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버마정부의 강제근로협약 위반에 관한 제재안을 채택하고 그해 11월 30일자로 제재안을 발효했다. ILO 설립 이후 국제적인 제재를 결의한 것은 8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어 ILO는 사무총장 명의로 각 회원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ILO의

결의에 따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 ILO 총회에서 제재결의안이 채택될 때와 11월 ILO 이사회의 결의 당시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이같은 한국 정부의 태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버마의 민주화를 강조해 온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된다. 김 대통령은 91년 노벨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버마 민족민주동맹 지도자) 여사와의 동지적 친분관계를 거듭 강조해 왔으며, 지난해 교황청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 정부가 버마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ILO의 결의마저 무시함으로써 김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국제적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 2면에 계속됩니다)

청원접수증·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2일 수용자들을 위해 △청원접수증 발부제도 신설하고 △출소자에게 의무적으로 출소장을 발부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공식요청서를 통해 수용자 청원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의 공식요청과 청구 등에 대해 접수 및 확인서 발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청원에 대해 법무당국이 교정시설에만 접수를 통보하는 것으로만 일을 처리해 청원인이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교도관에 의해 청원을 저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수용자 200 씨는 지난 3월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자 "교도관이 청원을 접수시키지 않은 것 같다"며 인권단체에 청원접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수용자의 민감한 반응이라기 보다는 이해관계에 놓인 교도관들에 의한 청원방해 행위가 낯설지 않은 교정시설의 현실 속에서 필연적으로 '의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원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원접수증 발부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장이다.

또한 구금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출소자에 대한 출소장 발부 의무화'를 촉구했다. 출소장은 일정기간동안 구금 및 출소를 증명하는 서류로, 현재 법무부는 신청자에 한해 출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출소한 수용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난데없는 벌금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출소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수용시설을 재방문해 출소장을 신청해야만 하는 이중의 수고를 겪게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법무부에 특별한 부당없이도 위 두가지가 실행가능한 사안"이라며 이를 검토,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유혜정)

사랑방이 추천하는 어린이 선물

1.<희망으로 그리는 세계1·2>
유네스코와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전세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대사 없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2만원)

2.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쓰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엮어낸 책(8천원)

☆우송로가 추가됩니다☆

문의 :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수준은 매우 높다. 정부예산 가운데 0.3%만이 보건 의료 예산인 상환인 데다가 국민들이 '비싼 돈' 들여 내는 건강보험 혜택이란 것이 겨우 '의료비 할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이 언제나 높은 이유이다.

사회권조약 12조는 "조약 가입당사국이 누구나 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보건 의료 현실에 이 조약은 거의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여있다.

재정파탄, 건강권 유보 이유 안 돼
복지부 발표 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보험 재정 파탄 원인은 지난 해 의료 폐업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의보 수가를 인상하고 국고 보조 약속마저 깨버린 정부에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정부는 이런 노동계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건강보험 예산 충당을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간 큰 소리를 해냈다. 정부는 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저축제도' 같은 제도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또 털겠다는 거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 파탄 사태는 그런 미봉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준)는 "의료 서비스를 의사·약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행위로 바라볼 때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의보 수가 인상과 비효율적 지출로 인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대량 실업

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와 공공의료 기관 부족의 측면을 본다면 현 건강보험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한 보건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정부는 5월 말 건강보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 대책에 무엇이 담겨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부담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면, 그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일 뿐이다.

학교법인 횡포도 방치

국가가 교육 또한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간디학교'와 '상문고'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 8월 경상남도 교육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부족으로 인한 시설 미비와 인가 받지 않은 곳에서의 교육 행위"를 이유로 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해산을 명령했다. 한 술 더 떠 경상남도 교육청은 간디학교가 중학교 과정을 없애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교장과 이사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간디학교 입장에서 재정지원 중단이란 "학교 문 닫아라"는 얘기와 다름없었다. 정부가 대안교육의 실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뿌리를 뽑으려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으면서 대안교육 시행을 막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상문고등학교 문제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립 학교 재단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문고 문제는 한두 해된 일도 아니고 지난 94년 이래로 즉 진행돼온 '재단 비리'의 대표적 사건이다. 상문고 문제는 핵심은 바로 '학교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사립 학교 재단과 이를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하는 정부'에 있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국가 예산 중 6%는 교육에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투자 예산은 4.4%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공교육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학 입시'만을 위해 한 반에 40명씩 바글거리는 교실 속에서,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사립학교 재단의 횡포 속에서 정작 교육의 한 주제로 서야 할 학생들은 질식하고 있다. (심대섭)

(→ 1면에서 계속)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버마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회원들 역시 냉대를 면치 못하고 있다. 99년 결성된 NLD 한국지부에는 약 2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으며, 이들은 자체 소식지를 제작하고 버마대사관 앞 항의시위를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한국정부는 이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5월엔 NLD 한국지부 대외협력국장 사린 씨를 강제출국시키려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자 마지못해 사린 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사린 씨를 비롯한 20명의 NLD 한국지부 회원들이 난민신청서를 접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버마민주화를 위한 모임'에 따르면, 호주, 미국, 영국 등 10여 개가 넘는 NLD 해외지부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LD의 해외활동을 총괄하는 태국 NLD 본부의 대표 5명이 지난 28일 한국을 방문했다. 노동절 집회에도 참석한 이들은 국내에서 △한국정부의 버마 정권 지지반대 △버마군사정부에 대한 압력행사 △국제노동기구 제재안 이행 △한국기업의 버마 투자 중단 등을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버마노총은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과 감간·고문·자의적 체포와 장기 구금, 강제이주·비사법적 처형·종교적 박해 등 극악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창조)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굵판을 집어치워라!

80년 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음 아년 '우간다' 노동법 번역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노동법까지 참고하면서 새로 만든 노동법 조항이 바로 '제3자 개입금지'였다. 그 조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다고 하니 우간다 노동법에도 '제3자 개입금지'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어서는 안되고 행여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라고 용기를 주는 말 한 마디라도 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내용이었으니, 그 합리성은 어떤 설명으로도 인정될 수가 없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 이후 이 조항은 개폐되어야 할 악법 조항 중에서도 상위로 꼽혔고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현대그룹 소속 노동조합 대표들을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하자,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관 두경 열고 되살아난 제3자 개입금지"라고 뽑았을 정도였다.

지난 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지원신고제도로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0일 양규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94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 그 혐의사실인데, 그 재판을 몇년 동안이나 끌어오다가, '경찰 폭력'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묘한 시기에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양규현 씨는 위 사건으로 96년 2월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미 폐지된 법률이 "관두경을 열고 되살아나" 한 평범한 시민의 행복을 빼앗아갔다. 이것에 대해 어떤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가.

뿐만 아니라 법원은 지난 27일 국민·주택은행노조 파업 관련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응득 금융노조 위원장 등 이미 구속된 3명에게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를 적용,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당초 불구속 기소된 금융노조 간부 6명에게도 중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노조활동을 조직폭력배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양심의 보루라 하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노동운동을 마치 말살해야 할 불순한 행위로 취급하는 한, 개혁은 없다. 공안정국의 굵판을 이제 그만 걷어치워야 한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지면관계상 '인권이야기'와 '주간인권호름'을 오늘 실습니다)

주간인권호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1. '깍뎀기' 국가인권위**
연출 법무부·주연 민주당·주연급 조연 한나라당 국회 법사위 제1소위, 감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4.24) /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 거부'(4.25) /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 유보, 면접조사·지방사무소 설치 등은 합의(4.27) / 국회, 국가인권위법 제정-인권단체들, "깍뎀기뿐인 법,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4.30)
- 2.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정보통신윤리위, 개인인터넷사이트 실태파악 나서-막연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소지(4.23) / 민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 규정 삭제 의견서 제출(4.23) / 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 "청소년유해물 차단장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4.26)
- 3. 강철구 부위원장 이번에는 가처분소송, 다름은?**
강철구 부위원장, '강철구사건 공대위' 홈페이지로 인한 '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4.20) / KBS노조 정·부위원장 탄핵 찬성 62.4%, 66.7% 안 돼 탄핵은 부결-본사 중앙위원 16명 사임(4.20) / 민주노총, "언론노련 조사 결과를 참조한 후 신중하게 판단" 요구(4.20) / 정진성(서울대 교수) 등 여성지식인 67명, 명예훼손 기소 부당 의견 제출(4.25) / 김종업(한신대 교수) 등 남성 사회학자 24명, "성폭력 근절시키려는 공공이익 추구 노력"이라는 의견 제출(4.25)
- 4. 이무영 "사퇴 안 해!", 대통령 "그래, 순간적인 실수야"**
이무영 경찰청장, "대우폭행에 대해 유감이지만, 사퇴할 뜻이 없다"(4.24) / 김대통령, 이무영 등 경찰관 250명 청와대로 불러 노고 위로하면서 "순간적인 실수 유감" 표명(4.25) / 김대통령,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시위·쟁의는 엄단'(4.26) / 대한변협, 부평 경찰폭력은 "위법하고 자인한 살상적 행위"로 규정,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지휘선상에 있던 간부들 처벌요구(4.26)
- 5.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일제의 유물을 쓸어내자**
유엔인권위, 일본정부가 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 있다는 결의안 채택(4.24) / 정대협·김원웅 의원 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공청회(4.24) / 정대협대표단·군위안부 피해자, 일본 문부성 관리에게 "역사교과서 위안부 부분을 수정" 요구(4.26)
- 6. 아메리카, "하고 싶은 건 꼭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푸에르토리코 주지사, "비에케스 섬 사격은 소음방지법 위반행위"라고 소송(4.25) /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사격장 반대 수천명 시위·철조망 질단하기도, 미 언론도 중단 촉구(4.26-28) / 환경운동연합,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 선언 항의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4.2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4일(금)

제 18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대우자동차 폭력 진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노동자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 어안이 병병할 지경이다.

광주 하남공단 소재 캐리어주식회사(대표이사 토마스 데이비스, 아래 캐리어)에서는 지난 1일 파업중이던 사내하청 노동조합(아래 캐리어하청노동조합)의 농성장에 경찰과 경비용역 등이 이따다려 파업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구사대로 가세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폭력 진압을 당한 캐리어하청노동조합 이경석 위원장 등 9명은 경찰의 진압 봉과 경비 용역·정규직 조합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경찰에 의해 연행되자마자 곧바로 광주 하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9명 가운데 이 위원장 등 4명은 2일 오전 광주 남부경찰서로 다시 연행됐으며, 이들에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차량 내에서 쇠파이프 못매

앞서 29일에는 하청노동조합 소속 한승륙 조합원이 경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 씨는 29일 새벽 3시경 구사대에 붙들려 한 차례 폭행을 당한 데 이

어, 경찰에 인계된 후 경찰기동대 봉고차량 안에서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한 씨가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호흡관과 극도의 공포감에서 오는 발작증세를 일으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캐리어, 불법 파견근로 지속

올해 2월 노조를 결성한 캐리어 하청노동자들은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활동 보장 △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2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인정 △ 시급 2천9백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4월 20일부터 전면 파업중이었다.

캐리어는 6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동일한 작업라인에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를 뒤섞어 배치한 뒤, 정규직 직원 지휘자가 작업을 일괄적으로 지시하고 작업·특근 같은 근태 관리까지 직접 함으로써 사실상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 왔다. '도급계약'은 도급업체가 일정한 물량이나 정해진 기간동안만 생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근태 관리는 하청업체가 직접 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캐리어의 근로관계는 명백한 불법이다.

한편, 또 한차례의 폭력진압 소식에 노동계는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4월 10일 폭력진압을 손뼉만팠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급속연맹 광주전남본부는 캐리어 정규직 노동조합이 농성 진압에 가세한 것과 관련해, 급속연맹 본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심태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파업권, 단결권 침해 추궁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무로 여기는가'였다.

한국정부 대표들은 매번 강하게 "그렇다"고 답변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과 재정적인 제약, 국민의 정서, 문화적 전통, 안보상황" 등을 핑계삼아 쟁무리를 댄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 경제수준에 비해 볼 때 사회권 보장이 미흡하다 △ 95년의 1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 국가가 사회권을 의무로서 보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부, 사회권 철학 빈곤

한국정부대표단은 30일 기조연설에서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냈다. 한국정부 대표인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제기구 심의관은 "노동조합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트레이 위원(자메이카)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경쟁력을 위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이 한국정부의 철학인가"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디 위원(요르단)은 "아이엠에프와 구조조정에 대해 협의할 때 사회권 조약에 대한 의무가 직접적으로 고려되었는지"를 질문했다. 한국정부는 "사회권 조약의 권리들은 모두 헌법에 담겨 있고, IMF와의 협의 과정에서 헌법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회·경제적 권리의 침해를 조사·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난민인정 문제도 지적

난민·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중요하게 심사되었다. 우선 위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인정에 대해 우려했다. 나아가 말리베르니 위원(스위스)은 난민신청자들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자녀들의 교육권 문제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인도적 관점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체아수스 위원(투마니아)은 "아동

들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대표, 사실 왜곡도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사적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주요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위원들은 개인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 결국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이 교육과 의료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대표는 낮은 의료보험료, 과열된 교육열, 물가인상 등을 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권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 연수과정에서 지침이 제공되느냐는 질문에 정부 대표는 "그렇다"며 거짓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정부 대표들은 또 "세입자들에게 주거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지도 질문의 대상이었다.

문화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로메로 위원(에쿠아도르)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공격하게 답변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박경서 인권대사를 비롯해 노동부·여성부·법무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안은 5월 11일에 발표된다. (제네바 =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5일(토)

제 18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경찰폭력 기관차’가 질주하고 있다. ‘4월 10일 부평만행’에 가담한 의경들과 지휘자 그리고 이우영 경찰청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광주에서 경찰이 노동자를 쇠파이프로 패서 결국 정신병동으로 보냈다. 또 경찰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회현장에서 경찰 철수’라는 요지의 기사를 쓴 경찰간부를 국가공무원법위반행위로 징계할 예정이다. 지난 해 6월29일 호텔롯데 파업진압 과정에서 ‘일부 의경이 노조원을 경찰봉으로 때렸다’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내부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인권하루소식> 2000년 11월 23일자 참조).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5월 1일 광주에 있는 대우캐리어 사내 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의 사내

점거농성을 경비용역원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압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4월 25일부터 광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사내에서 상권을 살피고 있었다고 감정선 광산경찰서장이

4일 인정했듯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것이다. 전남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이를 두고 ‘실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앞서 4월29일 경찰은 한 노동자를 형사기동대 차안에서 폭행, 결국 정신병동으로 ‘보냈다’. 대우캐리어 경비용역원에게 붙잡혀 형사기동대에 인계된 한승룡(34) 씨는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헬멧을 씌워 놓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등을 군화발로 짓이켰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면에 계속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망명중인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이 한국을 찾아왔다. 이들이 전하는 자국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3천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고, 군사정권의 폭두각시인 사법부는 심리조차 없이 중형을 선고한다. 민중들에겐 전화나 팩스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강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숨조차 쉬기 힘든 군사정권의 폭압에 못 이겨 국경지대를 떠도는 난민의 숫자만도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나라 전체가 ‘감옥’이자 ‘산 지옥’이다.

한국을 찾아온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이런 참상을 알리면서, 버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정부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양국은 일제 식민지배와 군사독재의 아픔을 공통적으로 겪었기에, 그들이 한국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해 왔다.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대개 정치적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난민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인도 정부조차 버마인 50명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난민인정은 커녕, 오히려 ‘불법체류’ 낙인을 찍어 그들을 쫓아내려 한 게 우리정부 아니었던가? 난민조약 가입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버마의 참상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마저도 거스르고 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가 버마의 강제노역을 보다 못해 ‘제재’를 결정했지만, 한국의 버마 투자는 보란 듯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활동가는 ‘버마에 진출한 한국자본은 오로지 군사정권에겐만 이익을 가져다 줄 뿐, 버마 민중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결국 정부는 경제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위선적 인권 외교’의 실상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 것이다.

참혹한 군사정권 시절을 경험했던 우리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버마 민중과 국제사회의 호소에 화답해야 한다.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리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사랑방이 추천하는 어린이 선물

1.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1·2> 유네스코와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가 전세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제작한 애니메이션(2만원)
2. 『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쓰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엮어낸 책(8천원)

☆우송료가 추가됩니다☆
문의 :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한달 임금 21만원, 하루 12시간·주 72시간 노동, 최초 3개월 임금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미지급, 결근·지각·조퇴 시 임금삭감...’

세월전기공업주식회사(아래 세월전기)가 필리핀 연수생들과 체결한 계약 조건의 일부다. 이는 ‘국내노동자들보다 임금이 싸고 통제가 용이하다’는 세월전기의 이해와 ‘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

불법을 양산하는 사회

그러나 이 계약은 애초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전기 연수생들은 지난 3월 12일 임금 3만원 인상 등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했다. 그리고 무조건 업무에 복귀하라는 세월전기의 명령에 불복하여, 15일부터는 서울 해화동 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세월전기는 3월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리핀 연수생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어 오늘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세월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6만7천여 국내 이주노동자 중 65%는 이미 불법체류자이며, 30%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일하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인권의 실종, 구조적 악순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지난 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산업연수생들은 △의출금지 등 인신구금 △구타 및 언어·성폭행 등에 노출

돼 있고, △신분증 압류 △송출비리 △강제적립금 등 이중·삼중의 관리체계에 속박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다 불법체류를 택하면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단속과 강제추방에 불안해하며 ‘불법취업’한다.

산업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25만명에 육박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장시간노동을 기본으로 하여, 산재보험·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결혼과 교육에서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노동조건--기본적 의식주의 불안정--가정생활과 여가생활의 불가능--사회생활에서의 절망’으로 구조화되어,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사회권조약 제2차 반박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한국에 많은 이주노동력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서 시리즈 중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에서, 저자 설동훈 씨는 “단기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가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를 단기적 생산요소로만 여기지 말” 것을 제안한다.

난민 불인정은 사회적 사형선고

자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도 생존의 벼랑 끝에 허덕이고 있기는 마찬가지. 한국정부는 92년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과 의정서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디오피아인 타다세 대구(26) 씨가 유일하다. 난민지위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104명.

지난해 한국정부에 난민신청 신청서를 제출했던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소속 회원 19명. 한국정부는 아직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NLD 외교담당관 도당 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전세계 NLD 지부 중 한국지부만이 유일하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웅산 수지와 친분이 있는) 김대중 정부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영원·범용]

(=> 1면에서 계속) “성명불상의 자”(하리리포터 조상영 씨로 밝혀짐)가 경찰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에 동승한 마당에 어떻게 쇠파이프로 때리겠느냐”고 잡아챘다. 그러나 곧 조 씨는 동승한 것이 아니라 취재 중 경찰에 붙들려 기동대 차량안에 있다가 새벽 4시 경에 풀려난 사실이 밝혀졌다. 한 씨는 새벽 4시부터 형사기동대 차량이 광산경찰서에 도착한 새벽 5시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경찰은 또 기동대 차량에 쇠파이프가 없었다며 “한 씨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다 4일 급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부 박병석 본부장과 만나서는 “노조원에게 회수한 쇠파이프 23개가 차안에 있었다”면서도 “때리지는 않았다”고 우겼다.

대통령이 “순간적인 실수”라고 경찰폭력을 옹호하고, 경찰이 폭력배와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전혀 처벌되지 않는 것은 경찰의 ‘강패’ 짓을 묵인, 방조하는 것과 같다. 부평에서 폭력에 가담한 일선경찰관들마저 처벌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쓴 경찰관을 징계하려는 것은 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있는 경찰조직에 ‘무조건 패라’고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보선]

<바로 잡습니다>

5월 4일자 1면 <제2의 부평사태> 경약) 기사의 캐리어 하청노동자들이 내건 요구사항 중 ‘시급 2천 9백원 인상’을 ‘시급 2천9백원으로 인상’으로 바로 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위해 사회단체들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7일 11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아태전공련)과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위원장 최갑수, 아태 교수노조)이 중심이 되고, 민주노총, 민변 등 제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아태 공대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하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사회개혁 △전공련·교수노조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90만 공무원이 '단순한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노동자'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관계부처 장관 면담, 90만 공무원서명운동,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제는 인정할 때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대위 결성 이유를 "노동계·법조계 등 사회단체의 광범한 참여로, 공무원들이 노

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차장은 이어 "98년 노사정위 합의사항으로 통해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인정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전단계로 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시행했고, 올해로 2년을 맞는다"며 98년 노사정위 합의정신에 따른 것을 요구했다.

정부, 공무원노조 불허방침 고수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박춘길 씨는 미리 정리된 정부의 입장을 팩스로 보내면서, '노조가 보수인상 등 권익만을 주장하고 일반 국민들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정서, 경제사정과 노사문화, 안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무원노조에 대해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연구·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도 노조 도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정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포럼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

- 때: 5월 12일(토) 오후 3시 / 장소: 기독교 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 사회: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 발제: 이광길(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 토론: 자유토론
- 내용: 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설명 / 3대 독소조항의 문제점 / 분야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 문의: 배경내(3675-5363)

2001년 5월 8일(화)

제 1848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부는 얼마 전 전공련 관계자에게 출두를 요청했고, 교육부를 통해 교수노조 관련자의 단속을 하달했기 때문. 공무원노조는 안 된다는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치노조도 합법화 투쟁 계속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박영배)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을 근거로, 지난 99년 9월 12일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조 2항에는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부는 아직까지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것. 자치노조는 △공무원 구조조정 저지 △노조합법화를 요구하며 지난 4일 상경투쟁을 전개했고, 7일부터는 전국 25개 지부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범용)

보안과 형사, '시민참관단' 위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는 7일 "지난 1일 세계노동절 111주년 전북노동자대회를 경찰이 사찰했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노동절 집회를 사찰한 사람은 전주중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박태순(38) 경장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민참관단" 완장을 찬 박 경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또 "이런 행위는 평소 집회를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생각보다 '금지하고 막아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보선)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새벽부터 잔뜩 찌푸려 있던 하늘에서 점심나절 비가 내린다. 어린이집 봄소풍을 가는 날이라고 아내가 새벽잠 설치 가며 아들 놈 도시락 준비를 하는데 아들녀석은 연신 비가 오면 안 된다고 걱정이 태산같다. 비가 와서 한번 연기한 일이라 그런지 내가 거들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절대로 비는 오지 않는다.'는 말까지 건네면서도 내심 비가 오길 바랐다.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타는 대지를 충분히 적시고, 답답한 내마음까지 씻어줄 만큼 비가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봄기쁨에 마음이 타 들어간 농부님들이 흡족하고 시원스럽게 좀 많은 봄비가 왔으면 좋으련만 말 그대로 보슬보슬 보슬비만 내린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오월은 꿈을 심던 달이었다. 윤석중 님의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란 노랫말은 아직껏 나를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사춘기 때 오월은 늘 설레는 마음으로 찬만했던 것 같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쓰리고 아픈 마음을 경험하던 시기였다. 대학시절 오월은 광주의 핏빛 하늘에 가위 눌러 뚫어 리치며 질구하고 분노하던 기억이 새롭다. 희망과 좌절을 함께 맛볼 수 있었던 시기였다. 가정을 꾸린 이후 오월은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을 치르느라 정신없이 바쁜 기억들로 채워져 있다.

21세기 첫 오월에 나는 어떤 기억을 추억으로 갖게 될까?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거리가 희망을 담고 기억된다면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3년여의 논란 끝에 빈껍데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울산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쟁점요구사항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NMD / TMD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부시 미국대통령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공식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신냉전을 불러일으켜 다시금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등장할 것을 우려한 세계의 민중들이 들고일어나자. 패권주의 미국은 계획을 철회하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DJ정권의 경찰에 의해 부평 대우차 노조원들과 이어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동조합원들이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의 저항으로 경찰청장 및 폭력에 가담한 경찰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포기를 선언하였다."

기대와 바람이 많으니 할 일이 참 많다.

(최민식 :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주간인권호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1. 시청앞 광장을 '점령'한 노동자

노동절에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캐리어' 민주노총 노동절 시위 시청앞 광장까지, 6월 12일 연대 파업 등 총력투쟁(5.1)/ 경찰, 전북 노동절 집회장에 시민참관단 위장 참관(5.1)/ 북한에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민주노총·한국노총도 참가(5.1)/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 농성, 경비용역원과 정규직 노조가 폭력을 동원 해산, 경찰 방조 의혹(5.1)/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원 등 4명 구속(5.3)

2. 경찰·행정부·서울시 3각편대, '노동자는 범법자'

서울경찰청, 노동절 때 '시청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 한 것은 명백한 불법'(5.2)/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집회현장에서 경찰 철수 주장한 기사 경찰행위는 북무규정 위반'(5.3)/ 서울시,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서울 노동절 집회 교통혼잡 비용은 3억원'(5.6)

3. 이상수·후안무치, 한나라당-반성부터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투쟁의 결실"(5.1)/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 "국가인권위법 놓고 인권단체들이 표정관리한다"고 도발(5.3)/ 한나라당, "인권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제정" 주장(5.3)/ 인권기구 공대위, "한나라당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기 이전에 줄속처리, 밀실야합부터 반성해야"(5.4)/ 남규선 민가협 총무, "여야 모두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반박(5.5)

4. 발을 내딛은 공무원 단결권 쟁취

공무원 자치노조, 공무원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3권 쟁취 투쟁결의 대회(5.5)/ 경기도 노조 고양시청 분회 한 조합원 강제연행, 영장 실질심사 기각(5.7)/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 출범(5.7)

5. '테미콘'에는 법이 통하지 않는다

유진레미콘 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 집 앞에서 용역 광파에 폭행 당해(5.2)/ 유진레미콘 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 구속, 같은 건의 회사간부는 기각(5.5)/ 전국건설운동노조, "경찰이 테러사실 은폐 위해 폭행당한 노동자 구속했다"(5.7)

● 해외소식

부시 미 대통령, 국가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발표(5.1)/ <아사히신문> 면적여론조사, 일본국민 74%가 '전쟁포기' 헌법 9조 개정 반대(5.2)/ 재독동포 1천여명,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극우파 폭력행위 반대 시위(5.5)

● 기타소식

복송 장기수 리종환 선생 사망(4.30)/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가치 85만 6천원~102만 6천원(한국여성개발원)/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회원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5.2)/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 해직인론인·구로구형 투표함 관련자 등 102명 민주화운동관련 인정(5.2)/ 관계당국, "총력계 동포 국내 대합 입학은 장기체류 관리어려워 어렵다"(5.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9일(수)

제 18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을 검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정통부는 지난 4일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정통부는 지난 4월에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내용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이 사실상의 검열행위라고 비난받자 위와 같은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 해 7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검열우려가 있다며 뺀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령을 통해 끈질기게 부활할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진보넷 장영경 정책실장은 "시행령 예고안에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뺀 것은 스스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이어 "새로 예고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장관고시에 따른다고 붙여 자의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의 폐이지부에 등급을 표시, 접속을 차단하게 하는 것도 '전자적 표시'의 일종.

진보넷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9일 성명에서 새로 예고한 시행령의 '전자적 표시' 및 '장관의 고시'가 포함된 조항삭제를 요구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시행령안에서 '전자적 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는 무관하게 음란·퇴폐 등의 영역별 등급을 표시하

는 것"이며 "국회가 반대했던 검열"이라고 강조했다.

(5.5 인권영화제 이슈포커스) 팔-이스라엘 분쟁에 관한 성찰

고난의 역사와 제앙의 진원을 밝히는 영화 11편

48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국가'를 건설한다. 2천년 동안 전세계를 유랑하던 유대민족에게는 치욕의 역사를 속죄하는 감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또다른 주인 아랍민족에게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미 영국의 식민통치로 인해 착취와 굶주림에 시달려온 그들을 더욱 더 혹독한 시련으로 내모는 제앙의 진원이 되었다.

5.5 인권영화제는 이슈포커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에 관한 성찰'이라는 특별섹션으로 21세기에 또다시 총성과 진혼의 행렬이 그치지 않는 팔레스타인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반세기 이상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중의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민족들의 고난의 역사와 제앙의 진원을 밝혀보는 것이 인권영화제 의도이다. 이 곳 민중들의 인권이 반세기가 넘도록 난민촌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의롭고 용기있는 작품을 선별하려 애썼다.

인권영화제는 모두 11편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영화인 그리고 외부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다. 82년에 제작된 것부터 올해 작품까지 선별했다. 개막작 <세 개의 보석이야기>는 97년 상영된 <갈릴리에서의 결혼>의 감독 미셸 클레이피의 최근작이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화작가로 아랍민족들이 겪고 있는 풍상을 아이들의 우화를 통해 이야기한다. <귀환없는 평화?>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작품. 정착촌을 지키는 이스라엘 군인의 총격에 맞서 돌팔매로 응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영화에서 정치적 흥정에 밀려난 아랍민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인티파다(저항운동)가 지속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스라엘인의 눈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귀기울여 보고 싶다면 <기억의 노예> <119년의 총성+3> <군인일기>를 놓치지 마시길. 앞의 두 작품은 시오니즘이 극단주의로 변이되는 과정을 소름끼치게 느끼게 해주며 <군인일기>에선 이스라엘 정착민의 사병으로 전락한 군인들의 '양심선인'을 들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영화작가 아모스 기타이의 <필드 다이어리> 또한 권하고 싶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오가며 이스라엘의 폭력과 불관용을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그의 작품 중 수작에 손꼽힌다. 작품은 카메라의 진보적 역할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만든다. (김정아)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이어 "실사 인터넷 차단에 대한 일정수요가 있다"라고 정통부 장관과 정보통신 윤리위가 '차단'의 추진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을 (→ 3면에 계속)

<기고> 중동분쟁 : 도전 받는 '평화의 길' -엄한진 (정치학박사, 북아프리카 전공)

팔레스타인 문제의 역사적 뿌리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시작된다. 동일한 언어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민족국가 체제 형성과정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던 유럽, 특히 동·중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거나 이주하게 되었다.

유대인은 당시 만들어진 민족차별의 대표적 희생양으로서 유럽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정치적 울타리를 형성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집단이민이라는 해결책을 찾게 된다. 나치문제가 그렇듯이 유럽에서 파생되었지만 유럽에서 해결되지 못한 유대인 문제가 영국·프랑스의 아랍세계 지배전략과 맞물려 그들의 먼 조상의 땅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전된 것은 단지 박해받던 사람들만이 아니다. 그들이 겪었던 반유대주의는 또 다른 인종적 배타주의로 이어지고, 그들의 고립된 삶의 경험은 아랍인들과의 공존의 가능성에 눈을 감게 하였다.

동구출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의 점령하자 조상대대로 이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은 추방됐다. 더불어 아랍 각지에서 아랍어와 아랍문화 속에 살던 아랍-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야 했다. 48년 이스라엘 국가 창설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요르단 통치하의 요단강 서안, 동 예루살렘,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점령한 67년 6월 전쟁까지 이스라엘 팽창주의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 국제법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서구의 절대적 지지는 무엇보다도 나치학살로 절정을 이룬 유럽인들의 유대인 박해에 대한 속죄로 설명될 수도 있다. 유럽인의 죄의식에 기대 역사의 사생아가 된 이스라엘 민족주의는 중동에 포아리를 튼 것이다.

6일 전쟁은 아랍세계의 대 이스라엘 저항능력의 한계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후 아랍 민족주의의 쇠퇴와 미국의 이 지역 보루인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다른 한편 이 전쟁은 그간 유대인 문제에 가려져 있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카우보이로, 토착 아랍인들을 인디언으로 여기던 서양인들에겐 팔레스타인인들도 인디언들처럼 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생각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이 사다트의 역사적인 예루살렘 방문(77년)이 계기가 된 캠프 데이비드 조약(78년)의 중심축이 된다.

70년대 이후 석유를 매개로 한 아랍세계의 친 서방화 경향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진전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 대립구도를 이스라엘-아랍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영국보호령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이스라엘 성립 후 팔레스타인 외부에서 전개되었다. 사실 수백

고난의 역사와 제앙의 진원은 어디인가?

개의 마을방화 및 학살을 모면해 이스라엘에 남을 수 있었던 소수의 아랍인들은 저항을 조직하기에는 너무 극한적인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었다. 현재 팔레스타인인들 대부분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나 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예리코 난민촌에서 생활한다. 이들의 생활조건은, 경제상태가 피폐한 이웃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피난민의 어려움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가자 지구에 사는 4천명의 정착 유대인들보다 8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용하는 물의 총량이 더 적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중 50만 명이 피난민이고 20만 명이 집단난민촌에 살고 있다.

5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있던 레바논에서 아랍지식인들의 연대로 형성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은 70년대 이후 PLO(64년 창설)를 중심으로 1970년대 민족주의에 뒤이어 아랍세계의 주도적 정치세력이 된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일으켰으나 이스라엘이 아닌 레바논 분열의 원인이 된다. 즉 PLO의 레바논 남부거점을 공격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82~88)은 이 지역에서 드물게 종교적 다원주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던 레바논에 종교집단간의 분쟁의 씨앗을 심게 된 것이다.

70년대 팔레스타인 영토의 5%를 차지하는 가자와 예리코의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의 과도기적 자치를 약속한 오슬로 조약을 통해 PLO는 화려하게 국제무대 등장했다. 이는 또한 90년대에 정착되고 있는 중동의 새로운 지역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냉전종식, 걸프전 그리고 PLO의 현실주의 노선 채택으로 이뤄진 오슬로 조약은 중동평화의 길을 여는 결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세세히 언급한 오슬로 조약은, 이제 평화 협상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진전과정이 아니라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 조약이다. 아랍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기대하게 됐고, PLO 역시 이 전망을 공유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전 영토에 대한 군사주권 행사를 용인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온전한 국가로서, 중동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이런 방식의 '평화'는 부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그러나 오슬로 조약에 뒤따른 아랍·서방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동대응은 완전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고집하는 세력과 새로운 지역질서가 초래하는 갈등의 분출을 억누르면서 이루어질 평화라는 것이다. 걸프전 이후 미국·이스라엘이 주도하고 관련국들과 세계여론의 지지로 전개되고 있는 평화협상의 (→ 3면에 계속)

5.5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

(★는 이슈포커스 ◆는 다시 보는 명작선 ● 영화명 ●는 감독과의 대화)

5월 18일 (금요일)

- 11:00-12:45 ★평화의 가장자리에서 (103분)
- 13:00-14:05 ★귀환 없는 평화? (61분)
- 14:10-15:35 ★필드 다이어리 (83분)
- 15:40-15:55 ★록, 종이, 미사일 (16분)
- 16:00-16:50 ★나지 알 알리 (52분)
- 17:00-17:50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47분)
- 18:00-19:00 ★119발의 총성+3 (60분)
- 19:10-20:00 개막식
- 20:00-21:50 ★세 개의 보석 이야기 (106분)
- 22:00-22:50 ★군인일기 (47분)

5월 19일 (토요일)

- 11:00-12:40 ★기억의 노예 (97분)
- 12:50-13:50 ★119발의 총성+3 (60분)
- 14:00-15:50 ★세 개의 보석이야기 (106분)
- 16:00-17:00 ●애니모음 (54분)
- 17:10-18:10 ●팬지와 담쟁이 (60분) ●
- 18:10-18:30 ●팬지와 담쟁이●(감독과의 대화)
- 18:40-20:15 ●에르네스토 체게바라-볼리비아 일기 (94분)
- 20:30-22:05 ◆대지의 소금 (94분)
- 22:10-23:00 ◆처벌에 맞춘 범죄 (47분)

(→ '인터넷 검열'에서 계속)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다.

한편 정동부는 정보통신망법 41조에 규정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개발및보급' 조항을 확대해석, PC방에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 방침을 밝혔고, 정보통신위원회가 '국가표준'으로 배포하고 있는 인터넷 차단 목록 11만 8천 건을 각 업체에 무료배포하고 있다. 이미 사실상 국가가 앞장서서 '통신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중'이다. (심보선)

(<도전받는 '평화의 길'에서 계속)

논리에서 볼 때, 현실에서의 긴장관계 지속은 평화정착과 함께 사라질 역사의 잔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가의 미래의 수도가 들어설 요단강 서안과 아랍인 지구에서의 토지불수, 유대인 정착촌의 확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통제, 고립이 가져오는 생활여건의 악화, 팔레스타인 노동력을 아시아·동구노동자들로 대체하는 이스라엘의 고용정책 등도 긴장의 현실과 낙관적 평화협상간의 모순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슬로 조약 실행의 지지부진과 최근 분쟁의 격화는 현재 진행중인 방식인 '평화의 길'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5월 20일 (일요일)

- 11:00-12:25 ★필드 다이어리 (83분)
- 12:30-13:20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47분)
- 13:30-14:25 ★나지 알 알리 (52분)
- 14:30-15:30 ●옛날이야기 (60분) ●
- 15:40-16:00 ●기억 (14분) ●
- 16:00-16:30 ●옛날이야기, 기억●(감독과의대화)
- 16:40-18:20 ◆철레전투 1 (96분)
- 18:30-20:00 ◆철레전투 2 (88분)
- 20:10-21:30 ◆철레전투 3 (78분)
- 21:40-22:40 ◆철레 지을 수 없는 기억 (58분)

5월 21일 (월요일)

- 11:00-12:05 ★귀환 없는 평화? (61분)
- 12:10-13:15 ★정착민들 (62분)
- 13:20-15:45 ◆쇼아1 (145분)
- 16:00-18:00 ◆쇼아2 (120분)
- 18:10-20:30 ◆쇼아3 (139분)
- 20:40-23:10 ◆쇼아4 (146분)

5월 22일 (화요일)

- 11:00-12:00 ◆유령을 부르며 (60분)
- 12:10-13:25 ◆전투시대 (75분)
- 13:30-15:10 ◆날 놓아 줘 (96분)
- 15:20-16:45 ◆스코츠보로: 미국의 비극 (84분)
- 16:50-19:30 ◆레지스탕스 (156분)
- 19:40-21:10 ◆하비밀크의 시대 (87분)
- 21:10-23:05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115분)

5월 23일 (수요일)

- 11:00-12:40 ◆미국의 꿈 (100분)
- 12:50-13:50 ◆배신의 시간 속에서 (60분)
- 14:00-15:35 ◆시가라카에서 불어 오는 바람 (91분)
- 15:40-16:40 ◆모락 담판 나의 이름 (60분)
- 16:40-19:55 ◆열대야 (195분)
- 20:00-22:00 ◆인간의 시간 (116분)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포럼

"국가인권위원회법-어떻게 볼 것인가?"

- 때: 5월 12일 (토) 오후 3시
- 장소: 기독교 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
- 사회: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 발제: 이광길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 내용: 4.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설명/ 3대 독소조항의 문제점/ 분야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 문의: 배경내 (3675-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10일(목)

제 18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만약 귀사에 손해를 끼쳐 변상 명령이 있을 시에는, 재판 절차 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제반급여금(퇴직금 포함)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즉시로 변상하겠음." '고용'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강요돼 왔던 서약서의 일부 내용이다. 사고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판단여부는 애초부터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간 타워노동자들은 이처럼 상식 이하의 근로계약 아래 '착취'를 당해왔다. 타워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이것만이 아니다. 타워노동자들은 월 280시간을 반드시 일해야 한다. 한달 30일 가운데 단 이틀을 빼곤, 매일 10시간씩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조차도 '현장사정에 의해 연장근무 가능' 혹은 '현장과 협의 후' 등의 단서가 붙는다. 그래서 실제로 타워노동자들은 월 평균 17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며, 한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위원장 채수봉, 아래 타워노조) 이기석 선전부장은 "일요일에 쉬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한달에 280시간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타워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이 터무니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현행법률에도 엄연히 위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이며, 근로시간의 연장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월 224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다.

목숨까지 담보로

회사측에선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마저도 안중에 없었다. 타워크레인에는 작동가능한 중량이 초과될 때 자동적으로 기계를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작업

량을 늘리기 위해 안전장치의 해체를 강요해 왔던 것.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위험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워노동자들의 처지다. 더구나 회사는 산재보험조차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타워노동자들은 △일요일 휴무 △일급제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파업에 돌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타워크레인협회(이사장 신현태) 등 사용자측은 아직까지 진지한 협상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타워노조는 광주·대구·대전·부산에서 95% 이상, 서울에서 50~60% 정도의 파업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범용)

'평화의 적'과 손잡지 말라

'MD 강요' 사절 방한...사회단체들, 거센 규탄행동

"죽음의 사절!"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설명을 위해 방한한 미 국무부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을 국내 사회단체들은 이렇게 불렀다. 범민련남측본부·환경운동연합·소과개정국민행동 등 각계 사회단체들은 9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은 한국정부에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깨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에 동의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미사일을 지원하는 기지가 세워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미티지 부장관이 입국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NMD·T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평화실현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사일방어체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조속히 남북 간 상호불가침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아미티지 부장관의 방한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려 했으나 긴급 출동한 경찰 병력에 막혀 집회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오후 들어서도 아미티지 방문을 규탄하는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오후 4시 서울 종로공원에는 4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열렸고, 이후 평화실현공대위 문정현 공동대표 등이 아미티지의 숙소인 서울 하얏트호텔로 옮겨가 다시 시위를 벌였다. 하얏트호텔 앞에서의 시위는 10일 오전 9시까지 밤새도록 진행된다. 또 10일 아침 8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고, 낮 12시부터 '미 대사관 에워싸기 시위'가 준비되는 등 미사일방어체제를 규탄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행동은 줄을 잇게 된다. (심대섭)

5.5 인권영화제 「이슈포커스」 작품 소개

세 개의 보석이야기 Tale of the Three Jewels/개막작

1995/ 106분/ 미셸 클레이피/ 극영화/ 컬러/ 팔레스타인&프랑스

가자 지역 난민촌에 사는 12살 소년 유세프는 우연히 만난 집시소녀 아이 다를 사랑하게 된다. 아이의 신비스러운 분위기에 끌린 그는 어른이 되면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 맹세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그녀의 할머니가 잃어버린 3개의 보석을 찾아오는 것. 유세프의 아버지는 인터파타(저항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옥살이를 하고 있고 그의 형은 무장운동으로 쫓겨다니는 신세다. 영화의 배경이 되던 때는 이스라엘의 미친 총질이 난무하고 있는 헤브론 학살 당시. 분쟁의 아수라 속에서 유세프의 꿈은 좌절과 대치하기 마련이다.

이미 <갈릴리에서의 결혼>으로 팔레스타인의 고난을 인권영화제에 소개한 바 있는 이 지역 출신의 감독 미셸 클레이피의 최근작이다. 총알과 돌팔매가 교전하고 있는 가자 지역에서 촬영된 첫 번째 장편 극영화.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 2

PALESTINE: Story of a Land 2
1993/ 60분/ 시몬느 비통/ 다큐멘터리/ 컬러·흑백/ 프랑스

수년의 땅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뉴스릴과 기록화면을 통해 서술한 다큐. 모두 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작품은 50년에서 91년까지를 말하는 2부다. 48년 이스라엘 건국이후부터 팔레스타인 정치사에 몰아닥친 광풍을 차분히 짚어보고 있다. 특히 아라파트를 비롯해 나세르, 라빈, 샤타트 등 중동 지역의 정치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팔레스타인의 분쟁과 평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 흥미롭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닌 팔레스타인 중심의 역사라는 점.

119발의 총성 + 3 119 Bullets +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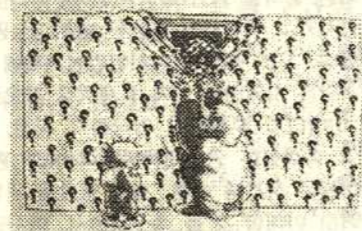
1995/ 60분/ 예우드 레바논&아미트 고렌/ 다큐멘터리/ 컬러/ 이스라엘

1994년 이스라엘 극단주의 집단 Kach(카흐)의 일원인 골드슈타인은 기도하고 있는 아랍인 등뒤로 119발의 총알을 퍼붓는다. 바로 헤브론 학살. 이듬해 11월 평화협정의 이스라엘 쪽 담당자였던 라빈은 암살범이 쏜 3발의 총에 맞아 숨진다. 이스라엘의 극단주의가 지저른 대표적인 범죄들이다.

예우드 감독은 이미 그의 초기작 <하니 커넥션>을 통해 극단주의를 예언한 적이 있다. 감독은 헤브론 학살 직후부터 '예언의 실천자'들의 실체를 집요하게 파헤쳐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다. 피를 부르는 광인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동시대 이스라엘인의 고민과 좌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깨우쳐 준다.

나지 알 알리 Naji Al-Ali, an artist with an vision

1999/ 52분/ 카심 아비드/ 다큐멘터리/ 컬러/ 영국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 30년 동안 나는 항상 감옥에 갇힌 아랍인들을 생각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림을 그린다." 난민촌 출신의 나지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적 카툰작가이자 언론인이며 출판인이다. 수천 장의 카툰을 그린 그는 레바논을 근거로 활동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PLO 정치 엘리트들에게도 '촌철살인'의 필봉을 휘두른

그는 1987년 6월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영화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심증을 뛰어넘어 표현한 나지를 동료와 가족을 통해 회고한다. 물론 그의 뛰어난 카툰을 감상하는 재미도 녹아있다.

귀환 없는 평화?

Peace with no Return?

1995/ 61분/ 엘 사반/ 다큐멘터리/ 컬러/ 팔레스타인&프랑스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은 살던 땅에서 내몰린 사람들의 귀환 문제. 예루살렘, 가자와 요르단 서안에서 쫓겨난 수백만의 난민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유혈투쟁에 마침표를 찍는 유일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1백년도 넘는 땅문서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 사람들은 이 곳에 새 집 짓고 살게 된다면 지라도 '귀환없이'는 자자손손 '난민'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절규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영화.

정착민들 Settlers

2000/ 62분/ 손 맥켈리스터/ 다큐멘터리/ 컬러/ 영국

예루살렘의 회교도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알리는 6일 전쟁 때 투옥되어 17년 동안 옥살이한 경험이 있는 한 때는 테러리스트였다. 그는 현재 예루살렘 여행가이드이다. 82년 미국에서 돌아와 이 곳의 '정착민'이 된 도브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아들'. 영화는 이 둘의 삶을 번갈아 보여준다. 동시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점령자와 피점령자의 삶은 장조의 선율과 단조의 그것처럼 대조적이다. 억압의 상하관계에 놓여있는 두 사람의 속내, 그것은 일상의 속살을 드러낼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난다.

5.5 인권영화제 - 한국 작품 소개

꿈지와 담쟁이

2000/ 60분/ 계운경/ 컬러/ 다큐

수정(36)·윤정(27) 자매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다. 그 꿈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사랑의 자유. 사랑할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 주고자 하는 지극히 소박한 꿈. 그러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실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꿈이 되어 버렸다.

어머니는 장애인인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 육남매 중 장애를 안고 태어난 두 자매는 다른 자매들처럼 질투하고 싸우면서도 붙어 다닌다.

신체적 장애로 뚜렷한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한 자매. 그런데 수정 언니에게 애인이 생겼다. 하지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지 않는 남자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다. 옆에서 지켜보는 윤정은 질투 반 안타까움 반이다. 적극적인 동

생 덕분에 성교육을 받고, 산부인과에 다니며 진찰을 받는 수정.

꿈을 이루기 위한 두 자매의 일상에 초점을 맞춘 카메라는 실현되기 힘든 희망도 희망이라 말한다. 차가운 현실과 꿈 사이를 나누는 투명한 막처럼 터질 듯 아슬아슬하기만 하지만.

세상 앞에 당차게 나서고 낙천적으로 관조하는 두 자매의 강한 매력을 다큐멘터리를 더욱 힘있게 만든다.

옛날이야기

2001/ 60분/ 박승우/ 컬러/ 다큐

1950년 8월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군과 미군의 방어선이 낙동강까지 밀린 가운데, 미군의 작전 지역이었던 경상남도 일대에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움직이는 모든 민간인은 적으로 간주하라'는 작전 명령이 떨어지자 미군

은 중소도시 가옥 밀집 지역은 물론 한적한 농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한다.

전쟁이 끝난 뒤엔 정부의 사찰, 연좌죄 적용 등 혹독한 사상단압이 이어졌다. 두려움에 숨죽여 살았던 50년의 세월. 카메라 렌즈는 피해자의 증언과 상처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지난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폭탄에 맞아 뒤틀린 기둥과 무너져 내린 폐가들. 주민들의 팔 다리에 깊게 패인 총탄과 파편의 상처, 육신의 상처보다 더 깊은 고통은 죽은 아들과 남편, 아내와 누이, 어머니의 피맺힌 기억.....영화는 말할 수 없어 더욱 사무친 절망과 고통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주민들은 2000년 1월. 정확히 50년이 지나서야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의령, 창녕, 마산, 사천 지역의 양민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전쟁 중 미국에 의한 양민학살 경상남도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5월 서울 상경투쟁으로 이어진 유가족과 경남 대책위의 절박함은 역사의 소름으로 전이된다.

2면에 이어, 「이슈포커스」 작품 소개

기억의 노예 Izkor, Slaves of Memory

1997/ 97분/ 엘 사반/ 다큐멘터리/ 컬러/ 이스라엘&프랑스

이스라엘의 학교에선 유절된 한 달 전부터 기념행사를 준비한다. 구약시대 이집트에서 겪은 식민지 종살이부터 2차 대전 나치학살에 대한 기억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재난과 학살에 대한 반복 교육이 병행된다. Izkor는 히브리어로 '기억'을 말한다. 영화는 기억의 반복을 통해 강요되는 시오니즘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 내면에 드리워진 획일적 이데올로기의 전과과정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사회의 불관용, 궁극적으로 그것이 몰고 온 '폭력'을 말하고 있다.

필드 다이어리 Field Diary

1982/ 83분/ 아모스 기타이/ 다큐멘터리/ 컬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작가 아모스 기타이의 82년 작. 이미 칸느 등 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그는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통렬히 비판하기로 유명하다. 82년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은 가자, 요르단 서안 등으로 활발히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점령지엔 '정착민'들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아랍사람들과 집을 쓸어버린다. 돌팔매질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항의 전부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건 이스라엘 군인들의 무력 진압과 거만한 정착민들의 횡포. 기타이의 카메라는 가자와 요르단, 레바논을 돌며 점령자의 횡포를 따가운 시선으로 응시하면서 쫓겨난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다.

기억

2000/ 14분/ 이맹유/ 컬러/ 극영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김필국. 그는 27년간의 복역 중, 전향을 강요받으며 담했던 잔혹한 고문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 고통과 절망은 죽음을 경험하는 공포에 가깝다. 삶의 희망인 자식과 아내, 그리고 통일엔 그 절망에서 살아 있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다. 결국 님이 나간 듯 전향서를 쓰고 만 김씨는 비전향을 고집하며 신임을 토해내는 동지의 울음소리에 머리를 파묻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계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국 현재의 삶마저도 포기하도록 유도한다.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잊고 현재를 극복하려는 것일까? '강제적 전향이란 얼마나 반인간적인가'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는 대답한 단편영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11일(금)

제 18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노동자들끼리 연대하지 마라”

대우캐리어, 파업지지 정규직 노동자 징계위원회

지난 5월 1일 용역강제 등 구사대의 대우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 아래 캐리어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폭력진압 후 회사가 8일부터 대체인력 50여명을 투입해 또 다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캐리어하청 노조원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60여명이 회사 정문 앞에 모여 대체인력을 비난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5월 1일 사태에 대해서도 △구속자 석방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및 구속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또 △노조 활동보장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2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인정 △2천9백원으로 시급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캐리어하청 노조가 이처럼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가운데 대우캐리

어 측은 이번 파업을 지지한 정규직 노조원 8명을 지난 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대우캐리어 측은 캐리어 하청노조 파업을 지원한 김대희(31) 씨 등 8명에 대해 “하청노조의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지원했다”는 이유. 이들에 대한 징계위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정규직 노동자들은 ‘캐리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정규직 노동자들도 연대하자’는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투쟁기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김영원]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울림」

인권영화제에서 뉴스레터를 만들어 배포중이다. 지난 9일 4호를 발행한 뉴스레터의 이름은 「울림」. 「울림」은 이진영, 이해리, 장규순 씨 등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이 편집·제작해 전자우편을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다.

‘5.5 인권영화제’가 끝날 때까지는 1주에 1회 발행하며, 영화제 이후에는 격주로 발행할 예정이다.

1호부터 4호까지 발행된 「울림」은 △영화제사무국 소식 △독립영화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영화제를 소개하는 ‘미지의 영화제를 찾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영화제, 뉴욕 인권영화제, 마가렛 미드 필름&비디오 페스티벌, 암스테르담 엠네스티영화제를 소개했다. 또 ‘카메라를 ~’에서는 김성환(푸른영상)·고안원석(A-TV)·이마리오(서울영상집단)·김환태(다큐이야기) 감독을 만났다. 무엇보다 영화제 관련 소식을 빨리 알 수 있다.

hrfilm@sarangbang.or.kr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보내면 구독할 수 있다. 구독료는 무료. [심보선]

대우캐리어 : 노동자들 고향 짜내는 불법도급계약

“임금은 월 68만원으로 정규직의 3분의 1이에요. 용역사원이라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많이 해요. 일이 없을 때는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하다 다쳐도 산재는커녕 오히려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죠.”

이는 캐리어하청 노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보다 심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캐리어를 살펴보면, 각 조는 4-5명의 정규직 사원과 2-4명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구성되고, 정규직 조반장이 모든 작업을 관리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다.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 잔업·특근, 출석여부와 근태사항을 지시하는 사람 모두 정규직 사원들이다.

그러나 도급계약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근태관리 등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관리자가 담당해야 한다. 결국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에 종사해 온 것이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도급계약은 도급업체가 특정 라인이나 특정 기계를 맡아 일정한 물량이나 정해진 기간동안 생산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캐리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 각기 다른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같은 공정라인에 뒤섞여 있어 업무구분이 전혀 안 된다. 대우캐리어하청 업체인 ‘광진’소속 노동자가 센서작업을 끝내면 ‘캐리어냉열’소속 노동자가 접지작업을 추가하고 ‘한보’소속 노동자가 검사를 해 조립공정으로 넘긴다. 특정한 기계에 대해서도 오전반은 대우캐리어하청 업체인 ‘명신’, 오후반은 ‘한보’, 야간반은 ‘형우’노동자들이 업무를 인계 받아, 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가 구분되지 않는다. [김영원]

‘4·10 부평만행’은 끝나지 않았다

부상노동자 퇴원종용, 노조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지난 9일부터 대우차 노조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우차 노조원들은 경찰청 건물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4·10 부평만행’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 10일 1인 시위에 참여했던 대우차노조 최종학 대변인은 또 다른 부평만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는 필수적”이라며, “이무영 경찰청장이 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차노조 김춘기 교육선전실장은 부평만행으로 발생한 “치료비가 총 1억”에 이른다며, 이는 “경찰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우폭력사태로 부상당한 조합원들 중 16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은 치료비 체납을 이유로 부상자들의 퇴원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만행의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2중·3중으로 겹쳐지고 있는 것.

한편, 대우자동차는 부평 공장의 남문에서 노조사무실로 가는 길과 노조사무실 3면을 컨테이너로 둘러쌓아 노

조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노조원들과 접촉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지난 96년부터 계속돼온 에바다농아원(경기도 평택시 소재) 사태가 신임 이사진 구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4월 27일 에바다 이사회 김종인 이사장 등 4명은, 김선기 평택시장의 주선으로 평택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신임 이사 3인에 대한 등기 절차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대표 김용환, 아래 에바다연대회의)가 추천한 이찬진 변호사·우철영 목사·윤귀성 병원장 등 3명이 에바다 농아원의 신임 이사로 28일 등록됐고, 이로써 구 재단 측 이사와 연대회의 측 이

사의 비율이 ‘5명 대 5명’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인권하루소식> 4월 21일자 참조.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단체 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교섭대표의 인원수를 줄이고 교섭대표에 해고자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트집잡고 있는 상황.

대우차노조 김일섭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만 교섭대표로 인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회사의 대화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범용)

또한 같은 날 양봉에 현 에바다 원장 직무대행의 해임건도 문서 처리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3월 2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신임 이사 임명과 현 원장 직무 대행 해임건에 대해 2명의 구 재단 측 이사들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처리가 유보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처리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에바다 학교에 부임했으나 이사회 인준 처리가 안 됐던 김지원 교장에 대한 인준도 이날 완료했다.

그러나 에바다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채용된 무자격 교사 3명의 문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 기초 프로그램이외의 특별 활동이나 외부 활동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 또한 그렇다.

이에 대해 에바다연대회의 박경석 노들장애인학교 교장은 “이러한 파행적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에바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결국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재편돼야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또 “이사진 균형을 맞춘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구 재단 측 인사들과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이사회 안의 과반수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에바다연대회의는 최근 에바다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심태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12일(토)

제 18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 후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에 따라 한국의 사회권 상황보고서를 심사하고 '제안과 권고', '가장 우려되는 분야', '긍정적인 면' 등 45개 항목에 이르는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에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권리나 일부 계층의 권리가 경제회복 및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 체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58%에 이른 시점에서 사회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건강보험적용률도 낮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 재고하고 사회권 조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strongly)"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파업권을 제약하지 말

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경제·사회적인 이해 실현을 위해 파업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형사처리를 동원해 파업을 막는 것을 그

만두고",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공공력 사용을 단념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어 파업을 금지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여기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최근 대량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점토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1차 때는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고, 합법여부를 판단하는 데 (2면에서 계속) >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보다 완전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는 유보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인권의 토론장인 제네바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권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부다. 아마도 정부는 한국을 모범생으로 치켜세우는 IMF의 말은 국제사회의 유일한 평가인 양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분명 '착각'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경제회생과 시장경쟁력 향상이란 목표 속에 희생된 권리를 애도했다. 나아가 IMF와 구조조정 등에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왜 사회권 보장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냐고 한국정부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다.

결국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 우선주의'에 숨이 막힌 사회권을 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좌표의 문제이다. '파이부터 키우자'는 발상은 이제 땅에 묻어야 한다. '특수한 안보상황, 문화적 전통'에 기대어 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낡은 수법도 함께 관에 넣어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을 이유로, 파업권 및 노동3권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등 6년 전의 논리를 똑같이 반복하는 비참한 상황을 이제는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 사회권의 '즉각적 실현'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 실현'이란 소극적 이행 원칙조차 이를 불이키 어려운 현실에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남북화해의 시대에, 여전히 많은 돈을 방위비에 쏟으며 사회보장 및 보건으로 분야에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모순된 현실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어차피 겨우 5년에 한번 내는 보고서, 심사만 요령껏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네바에서 정부가 내뱉은 사회권 보장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는 눈과 귀가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유보 없이 이행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 서민,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온전한 인권을 되돌려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성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 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아래 언론노조)은 10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를 열고, '강철구 씨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은 노조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정능력을 갖추는데 불가피한 결정"이며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구제와 노조의 도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8명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발의요구서에서 "조직 결속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 활동을 저해한 강철구 조합원의 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철구 부위원장은 징계 확정 후 15일 이내에 언론노조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또 진상조사단의 진상보고서를 축약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7일 언론노조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2개월 동안 강 부위원장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사내용을 종합해볼 때 피해 주장자들의 피해 진술이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이용택, 아래 KBS노조)는 11일 "이번 강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단결과 연대를 목적으로 출범한 산별노조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비이성적인 결정"이며 "지금 강 부위원장이 검찰에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가는 시점에서 볼 때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KBS노조 김영환 정책실장은 "일반조합원도 아닌 노조임원을 언론노조 규약을 들어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도 아닌 데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기에 KBS노조는 따를 뜻이 없다"며 "더

구나 부위원장 문제는 KBS노조 자체 탄핵 투표를 거쳐 이미 부결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징계는 KBS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KBS 노조에서 실시한 정·부위원장 탄핵안은 62.2%가 탄핵에 찬성해 탄핵요건인 66.7%에는 미치지 못했다. (심태섭)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5월 11일 '세원전기(주) 현지법인연수생(아래 세원 법인연수생) 노동권 및 자주적 단결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현지법인연수생의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 9일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필리핀 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진상조사단은 회견에서 "세원 연수생들은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는 다른 현지법인 연수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99년 12월 1일 최저임금 및 강제근로 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7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소한의 보호지침도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정작 법인연수생들이 어느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4월 19일 세원 사측과의 만남을 통해 "법인연수생을 고용한 96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세원 사측이 면담에서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는지

물렀다"고 답변했지만 법인연수생의 임금대장에 실제임금 21만원이 아닌 435,955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최저임금(421,490원) 적용" 등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을 알고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원 법인연수생인 아이(23) 씨가 참석해 세원 법인연수생들의 노동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서를 통해 세원 법인연수생들에게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반환 △미지급 임금 지급 △합법적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기술연수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 착취를 제도화한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 1면에서 이어짐)

정부당국에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1차보고서 심의 때 발표한 '최종견해'의 재확인 및 수행 촉구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조약의 국내법적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아동노동과 아동매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 강구 △민간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가이주시설 제공 △노숙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원조수단 마련 △공교육 체계의 수립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여성부의 설립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또 최저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많은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고 및 이유도 없이 생계급여액이 급격하게 삭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심의·해석 기관인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95년에 낸 '최종견해'를 재확인하고 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권고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실현해야 할 의무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15일(화)

제 18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경찰, 한승록씨 폭행 사실 인정”

캐리어 한승육씨 가족, 사과문초안·녹취록 공개

지난달 30일 광주 대우캐리어 '한승록 조원일 폭행사건'이 경찰에 의해 자행됐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한씨 가족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캐리어하청노조 등은 14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작성한 '사과문 초안'과 '녹취록'을 공개하고, 한승록 씨와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명의로 현장지휘 경찰책임자와 사측 경영진을 폭행·독직폭행·직무유기와 폭력 지시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각각 고소했다.

이날 한씨 가족들이 공개한 자료들은 한승록 씨 가족 4명이 지난 4월 30일과 5월 4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과 강력2반장을 만난 자리에서 얻은 것이다. 당시 한씨 가족은 경찰에게 "우선 폭행 사실을 인정·사과하고, 한 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를 수락하고 사과문을 작성했다. 강력 2반장이 작성했다는 초안에는 "경찰이 한승록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사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고, 감진성 광산경찰서장 명의의 서명도 있었다. 그러나 사과문 '완성본'은 한씨 가족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한 씨 형 승국(48, 조선대병원 마취의)씨는 "30일 밤 12시경 강력2반장이 '내부사정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전화를 걸어와 결국 사과는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승국 씨는 또 "경찰이 5월 4일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으니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승국 씨는 이 때 녹음기를 가지고 나가 대화를

녹음했다.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는 수사과장 박 모씨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대외적으로는 뭘 소리를 해도 양해 좀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한씨 가족들이 요구했던 것을 지키겠다는 대답은 아무 데도 없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 스스로 폭행을 인정한 증거를 제시하자 14일 광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주장을 알고 있으며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며 "사과문 초안이라는 것의 필적 검사 등을 거쳐 진상을 파악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승국 씨는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동생의 머리에 진압용 헬멧을 씌워놓고 '함께 능성한 사람을 불러'며 수 십 차례 머리를 가격한 것은 명백한 고문"이라며 "녹취록뿐 아니라 녹음테이프도 있고 동생의 투병 생활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도 있으니 그것을 증거로 끝까지 싸워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심대섭]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감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지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타를 당했다. 그해 11월 김 씨는 순시중이던 김광노 관구계장에게 금지 중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다. 김 관구계장은 그러나 "돈 없고 백 없는 놈은 주둥이 다치고 있어"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98년 2월 출소한 김 씨는 교도관들의 집단구타 △계구(수감, 사슬)사용의 장기화 및 적합성 △고소장 제출 방해에 대해 국가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검은 형사소송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재정신청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1심에서 당시 김광노 계장의 고소장 제출방해 혐의만 인정됐고, 집단구타 및 계구사용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50일이 넘게 사용된 계구에 대해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실형 계구가 50일간 사용되었다 해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망연자실한 김 씨는 권리구제 가능성에 낙담, 상고를 포기했다. 국가는 고소권방해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했다가 대법원이 고소방해 부분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된 것.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도관들의 소송방해 관행에 채기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행정법상 과도한 집필허가절차와 검열은 교도관들이 재소자 고소권을 방해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재소자의 고소권 보장을 위해서 행정법에 집필허가 및 검열대상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재소자가 법원 등의 국가기관, 변호사, 인권단체 등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 검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보영]

● 영예진인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지난 99년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열린 APEC 반대 민중회의 마지막날,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페트로나스 트윈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현장에 도착해서, 자못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주옥 늘어서 있는 경찰차 안에, 아마도 시위 참가자를 잡도록 훈련되어있을 경찰견 때문이었다. 아니, 시위 때 개를 쫓단 말아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옆에 있는 한 활동가가 그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잠장 2년짜기나 재판도 없이 구속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저 악명 높은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Law)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회는 무사히 끝났지만, 국제연대운동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내 국가보안법 반대 연대망구축이 시급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얼마전 당시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티안 추야를 비롯한 10명의 말레이시아 활동가들이 지난 4월 말 ISA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들의 구속행진은 마하티르의 정적으로 숙청당하면서, 동성애혐오로 9년형을 선고받은 안와르 전 부총리에 대한 유죄판결 2주년 기념집회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야당은 물론 "Reformaci" 즉, 개혁운동 세력은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정권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그의 석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이번 구속은 개혁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현지 활동가들의 견해다.

말레이시아는 소위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기제인 국가보안법 체제가 ISA 이외에도 다른 많은 보조 악법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학자 및 학생의 단체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법이라든가 치안법(한국의 집시법), 공무기밀법, 심지어 마약단속법까지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식민지 종주국이 경제적·정치적 이권을 쟁기기 위해 활용했던 국가보안법을, 독립 후 들어선 독재·엘리트정권이 그대로 차용하면서 극심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냉전이 종식된, 소위 지금의 세계화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독점제벌과 독재정권의 주요한 무기다. 냉전시기에는 공산주의자(혹은 중국의 경우는 반공주의자)가 적이었다면 이제는 "세계화시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자유시장의 물을 어기는" 노동자들과 민주세력 모두가 안보이데올로기의 그물망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마하티르 또한 경제위기와 부정축재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버린 칼날을 들이세우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이번 주말, PICIS는 이들 양심수 10명 석방·ISA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인데, 극심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10명의 말레이시아 활동가들에게 많은 지지와 연대를 표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영예진(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

주간인권호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1. 과거에 대한 성찰, 사과에는 충분함이 없다**
당정, 군위안부 별도항목 분리 등 일교과서 재수정 요구안 일정부에 전달(5.8) / 일본 관방장관, "명백한 오류 없는 한 재수정은 어렵다"(5.8) / 독일, 1차대전중 독일군이 벨기에 다람에서 민간인 674명 학살한 데 대해 90년 만에 사죄표명(5.6) / 주한 독일대사관, 나치정권 피해자 신고요청(5.11)
 - 2. 제벌이 싫어하는 모성보호 못하겠다**
민주·자민련, "모성보호 관련법은 7월부터 시행, 태아검진·유산·사산휴가 조항은 삭제, 생리휴가는 결론 못내려"(5.9) /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출산휴가 90일 확대만 인정하달라 민주당 모성보호법안 반대(5.10)
 - 3. 토론회 통과리케 삼아 '새만금' 강행하려는 민주당**
정부 주처 '새만금' 토론회, 곽승준 교수 "쌀안보가치등 부풀려 평가됐다"(5.7) / 새만금 사업 2차 토론회, 농림부 : 새만금 강행의지 밝혀 "방조제 완공 뒤 동진수역 먼저 개발", 이시재 교수 "어업권 등 생활권 회복하고 방조제 공사 중단"(5.10)
 - 4. MD 사절이 탄 차에 개탄 던진 게 폭행죄**
MD 사절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방문(5.9) / 'NMD·TMD 저지 및 평화실현 공대위', 인천공항 시위-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반대(5.9) / 'NMD·TMD 저지 및 평화실현 공대위' 활동가 5명, 미국 켈리차관보 차림에 계단 던져 폭행혐의 입건(5.10)
 - 5.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상황에 경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58.4% -통계청 발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5.10) / 공무원노조 쟁취 공대위 출범(5.7) / 유엔 사회권위원회, "시장을 위해 일부 계층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5.11)
 - 6. '대량해고 반대시위에 경찰투입한 것에 깊은 유감'**
한통 임시이사회 '114 분사' 결정, 한국통신노조 단식등 강경투쟁(5.7) / 삼성 에스원 해고노동자,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5.7) / 대우자동차 노사교섭 재개 실패, 사측에서 노조 교섭대표 문제삼아 거부(5.9) / 대우차 노동자,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부상자 치료보장' 요구 경찰청 앞 1인시위(5.9) / 이주노동자투쟁본부 등 '세월전기 진상조사단', 현지법인 연수생 인권유린 실태 발표(5.11)
 - 7. 정통부의 버티기, "어쨌든 나는 검열할거야!"**
정통부, '내용소프트웨어'를 '전자적 표시'로 시행령 다시 예고해 인터넷 검열의도 재확인(5.4) / 정보통신 검열 반대 공동행동, '정보통신 윤리위'가 차단 주체 될 수 없다며, '전자적 표시' 삭제요구(5.9)
- 기타소식
한국,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및 2개 의정서 가입(5.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16일(수)

제 18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지난 5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아래 중노위)는,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해고당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해고한 행위는 중노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중노위의 '기각'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8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만호)에서 같은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었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출퇴근에 강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기본수당이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고, 겸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타인이 보험모집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나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

세를 납부하는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준근로자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교보생명보험(주)의 부당한 해고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장해진 공인노무사는 "이번 중노위 판정의 근거가 대부분 사용자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

이라며 분을 참지 못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출근하지 않으면 일당이 깎이고 업무지시를 위반하면 해고를 당하는" 보험모집인의 처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판정을 "보험모집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인 노동조합 결성을 막은 꼴"이라고 평했다. 또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떠나 "사실에 기초해 심의·판단하지 못한 중노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공대위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용)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한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유엔의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밝힌 "구체적인 권고들을 유보 없이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또 '국제인권규범들은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는 유엔의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한국의 국내법이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국가가 각성할 것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권 연대회의는 IMF 체제

이후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권 보장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사회권의 열악한 상황이 "국가의 '경제우선주의' 정책기조와 분단상황을 강조하는 특수성 주장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 생각하는 인권철학을 세울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제검도, 과도한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파업권 제약의 중지, 교원과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주거권 보장, 공교육 강화 등 지난 95년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사회권 연대회의는 청와대 및 관련기관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김영원)

5.5 인권영화제

각 작품마다

선착순입니다

· 때: 5월 18일(금)~5월 23일(수)

· 장소: 일주아트하우스 아트큐브

· 문의: 02-741-2407

그리고 무료입니다

단국대 '활동가조직' 5명 구속 조직실체에 의문, 강압수사 의혹

단국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4일 경찰청 보안4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단국대 구분승(졸업) 씨 등 7명을 체포해 '지하단체 단국대 활동가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가협, 단국대 민주동맹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 조작성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있지도 않은 활동가 조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또 16일 구속된 장선옥(경영정보) 씨가 지난 15일 아버지와 면회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록한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한 사실을 공개하고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김원근 변호사는 "활동가 조직"의 실체에 대해 대단히 의문이 많다"며 "활동가 조직" 운운한 부분에 대해 무죄주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구분승, 장선옥 씨와 황우정(부여농민회 활동가), 정찬우, 정인철 씨 등 5명이고, 감윤경(졸업) 씨 등 2명은 15일 저녁, 16일 새벽에 불구속입건 돼 풀려났다. (심보선)

"인권위법 거부권행사 촉구"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공대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단체도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해 (거부권 행사)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심보선)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②

재상영 작품으로 선정한 배경 그리고 그 역사

98년 당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정권도 바뀌어 '인권'이라는 말이 홍보용일지언정 공공연히 언급되었지만 우리의 초조함은 여전했다. 관계당국의 사찰도 결코 없지 않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영화제를 지키기 위한 진지를 확실히 쌓아야 했다. 먼저 우수한 작품, 다수의 상영작으로 방어막을 쳤다.

제3세계 진보영화의 모범적 사례인 <첼레전투>가 당시의 대표작. 작품은 첼레의 아예데 민중연합정권의 개혁과 노동자·농민들의 자생적 사회주의 실험을 담은 기록영화이다. <첼레전투>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첼레전투>, 잊을 수 없는 감동

모두 3부로 이루어진 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관객들이 꼬박 3일을 영화제가 열렸던 동국대 학술문화회관으로 "출근"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인권영화제가 '환생'시킨 아예데 대통령과 그의 인민들은 영화제 역사상 가장 인기를 누린 배우들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또다시 보고 싶어하는 '컬트'가 되어버린 작품. 20여 년 후 <첼레전투>가 첼레에서 상영되는 과정을 담은 <첼레, 지을 수 없는 기억>은 <첼레전투>를 완결시키는 에필로그. <첼레전투>의 제작과정을 담고 있기도 해 <첼레전투>의 메이킹 필름처럼 감상할 수도 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 투쟁의 현대사를 담은 <레지스탕스>도 98년 대표작이다. 아이티인들은 오랜 착취와 탄압을 견뎌온 사람들일 뿐 아니라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노예 혁명을 성공시키고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세운 진보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기도 하다. 아이티의 노예 혁명 정신을 되새기면서 90년 이후 아이티의 정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 해방신학자이며 민주지도자인 전직

대통령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와 그를 지지하고 함께 일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 앙트완 이즈메리의 투쟁동선이 작품의 큰 축이다. 감독은 이들의 목소리를 앞세워 미국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즈메리가 암살당하는 장면을 담아 충격을 더해준 이 작품 역시 치열한 역사의 현장을 누비는 카메라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99년 개막작인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를 통해 미국의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이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미국의 좌파 정치 그룹인 '흑표범당'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작품. 영화는 무미아를 비롯해 많은 진보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사형을 눈앞에 두고 옥살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흑인이거나 미국 원주민들이다. 99년 영화제에서는 미국 정부에 그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는 '관객엽서 보내기 운동'을 아울러 진행했다.

50년대 매카시의 '블랙리스트'로 인해 고초를 당한 흑인배우들의 역사 <모략 당한 나의 이름> 또한 미국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준다. 이 영화는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정치운동가인 폴 로베슨의 불운한 일생을 들려주기도 한다. 영화의 제목을 그의 노래에서 따왔다.

2000년의 대표작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를 다시 상영하게 된 것 역시 이번 영화제의 즐거움이다. 당시 이대 정문 앞 광장에서 상영되었는데, 그 광장을 딱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였다. 인권영화제 역사상 제일 많은 관객동원이었다. 작품은 게바라 생애 마지막인 '볼리비아 빨치산 일지'를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뉴멕시코 광산파업을 소재로 한 드라마 <대지의 소금> 역시 '인권영화제의 명화에 값하는 귀한 영화이다.

(김정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최근 들어 광주교도소(소장 정상문) 측의 인권침해행위를 호소해오는 수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소속의 불법구금과 고소장 제출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윤모 씨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와의 접견에서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어떠한 조사나 징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차례나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소장 순시 때 치아치료를 요구하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4일간 감금”됐으며, “그후 의료방치와 불법구금에 대해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가 장흥석 관공계장에 의해 혐수정과 수감까지 채워진 가운데 징벌방에 감금됐다”고 밝혔다. ‘고소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이후에야 징벌방에서 풀려났다는 윤 씨는 이십여일 후에 타 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 3월 출소한 박모 씨의 주장도 이와 유사하다. “광주에선 하도 비일비재한 일이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

렵다”고 말한 박 씨는 지난해 6월 교도관 검방도중 거실에서 부정물품이 나왔다는 이유로 5시간동안 징벌방에 감금됐다.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징벌절차를 밟겠다”며 징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확인배 미결사동 관공계장은 “징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두었다 풀어주는 것을 다행으로 알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윤 씨와 박 씨는 광주교도소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서신불허에 이감 협박도

김모 씨 역시 고소장 제출을 위해 광주교도소 측과 한달 동안 싸워야했

다. 지난 3월 소내에서 타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김 씨는 “감독교도관이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려는 커녕 방관했다”며 감독 교도관을 고소하려 했다. 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절대 못내준다”며 고소장 제출을 막았고, 교무과에서는 김 씨가 이러한 사연을 적어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을 8통이나 불허했다. 게다가 소속은 가족들을 만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다는 것. 결국 김 씨의 고소장은 “교도관의 고소장 접수 거부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14일에야 접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교도소측은 “모두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확한 사실조사 및 관련자 처벌,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수용자들의 호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유해정)

만화사랑방

이동수



5.5 인권영화제

오늘 개막

· 장소: 광화문사거리 아트큐브
첫상영 : 오전 11시
개막식 : 7시 10분
무료, 선착순 입장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올해 인권영화제는 5.5화라는 다소 이채로운 회수를 붙였다. 의미를 따져 보자면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모색해 보자는 뜻. 그래서 6화로 나아가지 않고 그 사이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5년 동안 숨차게 달려온 인권영화제는 이제 은근지신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모두 19편의 ‘다시 보는 명작선’은 96년부터 시작된 인권영화제를 일별하는 좋은 기회이다. 96년부터 작년까지 5회 동안 상영된 작품은 모두 162편. ‘명작선’의 선별은 먼저 관객의 찬사와 영화적 가치가 뛰어난 수작들을 골라 봤다. <절레전투> <대지의 소금>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볼리비아 일기> <히비 밀크의 시대> <쇼아> 등이 그렇다. 더불어 ‘꼭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즉 인권영화제가 권하는 영화도 포함되어 있다. <베신의 시간 속에서> <날 놓아줘> <레지스탕스> <스코츠보로, 미국의 비극>이 그에 속한다. 99년부터 시작된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작 두 편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역대 상영되었던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을 감상할 수 있는 ‘애니휴먼’도 언급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명작선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96년에 상영된 작품은 <히비 밀크의 시대> <유령을 부르며> 등 4편. 진보적인 게이 활동가 히비 밀크의 생애를 다룬 <히비 밀크의 시대>는 많은 이들이 다시 보고 싶어한 영화중 하나이다. 동성애 운동을 이해하는데 ‘교과서’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이 작품은 당시 국내 동성애 운동에 영향력있는 케이스 스터디였을 것. 레이건 시대 임금삭감에 대항한 장기파업투쟁을 담은 바바라 코플의 대표작 <미국의 꿈> 역시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서를 보편적으로 담은 작품으로 노동자들에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공감을 일으켰다. 절레 피노체트 독재 당시 체포되어 18년 동안 프라치

로 살아야 했던 여인 라 플라카 알레한드라의 통한의 증언을 다룬 <베신의 시간 속에서>는 독재의 역사와 저항하며 살아온 민중운동가들에게 통곡의 사연으로 가슴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난 2월 유고 전범 재판 판결로 전시 여성강간 문제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유령을 부르며>는 피해여성들의 일기장인 양 그들의 심리를 들추어 보이고 있다.

<쇼아>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97년 2회 대표작이 바로 <쇼아>.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어 실형을 산,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미증유’의 사건이 있었던 그 해 <쇼아>는 최대 피해작이었다. 9시간 30분이라는 상영시간은 안정적인 상영조건에서도 쉽지 않은 강행이었을 것을 당시 인권영

'5.5 인권영화제'인 이유

화제는 당국의 탄압으로 상영장이(홍익대학교) 봉쇄당하고 학교 여기 저기서 ‘게릴라 상영’을 감행해야 했었다. 그 때를 떠올려 보자.

“관객여러분 죄송합니다. 상영장이 봉쇄돼 <쇼아>는 미술대 옆 툰다리 계단에서 상영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약도를 참고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제2회 개막식에 찾아온 용감한 관객들은 홍대 미술대 옆 툰다리 계단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상영장이 봉쇄되자 홍대 총학생회에서 공여지책으로 물색한 상영장 툰다리 계단, 꼭 채운다면 2백석이 족히 될 계단에 앉아 9시간 30분의 대작 <쇼아>를 기다리는 관객들. 그러나 스크린을 설치하고 스피커의 불륨을 맞추고 플레이해도 영화는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았다. 가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스크린은 축제의 흥겨움을 심란하게 뒤흔들어댔다. 마이크를 잡은 김동원 감독이 곤혹스럽게 입을 뗐다. “...아직 날이 어두워지지 않아 스크린에 영

상이 잘 뜨지 않습니다...” 때는 가을의 한복판, 해가 지는 걸 기다리기에 시멘트 바닥은 너무 차가웠다. 관객들은 기다림에 지치기 시작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김해준 씨(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와 나는 앞 건물로 뛰어 들어가 강의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작은 강의실이라도 찾자 위해. 빈 공간은 휴게실뿐이었다. 유리창에 검은 마분지를 서둘러 붙이고 스크린과 기자재를 황급히 옮겼다. <쇼아>의 첫 상영은 상영장을 옮기고 또 옮겨 30명도 채 앉을 수 없는 작은 휴게실에서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관객들은 발걸음을 들렸다. 이후 영화제 폐막 하루를 앞두고 당국의 탄압으로 인해 흥대일정을 끝내야 했다.

<쇼아>가 인권영화제를 통해 번듯한 극장에서 상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태인 학살을 증언자들의 목소리만으로

그 긴 시간을 가득채우고 있는 경이로운 영화 <쇼아>를 극장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을 제외하곤 좀처럼 오지 않을 것 같다. 영화제는 21일(월) 하루를 ‘쇼아의 날’로 정하고 하루 종일 작품을 상영할 계획이다.

탄압중에도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전해준 <시가라키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상영된다. 시가라키(信樂)에는 약 2천 명의 노동자가 있으며 그 중 106명이 정신지체 장애인. 이들은 보통 10년 이상 이곳에서 직업을 얻어 살아왔다. 인간의 논리가 적용하는 환경에서 이들은 ‘불운한 인간’이 아닌 ‘그냥 사람’이 된다.

98년 영화제를 개최하기 전 많은 이들이 걱정의 목소리를 보냈다. “지난해 그렇게 모진 탄압이 있었는데, 올해 순조롭게 개최할 수 있겠나”. 영화제를 준비하는 인권운동사랑방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가슴 졸이기도 했다. (김정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17일(목)

제 18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원생 방패삼아 에바다 정상화 만지

스승의 날 교장취임 방해, 교사폭행...

지난 4월 30일 '5:5 이사회' 구성으로 에바다농아 학교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5월 15일 원생들이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어 16일에도 선생을 때려 입원시키는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16일 오전 10시 30분 경 손형덕 에바다농아 학교 교감이 한 학생에게 발로 걷어차이고 얼굴을 정면으로 구타 당해 실신하는 등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평소 구재단측의 '행동대장'으로 불리는 학생이 교실을 돌아다니며 "김지원 교장을 몰아내자"고 부추기고 다니다가 손교감을 폭행한 것.

이에 앞서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김지원 교장의 취임식을 앞두고 새벽 3시 10분 경, 일부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학교 교장실에 침입해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김종인 이사장, 김지원 교장 물러가라"고 낙서를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새로 취임하는 김 교장은 구화학교

와 선희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지난 4월 28일 '5:5 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대해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16일 성명에서 "제자가 스승을 폭행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에바다복지회의 순조로운 비리척결과 정상화에 대해 반대하는 구 비리재단의 배후조종으로 발생한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현 원장직무대행인 양봉에 씨는 96년 에바다 사태 당시 에바다농아 학교 교장으로 있었고, 특수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교사로 임명하는 등 비민주적 운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한 병택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5일 새벽 교장실 난동에 대해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니다. 교장취임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에바다 복지회 김종인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원생들을 방패막이 삼아 에바다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구 비리재단의 음모"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과거 비리가 청산되고 에바다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구 비리재단 관련자들의 완전한 퇴진밖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진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6일 류 사무국장 등은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모였으니 집회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공화문 정 부종합청사 후문 노상에서 경찰들에 의해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이에 류 사무국장 등은 같은 달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단지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

하여 현장에 온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번 판결로 집회참석을 원천봉쇄하는 경찰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예방 차원'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게 됐다.

류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 (범용)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청은 글쓴 공무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IP 역추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일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seoul.kr)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전산실을 통해 IP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용산구 이촌2동사무소 컴퓨터 단말기에서 글이 올려졌음을 확인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자인 김모(40) 씨를 조사하려 했다. 김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용산구청은 지난 10일 서울시 인사과에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직무명령거부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 씨는 이 글에서 "구청장은 용산구청직장협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설립증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장은 "김 씨의 글 가운데 '용산구청장은 허수아비' 몇몇 간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내용이 근거 없이 구청장을 비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 검찰반대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IP 추적을 통해 김 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업장 감시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삭제행위는 이용자에게 대한 검열"이라고 지적하며 "어느 조직·단체·기관이든지 그 구성원들에게 비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용산구청 홈페이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인되고 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글을 쓰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수항목으로 입력해야 한다.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침해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용산구청측을 비난하고 있다. 네티즌 신모 씨는 "주민번호는 공개 즉시 바로 다른 용도로 쓰일 위험이 있는데... 토론방에 주민번호와 연락처까지 남기는 건 납득이 가지 않네요"라는 글을 남겼고, 임모 씨는 "쓴 소리라 하여 바로바로 삭제해 버리는 홈페이지"라며 "필수입력 사항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김영원)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공개토론회>

5월 31일(목) 오후 2시 / 장소 : 추후 공지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집중거부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의 재판이 열린 15일. 변호인단 5명과 사회단체 활동가 2명, 그리고 여호와증인 관계자들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3군사령부로 향했다.

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은 총 18명. 좁은 군사재판소 안은 가족들과 위치타위원회(여호와증인)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재판부는 외박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군인 한 명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여호와증인들의 항명죄에 대한 심문에 들어갔다.

파르라니 울려 쭈운 머리의 18명의 청년들은 변호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자신의 소신을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 성경의 여러 가르침에 따라 총칼을 들지 않으며 나아가 전쟁을 준비하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여호와증인들의 집중 거부의 역사는 나치독일에서도 줄곧 유지되어 왔으며 일제치하에서도 신사참배의 거부, 병역거부는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여호와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뿐만 아니라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이유 등 사회에서 이들의 양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편견을 조장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최후 변론에서 그들은 시종일관 조용하면서도 맑은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들이 왜 집중을 거부하는지를 힘주어 말했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써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양심이라고. 군대가 필요 없는,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은 지금은 꿈속에서 그릴 수 있는 이상이지만 인간이기에 그 이상은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자신들의 신념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면 3년 아니 30년이라도 기꺼이 형을 살겠지만 조금만 더 사회가 자신들의 양심을 인정하고 이해해 준다면 군대 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다고...

4시간의 긴 심문을 마치고 재판부는 선고연기를 결정했다. 이것은 항명죄에 관한 군사재판이 보통 당일 심문에 이어 곧바로 선고(징역 3년)를 내렸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가능한 자세하게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형량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방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했다. 이번 재판으로 재판부 스스로도 여호와증인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음을 고백했다. 재판 과정 내내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간 손가락질 받으며 지켜왔던 그들의 양심은 적어도 이날의 군사재판에서만만큼은 무죄였다.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19일(토)

제 18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아태 한총련)이 공개서한을 통해 한총련에 가해진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총련은 17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9기 한총련 출범식을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양대에서 개최한다고 선언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총련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14, 15일 경찰이 ‘단국대 활동가 조직’ 사건으로 학생들을 연행·구속하고, 지난 17일 서울 서부총련 이경민 의장을 연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한총련은 17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단국대 활동가 조직’ 사건에 대해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군 복무중인 사람이 한날 한시에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한 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라며 “이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또 “교육부에 면담하러 갔다가 연행된 건국대학교 배민균 총학생회장에게 검찰이 국보법 위반 기소를 포기했다는 기쁜 소식”과 “한총련 대의원 범농활 현장을 경찰이 포위하는 모습이 공존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벗어낸 ‘시대의 모순’이며 우리사회의 자화상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이어 “이런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민주주의적 발전

도 기대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대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승환 한총련 의장은 “각계각층 사회단체들과 연대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출범식 장소인 한양대가 원천봉쇄 되더라도 장소를 옮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보선)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최근 대법원은 교도관이 고소장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강제 채소자들에게 물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수감자 채워지고 석사술에 묶인 채 2개월간 독방에 처박혔다. 또 고소하려고 했다가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고문을 당했다. 폭행·고소방해·고문·회유·징벌·이감·출소 후 소송. 이는 교도소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처우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따르는 ‘절차’다. 김 씨도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했다.

출소한 김 씨가 98년에 교도관 김정섭, 김근섭을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은 기각결정을 했으며, 이어 부산고법에 낸 재정신청도 무혐의 처리됐다. 부산고법은 관구계장 김광노의 고소방해에 대해서도 “위법성은 인정되나 20여 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해 소추를 유예했다. 또 부산고법은 장기간의 계구사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채 “증거도 없고, 실령 50일간 사용했다고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계변을 늘어놓았다.

98년 형사소송과 함께 제기한 손해소송에 대해 2년을 허송세월 하던 대전지법은 결례 같은 부산고법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거머쥔 채 교도관의 가혹행위, 계구사용은 무시하고 고소방해만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결과는 같았다.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주위의 ‘포기’권유로 남몰래 소송을 진행하던 김 씨는 절망감으로 상고도 포기했다.

누가 김석진 씨에게 상고를 포기하게 했는가. 교정기관이 제출한 허위증거와 거짓증언의 뒤에 숨은 채, 교도관의 인권유린에는 애써 눈감는 법원이다. 김 씨 재판에서도 ‘증거불충분’이 운위됐으며, 지난 해 유득형 씨 재판에서도 감호자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교도소 의무과 진료기록도 배척됐다. 단지 교도관의 집필방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교도관의 자백이 없는 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출소자들의 증언은 말짱 ‘팡’이라는 것이다. ‘돈 없고 백 없는 놈’들은 믿을 수 없고, 가해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출한 ‘증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법기관의 나태함과 비검함이 김 씨를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일제시대를 거처며 단 한번도 단죄되지 않은 교도관들의 고문관행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채소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상이 날날이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또 사법부에 요구한다. ‘최후의 인권보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라.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스라엘 분쟁 집중조명

18일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이 개막됐다. 지난 5년간 해마다 가을이 되어야 열렸던 인권영화제가 올해는 5월의 한복판을 가로지른다. 그것도 서울 광화문 근처의 개봉관에서 담당하게. ‘영화를 통해 표현된 인권현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인권영화제의 취지가 사전검열의 관행에 익숙해 있던 정부당국에게는 애초부터 어불성설. 따라서 개척불허, 지속적 협박, 대표구속 등 지난 5년간 정부당국의 탄압과 인권영화제의 역사를 살펴볼 가을날씨와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해는 왜 봄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단체이지, 영화단체가 아니다. 인권관련 법안이 심사되는 가을 정기국회 때 제일 바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을에는 인권단체 본래의 활동에 충실하려 한다. 또 인권영화제가 가을에 열리면 지역 인권영화제가 겨울까지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봄으로 옮겼다.” 인권영화제의 총감독 서준식 대표의 답변이다.

5.5 인권영화제에 상영되는 작품은 총 41편. 팔레스타인 제앙의 진원을 찾는 이슈포커스 11편, 지난 5년간의 상영작 중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선 19편, 애니메이션 8편과 한국영화 3편이 그것이다. 특히 18일은 9편의 상영작이 모두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뤄 그야말로 이슈포커스의 날이었다. 이날 상영작을 빠짐없이 본 김강수 씨는 “테마 위주로 짜여진 오늘 영화들이 참 좋았다”며, “특히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라는 작품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잘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장에는 상영작 중 하나인 <록, 종이, 미사일>의 제작자 제이미 맥클레랜드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이미 씨는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작품이 많이 상영되어 인상적이었다”며, “검열에 대해서도 매우 용감한 영화제라고 이미 알고 있다”며, 다른 곳의 영화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의 인권영화제를 평했다.

서 총감독은 개막식에서 “분노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도 아파하면서, 인권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인권영화제의 변함없는 목적을 밝혔다.

한편, 인권영화제 총기획 김경아 씨는 “상영조건이 안정적인 반면, 운동하는 사람들의 장터 같은 분위기가 덜 느껴진다”고 평했다. 교정에서 도심으로 옮겨 열린 5.5 인권영화제는 정부당국의 탄압을 이겨낸 슬리이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도 분명했다. (범용)

5.5 인권영화제

· 장소: 광화문사거리 아트큐브

첫상영 : 오전 11시 / 무료, 선착순 입장

인권영화제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hrfilm)에서 상영일정을 확인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탐방〉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을 찾아

청소년 단체들의 활동은 잘 소개되지 않았다. 이에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 단체를 소개한다. (편진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청소년 운동을 하기로 했죠”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는 윤아영 씨(20). 그녀는 지난 겨울 21세기청소년단체희망에서 진행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고3을 위한 새길찾기’ 교육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운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화외고 3학년이던 작년에는 교내에서 박정훈 교사(민혁당 사건 연류)의 석방운동을 이끌기도 했던 아영 씨는 현재 ‘희망’의 예비 도움꾼이다.

“농촌 활동을 하고, 대우자동차 파업현장에 가서 직접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 세삼 깨달은 것은요. 모두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현재 높은 지위에서 큰 힘을 가지고, 예를 들면 판검사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무언가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죠”라고 말하는 아영 씨는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의 ‘희망’이 되고 싶다

90년대 초부터 서울지역에서 청소년 운동을 해 오던 푸른 벗, 샘, 나눔터 등 5개 단체들이 지난 해 모여 만든 ‘21세기 청소년단체 희망’은 서울지역청소년단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년간 청소년 위한 열린학교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또 청소년 인터넷 신문 <바이러스>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 소외된 이웃, 주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의 목소리로 담아내고 있다. ‘희망’의 일꾼을 맡고 있는 이근미 씨(26)는 “90년대 초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하고 지금은 현상적으로는 많이 달라졌죠. 학교 학생회는 직선제이고,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학생운영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나 학생회가 자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청소년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희망’은 청소년들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는 자치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자치활동 영역과 권리를 확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89년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참교육 운동을 했던 ‘청소년’ 선배들이 어렵게 지켜 온 청소년 운동을 이어받은 ‘희망’의 활동이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삶의 주인으로 서는데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고근애)

희망 http://www.heemang21.net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22일(화)

제 18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21일 오후 6시 43분. 철도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재길 후보의 당선을 공식발표했다. 선관위는 기호 2번 김재길(36) 후보가 '현재 개표 중 5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였으므로' 당선을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한다"고 선언했다. 어용 철도노조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지난 54년 동안 3중간선제라는 선거제도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온 철도노조는 어용노조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 당선자 선거운동본부는 이미 오후 2시 무렵 비공식적 집계결과를 통해 승리를 예감하고 서울 용산 철도노조회관 앞마당에 모여 선관위의 발표를 기다리다가 오후 4시경 승리를 선언했다.

'철도노조민주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투쟁본부'가 오후 8시 21분 현재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유효투표 23,587표 중 기호 1번 오금득 후보 8,789표, 기호 2번 김재길 후보 14,794표를 얻었다. 김 후보의 지지율은 63.2%에 이르렀다. 특히 김 당선자는 서울, 부산, 영주 등 5개 지역 본부에서 오 후보가 속해있는 순천지역본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했다.

김 당선자에게는 그러나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 다른 야권 철도 인력감축과 민영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김 당선자는 당선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 소수 노동귀족과 2만5천 현장조합원들과의 싸움이었다"고 평가하고 "선거 승리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후 "전임 위원장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어용이었기 때문에 출마했다"면서 "54년만에 찾아온 직선제 때문에 승리했다"로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철도민영화를 전제로 한 철도기본법 입법저지 운동을 우선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철도민영화는 철도 파탄정책"이라며 "철도포기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철도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등 철도 발전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21일 성명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철도노조 선거결과는 정부와 자본의 노리개와 같은 어용노조운동이 더 이상 발발할 곳이 없는 시대의 흐름을 보여준 것"이라며 2만5천여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축하를 보냈다. 민주노총은 또 "선거를 거쳐 민주집행부를 구성한 것은 진정한 민주노조로 거듭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며 "예상되는 철도청과 정부기관의 공작과 역습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심보선)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정부가 은밀히 고등학생들에게 군번과 유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조직 또한 편성해놓아 전쟁 발발 즉시 학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았음이 20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재난이나 전쟁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준군사조직원으로 편입시킬 계획을 세우는 정부는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지난 해 유엔이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아래 아동 선택의정서)에도 위배되는 국제적 지탄 대상"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사랑방은 또 "지금이라도 학도호국단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경희 대변인도 "학도호국단 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태인데 이러한 구 시대적 유물은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며 "특히 문서대로라면 당사자인 학생들조차 전혀 모르게 운영되는 것인데 이 점은 행정적인 보고라고만 해도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안보자체를 전쟁준비라고 생각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진정한 안보는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 등 인간안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A4용지 11쪽 분량의 문서에서 일선학교에 "전시 학도호국단을 지면 편성을 완료한 후, 편성표 1부를 2001. 5. 10까지 제출"할 것을 일제히 요청하고, 전시 학도호국단의 편성요령·운영방법·활동범위 및 비상연락체계 편성방법 등을 자세히 밝혔다"고 한다. 교육 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 업무가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주도하에 편시에 전시를 대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태섭)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5월을 생각하며

달력의 어느 장이나 그렇겠지만, 5월도 참으로 역사적인 날들이 많다. 1일 노동절은 차치하고라도, 1948년 5·10 단독선거,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80년 5·18 광주항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역사의 무게와 현실의 부박함이 교차하며, 문득 '후세대들에게 이전 세대의 고난의 역사를 옮겨 전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다시 불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 인간과 삶 그리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역사적 주체성에 대한 성찰의 시간은 정보의 폭주와 사무의 열기 속에 증발해 버리고 있다. 체계의 압력 속에 사람들은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고난의 역사와 그 성취가 이룩한 보편적 인간성을 잊고, 사소한 이해관계에 탐욕을 내다가 혹은 작은 불행과 좌절에 부딪혀, 자신의 존엄을 너무나 손쉽게 상실하거나 방기한다.

인권의 기초인 인간의 존엄은 어디서 오는가? 신의 모습으로 빛어진 인간의 본원적 성품, 선형적 가치세계에서의 윤리적 주체성, 인간들 상호간의 공감적 감수성 등 여러 관점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길게는 생명의 험난한 진화의 과정에서, 짧게는 인류역사의 고난극복의 장점에서 인간 존엄의 원천을 구하고 싶다.

물론 현재는 항상 과거보다 중요한 법이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망각한 현재의 근시안적 추구는 불행한 미래로 귀결될 뿐이다. 사회의 유지와 발전은 곧 그 사회의 역사적 성과와 그 자긍심의 확대재생산인 것이며, 각자의 행·불행의 길고 짧은을 떠나서 공동체의 역사적 성취 속에 인간의 존엄을 발견하고 그 역사적 한계 속에서 사회의 과제를 인식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현재가 결코 시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좋은 조건의 아이들은 자신의 처지에 감사하며 역사와 사회에 대하여 겸허해지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당장의 처지에 비관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그랬듯이,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고 빛내고자 하는 희망과 결의를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따라서 나는 인권교육은 역사교육이 되어야 하며, 역사교육은 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5월은 또한 청소년의 달이다. 우리의 현재에 축적되어 있는 희망과 좌절, 고난과 성취의 역사가 이 땅의 청소년들의 가슴에 힘차게 물결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정태욱(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간인권호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1. 제벌규제 논란, 결국 정부는 제벌 편
한나라당, 제벌규제 완화 당론화(5.14) / 전경련,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거듭 주장(5.14) / 경제5단체, 제벌규제 완화 건의안 정부에 전달(5.14) / 정부와 민주당, 제벌출자제한 고수(5.15) / 정부-재계 간담회, 출자제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 등 합의(5.16) / 민주노동당, 전경련 해체 요구 긴급 1인 시위(5.17)

2. 과거청산, 할려면 제대로 하자
5·18 희생자 유가족 400여 명, 민주유공자에우범 추구 상경투쟁(5.18) / 의문사진상규명위, 사살사민 압제장한 5·18 진압공수부대원의 고백 사실 발표(5.18) / 전민특위 산하 국제진상조사단장 자격 램지 클라크 방한,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에 미군 양민학살 기소 계획 밝혀(5.19)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요구 성명(5.20) /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에 난항, 국정원 등 공안기관 자료 협조 무성의(5.21)

3. 한총련에 대해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라
소위 '단국대 조직사건', 단국대 졸업생·재학생 5명 구속(5.14) / 서울 서부총련 이경민 의장 서부경찰서로 연행(5.17) / 한총련 기자회견, 이적단체 철퇴 대통령 결단 촉구(5.17) / '단국대 조직사건' 2명 추가 구속(5.18) / 전한총련 간부 박재화 씨, 보안수사대에 연행(5.18)

4. 이스라엘 건국일은 팔레스타인 '제앙의 날'
팔, 이스라엘 건국일 맞아 '제앙의 날' 대규모 시위, 200여 명 사상(5.15-16) / 팔, 이스라엘 북부에서 자살폭탄시위(5.18) / 이, 전투기와 헬기로 보복공격(5.18-19) / 아랍연맹 외무장관, 이와 정치적 접촉 중단 촉구(5.19) /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 분쟁 집중조명(5.18)

5. 미국, 천상천하 유아독존
미 국무부 태평양 담당차관보, 중국에 MD 체제 설득 무산(5.14) / 미국,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재판관할권 주장(5.15) / 북한, 제네바합의 이행지연 경고(5.16) / 미국제안보협력센터 등, 부시 행정부에 북한 핵 재검증 권고(5.17) / 부시 행정부,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의정서 거부 움직임(5.20)

6. 기타
대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국가배상판결(5.8) / 미이라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처벌법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의증인 18명에 이례적 선고연기(5.15) / 서울지법, '경찰은 집회참석을 이유로 노상감금하지 말라'(5.16)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23일(수)

제 18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한국전쟁 시기 및 전쟁 전후에 발생했던 민간인학살 사건 모두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의원들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경구 등)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아래 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 '민간인학살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거창학살'과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한국전쟁 전후 발생했던 민간인학살 전체를 다룰 수 있는 법은 없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는 48년 정부 수립 후부터 한국전쟁 정전협정일까지 발생한 '모든'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족 대표를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소속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유골수습, 위령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법(안)은 또 광역단체장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상규명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정병근 경남

산청 시천·삼장유족회 대표는 "한국전쟁 당시 경남에선 수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생존해 있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김원웅 의원은 "전쟁 중 민간인학살은 제네바, 헤이그 협약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입법 추진이유를 밝혔다. 진상규명대책위의 의원모임은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심대섭]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을 저지른 미군이 민간 국제전범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아래 전민특위)는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부터 18일 사이에 북한을 방문했던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와 6월에 열릴 '코리아국제전범재판소' 일정 및 개요를 밝혔다. 전민특위는 지난해 1월 남북한, 해외 동포가

연합해 결성됐다.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북한의 대표적 미군학살 자료박물관인 '신천박물관'을 비롯해, '5605에국자묘', '400어머니묘', '102어린이묘'(앞의 숫자는 사망자 수) 등을 돌아보는 등 북한 내 미군학살 사건의 증거 자료 및 증언들을 수집했다. 19일 서울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클라크 단장은 "한 북한여성이 미군에 의해 부모형제뿐 아니라 자신의 두 팔까지 절단당했다는 증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남북한 민중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절박한 과제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을 살해하면서 미군이 화학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증언도 방문기간동안 들었다"며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만행을 능가하는 참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민특위는 6월 23일 미국 뉴욕 인터처치센터에서 '코리아국제전범재판소'를 열 계획을 밝혔다. 전민특위는 "전범재판소 재판장은 인도 전대법관 지탕드라 샤르마 씨가 맡게되며, 공동 수석검사는 남측 변호사 변정수(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씨와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소속 북측 법률가 1명, 램지 클라크 씨가 함께 맡아 기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법률가들은 오는 6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전범재판소에 제출할 '남북 공동 기소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범재판소 국제재판관은 조르쥬 헤이그 프랑스 상원의원, 벤자민 듀푸이 전 유엔주재 아이티 대사, 월터 실리만 파스 크리스티 주교 등 14명이 맡게될 예정이다. [심대섭]

5.5 인권영화제 <마지막날>입니다

오전 11시-오후 10시 / 광화문사거리 아트큐브(무료, 선착순)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범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의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사건 자체가 오래되고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00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의문사건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3조(조사의 기간)에 따르면, "조사가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의문사위가 조사를 개시한 84건 중 79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 또한 군·경찰·검찰 등 가해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리란 점 때문에 6개월(최대 9개월)이라는 조사기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황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폐기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정말 폐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이은경 사무처장은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부딪쳐야 하지 않느냐"며 "조사내용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여 가해기관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울역에서 '의문사 제보찾기 및 법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관련기관의 비협조를 국민들의 제보와 양심선언으로 돌파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 이은경 사무처장은 법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 집단을 규합할 것"이라며 "결국 의문사 진상규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의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이 요구되는 주요골자는 △구인, 압수, 수색영장 신청 등 의문사위의 권한 강화 △조사기간 최대 18개월 연장 △공소시효의 정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사면규정 강화 △별치의 강화 등이다. [범용]

● 정보섬 ●

◎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원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 (KBS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 때 : 5월 23일(수) 2시-5시 / · 곳 : 종로성당
· 주최 : 민주노총, 강철구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성전화연합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시타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 회원)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KBS노조는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급휴가 중단 등을 통보했다. 지난 2월 19일 100인위원회의 성폭력사건 실명공개 이후, 가해자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로서의 특별유급휴가가 KBS노조 8대 집행부의 제멋대로식 결정에 따라 두 번째 중단되는 순간이었다.

처음 피해자에 대한 특별유급휴가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내심 놀랐었다. 휴가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그러나 단지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공문을 보내고 피해자가 몇 번씩 고통을 호소해야 했던 상황은, 원칙 없는 휴가조치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일방적 휴가 중단 통보 -- 그 첫 번째 배신은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바로 그 날 저녁에, 두 번째 배신은 언론노조의 강철구 제명 조치 이후에 이루어졌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결여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무원칙' 속에서 KBS노조는 피해자에 대한 휴가조치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성의식은 운동사회라고 다를 것이 없다. 아니, 그러한 무감각함을 '조직에 대한 걱정'이라는 비장함으로 능수능란하게 기려 버리는 운동사회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역겹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서전환"이 고용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안 지켜도 처벌은 과태료 300만원에 불과하다. 운동사회는 한술 더 떠서, 이에 이러한 법 조항 자체를 강그리 무시한다. 하물며 공영방송 노조라는 권력을 가진 이상에야 무서울 것이 없을 게다.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보다 가해자의 앞날을 더 걱정하는 사회가 그들의 폭력을 얼마든지 용인해 줄 테니까 말이다.

KBS노조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과 상처, 끝없이 지속된 싸움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완전히 치유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다. 따라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조직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피해자의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해자 격리이며, 이는 호의도 은혜도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인 것이다. 운동사회여, 자신의 무감각과 무원칙을 부끄러워하라.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23일 종로성당에서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원칙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열었다. 100인위원회 시타 씨는 "강철구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KBS노조·민주노총 등 운동사회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원칙이 없다고 느꼈다"며 기획의도를 말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재확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황혜정 부소장은 "키스한 것도 성폭력이라고 억울해 한다면, 억울하다는 것은 가해자의 느낌이지 피해자의 느낌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성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성폭력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 이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너 왜 여관에 갔니?' 라고 묻지 말고, 가해자에게 '너 왜 여관에 가자고 했니?'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의 주장은 무조건 옳고 가해자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발생은 구조적인 문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은 "운동적 신뢰관계가 곧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과정"이었다고

2001년 5월 24일(목)

제 18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명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는 가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민연연에 계속 야 했고 가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한달 후 다시 고통을 호소했던 것. 결국 가해자 실명은 공개되고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조석 씨는 "부끄럽게도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공개·비공개에 휩싸여 오히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김혜란 사무처장은 "강철구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당시 KBS 노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 것은 '성폭력 문제가 사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이는 공·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남성중심적 사고에 피해자들조차 자유훈지 못했다는 반증.

지난 10일 KBS노조 성폭력 사건의 주인공 강철구 부위원장이 언론노조로부터 제명된 후, 급속연맹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계속해서 언론노조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에는 50여 명이 참석하여, 강철구 성폭력 사건 이후 성폭력에 대한 운동사회의 관심을 보여줬다. 시타 씨는 이날 토론회를 "개별 성폭력 사건들의 경향이 다른 가운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싸워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하고, "운동사회 내에서 반성폭력 내규 제정운동을 벌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용)

● 정보섬 ●

◎ 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 때 : 5월 24일(목) 2시-4시30분 / ·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 발제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 발제 2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정의 방향 (이은우, 민변)
-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 · 문의 : 765-4708

5.5 인권영화제 폐막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이 6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23일 폐막됐다.

인권영화제가 진행된 광화문 아트큐브의 좌석이 77석에 불과한데도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연인원 4천여 명에 이르렀다. 5.5 인권영화제에서는 과거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작품 <철레전투> 연작, <쇼아> 연작 등 19편의 '다시 보는 명작선',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을 성찰하는 이슈포커스 11편, 한국영화 3편, 애니메이션 8편이 상영됐다.

인권영화제 김정아 총기획은 "인권영화제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필요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준비한 것에 비해 관객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권영화제를 내실 있게 조직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인 김 총기획은 "치밀하게 기획해서 대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기 위한 형식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보선)

◎ 왜 아트큐브에서 영화제를 했는가?

-영화제 시기를 봄으로 당기고 규모를 작게 하고 방향모색을 하자는 것이 5.5 인권영화제의 의도였다. 영화제의 기획의도에 맞게 작은 곳에서 연 것이다.

인권영화제에 대한 객관적인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물론 이 점은 여러 소규모 영화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반영일수도 있기 때문에 100% 인권영화제의 성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올 영화제에선 사랑방에서 준비한 것에 비해 관객들 반응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다. 이런 반응을 볼 때 인권영화를 올해와 같이 규모를 줄여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이슈포커스에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 동안 인권영화제를 보면서 한가지 이슈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프리카 분쟁, 이주노동자 등 다룰 수 있는 이슈는 많았지만 오슬로 협정이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성, 오랜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작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

◎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슈포커스와 관련이 있다고 항의시위를 조직하는 것 등은 생색내기용 같다. 오히려 세미나, 포럼 등의 기획이 있을 때 이슈포커스에 상영된 작품을 재상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의시위, 성명 등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아쉬운 점은?

-상영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슈포커스도 2회 이상 상영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관객과 제대로 소통을 못한 것이 아쉽다.

팔-이스라엘 이슈를 다루면서 세미나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관객들이 받은 감동, 문제의식을 그냥 개인차원에만 머무르게 했다.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지 못했다.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경찰청은 22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의 한 분파인 '단국대 활동가'라는 조직을 구성해 활동해 온' 단국대 학생과 졸업생을 포함, 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교재와 문건에 대해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 이적문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3일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조직음모 분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한총련 출범식에 발맞추어 조직된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으로 한총련 이적규정을 유지존속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앞서 18일 '단국대 학생들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혐의로 경찰청 보안4과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동 대공본실은 새벽 3, 4시까지 심야조사를 강행했고 '법률에 정해진 구금장소로 피의자를 이송시키지 않고, 홍제동 대공본실에 구금시키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장선옥(경영정보) 학생에 대해 "서울 시경에서 조직해 놓은 자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들이밀며 허위 진술을 강제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지장을 찍게 하는 등 강압적이고 불법수사를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뜻을 밝혔다.

한편 5월 21일 오후 2시경 6기 한총련 손준혁 의장(98년 영남대 총학생회장)은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남총련 집회에 참가한 뒤 광주 5·18 묘역으로 가던 중 시내버스 안에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돼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김영원)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청와대가 보도자료에 '공포문 서명'에 참석한 인사들을 소개하면서 각 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이름을 명기해 마치 소속단체가 인권위법에 찬성하는 양 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종로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평가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가집회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개인명의 문건을 판내 기사실에 배부해 "1인시위가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이 확고한 나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정 서장은 또 "이어가기 방식이나 일정 간격으로 건물을 에워싸는 방식의 1인시위는 '2인 이상의 집회'가 분명하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실정법을 교묘히 이용해 집회금지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은 국가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공권력 집행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정 서장은 심지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온다면 거리는 온통 1인 시위자로 가득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종로경찰서는 이미 명백히 1인시위를 철폐한 적이 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13일 1인 시위중인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김순환(40) 씨를 연행해 즉심에 회부한 일이 있다. 당시 김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이 사랑했다'는 상징으로 '미이라 복장'을 한 채 시위 중이었는데 "시민들에게 혐오감

을 준다"며 경범죄 혐의를 씌워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 경범죄는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이라 해도 연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경찰은 김씨가 신원을 밝혔는데도 강제 연행하여 당시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1인시위 대부분은 이른바 '집회금지 장소'에서 진행된다. 대사관이나 국회 또는 법원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현행 집시법 상 집회를 열 수가 없다.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악용해 회사 본관에 대사관을 유치하고 회사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런 이유로 사회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변칙적인' 1인시위를 개발했다.

2001년 5월 25일(금)

제 18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문건 소식을 접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종로시장의 망발에서 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줄까 보다는 눈엣가시 같은 집회시위를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에만 몰두하는 일그러진 경찰의 자화상을 확인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종로경찰청을 책임질 자질이 없는 서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총무도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천박한 집회시위관을 갖고 뻔뻔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1인시위는 집회금지장소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나라만의 시위형식으로 이는 결국 집시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남 총무는 또 "말로는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이 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대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건당 50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건당 300원 - 신용 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건당 600원 - 연봉 등 소득정보. 지난 4월 12일 불구속 입건된 19세의 해커 김모군이 신용카드결제승인처리업체 홈페이지에서 빼낸 780만여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매가격이다. 김모군은 이전에 80여개 업체에서 6백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있어, 한 개인이 1천4백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해킹한 셈.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3을 초과하는 인원이다.

이 사실은 24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린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에서 언급된 사례 중 하나다. 토론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가 개인정보 유출실태를 진단하고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한 서경대학교 정영화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지역별 개인정보은행 창설 △공공부문 정보담당관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합적인 법률이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개인정보가 통합되고 독점화되는 경향에 대해 반대여사를 명확히 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윤현식 씨는 "국가가 행정·금융·국방·공안전산망 등 분야별로 자원정보를 전산처리하고 이를 연동시켜 최대한 공동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윤씨는 이 모두가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

석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윤씨는 주민등록증이 없어 여권발급을 거부당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민등록법 폐지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 윤씨는 "자신의 정보를 소중히 여길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하며, "카드를 해지하거나 회원을 탈퇴할 때 '남아있는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범용]

금속연맹, 「불법행위 고발센터」 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노조)은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층,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터」(아래 고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기, 울산, 대구 등 금속노조 산하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각 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소장을 담당하게될 고발센터에서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중소기업사업장, 여성노동자들 모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발센터는 각 사업장에서 벌어진 불법 처우 접수 사안을 금속노조 명의로 고발할 방침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고발센터에서는 지역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설문조사, 간담회 및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금속노조가 고발센터까지 열게 된 이유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며 감소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52% (6백74만명, 2000년 8월 현재)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파견근로와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까지 합한다면 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지난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 검토 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비정규직이 노동권 소외계층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75%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23% 이상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각종 성차별과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어 2, 3중의 고통을 겪는 실정이다.

이런데다 최근 들어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파견대상업종 전면 확대 및 기간 연장(3년)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주는 '해고보상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중이어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더욱 후퇴할 전망이다.

금속노조 배현철 조직국장은 "이제는 비정규직·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들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내고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함께 해야 할 때"라며 "고발센터가 강제된 구조조정과 악화일로에 있는 노동권 후퇴를 막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했다.

금속노조는 고발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 등을 1개월 단위로 집계하고, 외부에 공개해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현재 지역본부에 설치된 고발센터는 추후 하청업체가 있는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금속산업연맹 전화 02-712-4252 [심대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26일(토)

제 18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빈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당연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계획하고 집행할 주무기관 △위원회 최종견해에 관한 홍보계획 △사회권 각 권리별 이행계획 △국가보안법과 방위비 지출 등 사회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사회권의 각 권리별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한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개질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

을 신장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마영삼 과장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권고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하면서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단순한 립 서비스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영원)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어느 날부터 '나홀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한데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정식'이란 걸 몰라서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차고 들 수 없는 금단의 땅에 발 한번 붙이기 위해, 걸려들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는 거미줄 법망을 피해 마련한 궁여지책인 것이다. 후자는 평화시위의 모범이자 새로운 집회문화라고 치켜올리기도 했지만 1인 시위는 분명 한데 모일 수 없고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에 불과하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숨길 수 있다면 결코 필요치 않은 인공호흡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일개 경찰서장에게 때이게 됐다. 정광섭 서울 종로서장이 "변형 1인 시위는 2인 이상이 참가한 집회가 분명하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1인 시위마저 막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삼보일배로 청와대까지 가겠다고던 종교인들을 가로막고 김영삼 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에게 불법이라며 가로막았다. 아예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사소한 메모쪽지 하나도 대서특필되는 정치인과 재벌들이 이 권리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의사표현의 효과적인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뿐이다. 집회·시위에 의한 의사표현은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이다.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외면 받은 사람들의 유일한 타종 수단을 박탈하려 하는가? 우리 사회의 병폐와 처방을 얘기할 수 있는 '공공의 광장'을 폐쇄하려 하는가?

경찰이 애지중지하며, 많은 시민단체가 1인 시위로 비껴가려 했던 집시법을 똑똑히 보자. 91년 노태우정권 때 주요내용이 개정되고 98년 일부내용이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은 금태를 돌렸고, 주요 기업은 외국공관 유치자전을 펼쳐 1백미터의 경계선을 도심 전역에 설정하여 집회·시위로부터 달아났다. 그 막대한 골목에서 치켜든 1인 시위 피켓은 그 질박성은 인정될지 몰라도 진짜 싸움은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개 경찰서장이 나서서 우리에게 그 점을 깨우쳐 주었다. 썩어빠진 집시법의 문구와 씨름하느라, 대수술에 나서느냐는 결론은 우리의 몫이다.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사정위원회 제38차 노사관계소위에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와 함께 교수노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완상, 아래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 김홍구 사무관은 "교수노조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여론이 나쁘면 실정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의도이다. 실정법이 헌법에 우선하는 순간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준) (공동준비위원장 최갑수 등)은 "교수노조의 건설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인 교수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수의 노동기본권 회복 문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

한편, 교수노조(준) 노중기 사무국장은 "전교조 결성 당시 교육부가 여론몰이로 탄압"했던 예를 들며,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수노조(준)이 교육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4월 17일자 교육부의 공문 때문이기도 하다. '소속 교원에 대한 교수노조 관련 불법행동 자체

지도 및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교육부는 교수노조와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교원으로서의 직분을 벗어난 것으로 △교원의 품위와 권위를 손상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학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묘사했다. 노동을 천시하고 노조를 거북해 하고 있는 것.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25차 회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월 1일 회의에서 정부 대표 외교통상부 감경화 심의관은 "국

민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내세워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를 정당화했다. 감 심의관은 이어 "교사와 공무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발언, 노조결성이 교원의 품위와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교육부 발상을 그대로 대변했다.

교육부는 교수노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6월 한달 동안 기존 계획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어 일반인과 교수를 구분하여 여론을 조사하고, 우선 노사관계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사항목에는 교수노조 허용에 대한 찬반 질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법용)

〈청소년단체 탐방〉②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찾으십니까?

"민주적인 사회는 민주적인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육이은(19) 씨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우고 실천한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 갈테니까요"라고 말한다.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민주화를 요구하며 지난 해 12월 출범한 학생연합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관련기사 본지 2000년 12월23일자).

학생연합은 95년, PC통신을 통해 학생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했던 최우주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고등학생복지회를 모태로 한다. 현재는 전국에 800여 명의 회원을 둔 전국적인 청소년인권 단체로 광주, 부산 등에 지부가 만들어져 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폭발적 지지와 호응 속에 진행된 두발자유화 운동은 중·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학교내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학생연합과 같은 자발적 청소년 단체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육이은 씨는 "학교운영에서 학생참여의 통로가 전혀 없고,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재 학교의 문제는 나이를 이유로 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며 교육을 빌미로 한 인권권리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학생연합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회 회칙의 개정'과 '학교운영위의 학생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연대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칙을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청소년 인권 각 분야에 대한 내부 토론회 △인권교육과 청소년의 시각으로 본 인권관련 소식이 담긴 월간지 <예코>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 할 때, '이게 무슨 인권이냐'라는 어른들의 반응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무덤덤한 반응이 때때로 정말 속상해요"라며 활동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육이은씨는 청소년이 스스로 인권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권교육이면서 동시에 인권운동 같아요"라고. 전화번호 02-755-8025 (고근예)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해산했다.

공대위는 25일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활동평가서 작성 등 공대위 청산작업은 간사를 맡았던 새사회연대 등 3개단체에 위임됐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29일(화)

제 18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담·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제도’(아래 전자보험증) 도입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4월부터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공공연하게 전자건강보험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벌어지는 부당·허위 보험료 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예산 상태를 개선해준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4~5월을 지나며 여러차례 전자보험증 도입방향을 언론에 공개했고, “건강보험증이 신용카드와 연계된다, 보험증에 개인병력(病歷)이 기재된다”는 등의 예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사업설명회도 열어

또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 장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자보험증 사업을 추진하려는 4개 컨소시엄들이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전자보험증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전자보험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사회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회보험연구센터(아래 연구센터)도 지난 1월부터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결과는 6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현행 건강보험증에 기재되는 정도의 정보만을 전자보험증에 실는 방향으로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해 전자보험증 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전자주민카드 문제점 그대로

한편 일련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계획을 전해들은 사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전자보험증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등 과거 전자주민카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부담 청구의 대부분은 진료비 부풀리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기관과 같은 경우, ‘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속이는 검사료 청구’, ‘환자와 보험 공단에 진료비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중청구’ 등으로, 약국의 경우 ‘싼 약을 투약하고 비싼 약을

투약한 것처럼 속이는 대체청구’ 등의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진료비 부풀리기는 대부분 진료비 내역을 입력하기 전에 일어나므로 전자보험증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물론 ‘처방전 위조’와 같은 부당행위는 상당부분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1조원의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 전자보험증 제도를 꼭 도입할 필요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전자보험증이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험증을 꼭 소지해야만 하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보험증을 안 갖고 와 나중에 보험증을 제시하거나, 말로 보험증 제시를 대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실제 전자보험증 도입시 실효성을 보장할 근거도 취약하다. 이미 전자보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카드 제시율이 60%가 채 되지 않으며 카드 발급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 전산화 업무에 소요되는 의료인의 비용,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이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다.

전자보험증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사회진보연대, 민중의료연합 등은 29일 오전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보험증 제도 검토에 대한 전면 백지화”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심대섭]

● 정보섬 ●

◎ 김대중 정권 3년 실정토론회

- 때 : 5월 29일(화) 오후 2시 / · 곳 : 기독교회관(구관) 2층 대회의실
- 내용 : 민중생존권의 총체적 파탄,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등에 대해 평가
- 주최 : 전국민중연대(준) / · ☎ : 02-841-4380

◎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 · 곳 : 종로성당 강당
- 발제1 :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 발제2 :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변호사)
- 주최 : 평화인권연대 등 9개 단체 / · ☎ : 02-851-9086

◎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

우리 국민들이 입이 닳도록 외우는 시조가 있다. 조선 후기에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南九萬)의 시조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대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나니.”
아이들 참고서에 보면 이 시조에 대해서 “농촌의 목가적인 풍경을 훌륭하게 묘사한 시조이다” “농가의 부지런한 생활을 일깨워 주고 있다” “백성들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강조하는 뜻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김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써야 정답이다.

이 시조가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양반이 아랫목에서 느즈막히 잠을 깨었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떠있고 종달새도 우짖고 있다. “아이쿠, 내가 늦잠을 잤구만. 그런데, 저 나이 어린 머슴놈도 아직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놈이 오늘 언덕 넘어 넓은 밭을 전부 다 갈아야 하는데, 그놈도 아직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도 덜도 없이 바로 이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같은 상황을 머슴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관축이 되게 일을 하고, 황토바다에 거적매기 한 장 깔려있는 머슴방에 와서 그냥 쓰러져 자는 것이다. 새벽이 올 때마다 이 나이 어린 머슴의 가장 큰 소원은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것이었음도 모른다.

머슴의 ‘관점’으로도 같은 상황을 ‘농촌의 목가적 풍경’이라고 한가롭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머슴의 관점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강요할 맘은 없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올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도 한 번 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시조에 대해서 백번 쯤 설명할 때 단 한번이라도 “같은 상황을 머슴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은 머슴의 입장에 서 볼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중요한 사실을 천번에 한번, 만번에 한번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제도권 교육이다.

그러나, 그 ‘음모의 시스템’ 속에서 십수년을 교육받은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나몰라라할 수밖에 없다. “한번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우리 사회에서 훈련받은 캐리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캐리어사내하청노조를 무참하게 짓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찌들어온 그 음모의 시스템을 분쇄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그 ‘가면의 거짓’을 뚫고 솟아나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주간인권호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1. 안동수씨, 인권위원하고 싶다? 서천소가 웃을 일!
“정권재창출 위해 모든 노력” 문건 파문, 안동수 법무부 장관 취임(5.21) /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탁’(5.23) /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 /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5.25)
 2. 경찰이 심심한가 봅니다. 별 걸 다 트집잡고...
정광섭 종로경찰서장, “1인시위 위법” 주장, 서울경찰청도 맞장구(5.24) / 경찰, 문규현 신부·수경 스님 삼보일배 청와대 행 시위 가로막아(5.24) / 노랑진경찰서, 김영삼 씨 집 앞 1인시위도 가로막아(5.25)
 3. ‘대우정상화’ 명목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경찰, 대우노조 감시들통, 노조영상패가 촬영(5.21) / 노무현 의원, 대우차노조에 “부평공장까지 팔리도록 협조하자”고 주장(5.22) / 대우노조, 경찰사찰 비난하고 4·10 부평만행 부상자 치료요구(5.22) / 대우영상패, 대우정상화 추진위원 경찰도움 받아 빠져나가는 장면 공개(5.26)
 4. 갈수록 깊어지는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국여성노조, “용역 여성노동자 월급여는 평균 49만6천원”, 87.8%가 60만원 미만, 법정최저임금인 42만 1490원 미만 22.9%(5.22) / 금속산업연맹, ‘불법행위 고발센터’ 설치(5.22) / 한국노사연, “여성노동자 4명중 3명이 비정규직”, 정규직 139만명(26.7%) 비정규직 382만명(73.3%) / 남자 정규직 401만명(51.5%) 남자 비정규직 377만명(48.5%)(5.24) /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출범(5.26) /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 신설(5.27)
 5. 사회경제적 권리 운운하면서 새만금 강행? 가웃...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사업 반대” 절두산 절벽시위(5.23) / 정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발표(5.25) / 각계 인사 1445명,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반대 시국선언(5.25)
 6. 인권침해자에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도 된다
서울대 교수협, 유엔에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 문건 제출(5.21) / 광주시, “5·18 공수부대원 매장 증언 확인작업 하겠다”(5.21) / 전민특위, ‘미군만행국제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및 ‘코리아 국제전법재판소’ 계획 발표(5.21) / 김원웅 의원등,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특별법 제출 움직임(5.22)
 7. 전서관에는 걸어도 되지만 인터넷엔 안 된다?
알몸사진 게재 교사 구속영장 청구(5.27) / 법원, ‘알몸사진’ 구속영장 기각(5.28) / 인권·사회단체, ‘알몸사진 게재한 교사에 법적·물리적 제재 반대’(5.28)
- ◎ 기탁 ◎
어울침도노조시대 마감, 54년만에 민주과후보 당선(5.21) / 전남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사찰(5.22) / 5.5 인권영화제 폐막(5.23) / 민주노총 등, 성폭력 해결 원칙 토론회(5.23) / 몇몇 여야 의원, “한정위헌·헌법불합치”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개정 추진(5.24) / 인권단체, ‘유엔사회권위 권고 이행계획’ 공개집의(5.2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5월 30일(수)

제 18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구타 계속되면 경찰청 앞에서 자살”

의경, 인터넷에 제보, 탈영·정신과 치료 반복

〈속보〉 “오늘도 개처럼 맛있다. xO O를 죽여버리고 싶다. 씨발놈들, 중대장도, 서장놈도 다 죽여버리고 싶다. 미치겠다. 어떡하지? 엄마.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3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홈페이지 제보상담마당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공개된 글에는 수원남부경찰서(서장 황성채, 아래 남부서)에서 벌어진 의경 구타 사건들이 가해자·피해자 실명을 포함해 상세히 서술돼있다. 자신을 ‘수원남부경찰서 방법순찰대 대원’이라고 밝힌 글 게시자는 A4용지 2매

반 분량의 게시물에 모두 8건의 구타 사건을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글에는 “구타·학대가 심해 상습탈영 및 정신병자가 속출하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구타 근절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앞에서 분신 자살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를 본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남부경찰서 방법순찰대에 대해 구타 등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x모(22) 의경은 고참들의 잦은 구

타에 못 이겨 지난 4월6일 탈영했다가 귀대, 경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x모(22) 의경도 가혹행위를 피해 5번이나 탈영과 귀대를 반복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x모 의경은 “일상적 구타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탄식했다. 그러나 이들은 입대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대학 재학 중 자원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타-탈영-귀대-정신과 치료

게시된 글에 대해 남부서 관계자는 구타 관련 사안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라고 시인했으나 진상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남부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29일 “인터넷에 글이 올라간 사실을 안 직후부터 IP주소를 추적하고, 구타 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받는 등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소장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경찰이 내부적으로는 일상화된 폭력에 노출돼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미 보편화 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내 구타 행위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또 “경찰내부의 일상화된 폭력은 곧바로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습관화를 초래한다”며 이는 “일반 피의자나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제발 방지를 위해서도 구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사건 공개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보선 (심대섭)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 개선에 초점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29일 오전 군의문사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화,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가 탄생한 것. 천주교인권위와 군의문사 유족 등이 참가해 설립된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한해에 사망하는 사람이 3백여 명 △탈영 1천5백여 명 △5천여 명의 정신질환자가 새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상당수의 유족이 군의 ‘사고결론’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호소할 곳이 없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이어 “국방부는 구타 등 가혹행위 예방을 강조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99년 발족한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폭력을 근절하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론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9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잡혀있는 특별조사단 활동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군의문사/군폭력 신고전화(02-777-0643)를 운영, 접수사건에 대해 부대를 방문하는 등의 조사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안원영 활동가는 “우리 사회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강조, 군대 내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군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꼬집었다. 안 활동가는 또 “군 폭력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우리의 활동자체가 예방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보선)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하우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한총련 대의원은 평생 공안당국의 사냥감이 돼야 한다. 과거 대의원이든 현재 대의원이든 혹은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구애받지 않는다. 이번 달만 보더라도 이 사실은 쉽게 확인된다. 지난 14일 조직사건으로 단국대 재학생 및 졸업생이 연행됐고, 서부총련 이경민 의장이 17일 체포됐으며 21일 6기 한총련 손준혁 의장(98년 영남대 총학생회장)도 체포됐다.

9기 한총련 최승환 의장은 이에 대해 “현 시기 국보법 철폐투쟁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은 한 몸”이라고 강조하고, “한총련 합법화가 올해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대한 정부입장은? 별다른 말을 들은 적이 없다.

●9기 한총련의 핵심과제는? 첫째는 통일운동, 둘째는 한총련 합법화 투쟁, 셋째는 학원자주화 및 등록금 투쟁이다.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방안은? 현재 한총련 합법화, 수배자 해제 등에 동의하는 청년학생 및 재사회단체의 서명 및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신문광고도 낼 것이다. 이후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검찰과 경찰, 더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사회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물론, 이미 예정된 6월 1일 국회 앞 집회처럼, 기본적으로

● 정보샘 ●

◎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 곳 : 종로성당 강당

· 발제1: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 발제2: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변호사)

· ☎ : 02-851-9086

로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한총련이 벌여 온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평한다면?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국보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우리 운동의 성과다. 다만 지금까지 재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다양한 여론자업을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신경을 쓸 것이다.

●한총련을 탈퇴하는 대의원이 있다.

우선 공안탄압에 못 이겨 탈퇴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총련 재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총련에서 탈퇴했던 인천교대가 올해 하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총련에 다시 가입한 바 있다. 또한 학생운동에 대한 견해 차이로 탈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안별 적극적인 공동투쟁을 벌임으로써 극복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하자, 최 의장은 지그시 웃으며 “한총련 출범식에 꼭 오십시오”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아들·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 순박하게 웃는 최 의장의 모습 어디에도 ‘이적규정’은 없었다. (범용)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월 29일자 ‘제2 전 주민카드 도입 검토’ 중 기자회견 부분을 성명발표로 바로잡습니다.

수령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다음달 1일, 제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한총련)이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관련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판결할 때 주된 논거가 ‘연방제통일’ 강령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한 9기 한총련이 ‘이적단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직후 대검공안부는 “한총련이 강령 일부를 바꿨지만 이는 대외적 위장 전술”이라고 강변했다.

공안당국은 지난 달 25일,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배민균 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며칠 뒤에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배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된 적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조치”라는 일부의 지적이 무색하게 공안당국은 곧 속셈을 드러냈다. 요컨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묶어두기 위한 교육지책”이라는 것.

공안당국은 한총련이 이적단체이기를 원하지만, 9기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강령을 삭제했다. 9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매년 새로 구성되는 단체이며, 이적성에 대한 판단도 매년 새로 해야한다. 그런데, 9기 한총련만을 때어서 보면 이적단체로 묶기가 쉽지가 않다. ‘고심 끝에’ 공안당국은 해법을 찾아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라 판결한 5기 한총련과 9기가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우기는 것. 이를 위해 이전 기수에서 이적단체구성으로 처벌받은 배 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기수에 관계없이 한총련을 한 몸으로 보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한 이런 행태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이에 ‘궁예의 관심법’까지 들고 나온다. 지난달 25일,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한총련 주장중 상당수는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한총련 주장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다. 또 무엇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이광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적 경찰투입 요청

생선회칼·야구방망이·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강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강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주)효성에 일당 4만원에 동원됐다.

이전에도 (주)효성은 구사대와 용역강패들을 동원하여 효성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던 최상국 부위원장 등 4명을 폭행했고, 지난 24일 공장을 순회하던 조합원 40여 명을 구타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용춘 조합원을 실명위기에 이르게 했다.

(주)효성의 노조탄압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주)효성은 박 위원장 등에게 3천7백61만원, 효성노조에도 3억7천2백6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임금과 조합비를 일방적으로 가압류했다. 또한 박 위원장 등 21명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상진간부 5명을 해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해 노조를 탄압했다. 현재 박 위원장 등 3명은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상태.

더군다나 노조총회 기간에 맞춰 인양공장 가동을 중단,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막았다. 현장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참문마다 쇠창살을 설치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도 모자라 구사대와 용역강패를 동원, 연일 폭력을 휘둘렀다. (주)효성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는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노동자를 탓하고 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자중)는 효성

울산공장을 직접 거론하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정부를 협박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 아래 경총)도 "노조의 초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본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경찰과 구사대에 의해 파업농성 현장을 무참히 짓밟힌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업체로부터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길거리로 내몰릴 형편이다. 지난 28일 캐리어에 하청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주)청우·대명·캐리어방열 등 3개 업체는 조합원들에게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이 있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앞선 21일 캐리어는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28일까지 △2년 넘게 고용해 온 파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도급위장한 불법파견사업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이 캐리어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낸 진정결과에 따른 것.

그러나 캐리어는 "우리는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 파견이 아니"라며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장에 파견인력을 투입하는 불법행위도 중단하지 않고 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모두 무시했다. 이에 광주지방노동청은 29일 캐리어를 파견법위반 혐의로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캐리어하청노조 송영진 위원장직무대행은 "캐리어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하청업체들이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 같다"며 "시정을 하겠더니 노동자 일 자리를 빼앗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캐리어는 하청노조가 4월 16일 파업에 들어간 다음부터 지금까지 7개 이상의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대체 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캐리어하청노조는 앞으로 민주노총 등 각급 노동·사회단체들과 무더기 계약해지와 관련한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명신·광진·한보 등의 하청업체들도 폐업신고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이 속한 업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회사 문을 닫게 됐다. 캐리어 사측이 앞으로도 광주지방노동청의 명령을 어기고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40일 넘게 파업을 해온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생계 유지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심대섭)

2001년 5월 31일(목)

제 18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연의 책무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경총은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가처분제도,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중추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다.

민주노총은 30일 이에 대해 "경찰투입을 선동하기 전에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울산남부경찰서 박광순 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병력 투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범용)

<기고>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

신형록(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대표)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어김없이 들숨과 날숨으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새만금 갯벌엔 무수한 생명들이 얼키설키 모여있습니다. 풀계, 농계, 갯지렁이, 바지라, 백합, 알락꼬리마도요, 민물도요, 짱뚥개, 망둥어, 숭어, 전어, 조기...

인류가 지구에 나오기전부터 자연질서를 몸여 익히며 살아온 생명들이 바다의 생명활동에 자신을 맞추고 자연에 시간에 자신을 맞추며 열심히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엔 자연질서와 시간에 자신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다른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자연을 존경하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인류가 머리가 발전하고 편리를 추구하자 자연질서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약탈해 탐욕을 늘려갔으며, 인류의 생명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조화와 경외심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인간의 오만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바다의 들숨과 날숨을 끊어놓는 행위이며, 동진강과 만경강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조상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삶 터를 한 번에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오만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 삶 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생존과 공동체는 관심도 없습니다. 갯벌과 바다를 의지하면서 살던 순박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살던 갯벌에서 쫓겨나야 하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떠돌아야 합니다. 눈뜨면 보던 바다와 산이 아닌 낯선 곳에서 떠돌아야 하는 아픔을 저들은 알거나 할까!

"단 한번만이라도 주민들에게 묻고 사업을 했어도 이리저리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는 않았을텐데..." 계화도에서 5대째 살면서 어업을 하는 김한태 씨 말입니다. 개발사업은 항상 지역주민을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보상금 얼마주면 끝이라는 생각이 주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보상금은 순박한 주민들에게 형제, 이웃과 등 돌리고 싸우게 하는 악마 같은 놈입니다. 담없이 살뜰하게 지내던 이웃들을 돈관계로 삭막하게 만듭니다. 새만금사업 보상금은 순박한 어촌을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갯벌생물들도 전과 다르게 다 돈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돈으로 만들어 놓은 새만금간척사업은 사람과 갯벌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강변합니다.

갯벌에 나가면 세상시름 다 잊고 생명의 신비함에 항상 감동하신다는 순덕아줌마! 순덕아줌마는 새만금사업으로 갯벌이 없어지면 펴해야하나 날이면 날마다 한숨입니다. "갯벌은 차별이 없어요. 배우나 못배우나 남자나 여자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공평하다"는 총무님 형수!

이런 분들의 삶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새만금사업을 하겠다는 정부에게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할 정부가, 아니 살게 가만히 놔두어야 할 정부가 왜 이리도 국민을 괴롭히고 길거리로 내모는 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지역 노동조합이 생겨 노동운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99년 1월 출범한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 성별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3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규약을 변경,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위원장 임미령, 평등노조)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미조직된 중소기업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노조가 없는 탓"이라며 평등노조 필요성을 설명했다.

평등노조에는 현재 정보통신·카드사·호텔·미용서비스·건강보조식품·요식업종·학교·이주노동자 등 8개 지부가 있다. 이들 지부 노조원들은 거의 파견·하청·계약직 등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또 기업별 노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업종들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환경도 여전히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다. 평등노조는 또 '불법취업'한 이주노동자들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부(지부장 이윤주)가 지난 5월 26일 발족, 한국에서 최초로 외국인 노조가 된 것. 다른 지부 노동자들처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인간대접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면으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해 9월 결성된 건강보조식품지부 지부의 경우 6~7명이 한 조가 돼 회사차로 이동을 하며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측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10만원 정도 교통비 외에 기본급은 한푼도 없고 점심도 차안에서 해결하는 등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근로환경이다. 학교 지부 중 모 학교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하거나 일요일, 휴일까지 일해도 특별수당을 못 받는 등 근기법도 제대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노동환경개선 등을 내용으로 단체를 협상을 갖기로 약속했지만, 학교측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야유회를 가버렸다. 임 위원장은 "노조가 없고 사회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탄했다. 다른 지부의 노동환경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 위원장은 사업장 이름과 노조원 이름이 보도되는 것을 꺼려했다. 보도가 되면 사측에게 노동자들을 탄압할 구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며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전면적용을 위해 힘쓰겠다"고 당찬 결의를 밝혔다. 더불어 "현재 활동가가 없어 이런 일을 하는데 대단히 어렵다"며 "평등노조에서 '함께 할 동지를 찾는다'는 말을 꼭 넣어달라"고 강조했다. 전화 : 02-837-8355 (김영원)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2달여 동안 피진정한 얼굴도 보지 못할 서면조사 우선주의, 관련자들의 거짓을 말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내용 등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거나 예방하는 데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3일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다 물러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노리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1일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인권위원 자리를 부탁하고 다녔는데 장관을 시켜주니 감격했다"며 인권위원 인사청탁 사실을 고백(?)했다.

2.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노동3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같은 노동강도로 일하면서도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보험모집인 노동자에게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리 뒤에 숨어 부당해고를 구제할 수 없다고 '사형선고'(5.2)를 내렸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이 대우캐리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명령하자 사내하청회사는 폐업을 선언하고, 188명에 대해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미 다른 사내하청회사를 통해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우캐리어는 광주지방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5.29)되기까지 했다.

3. 유엔 사회권위원회,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사회권에 경종을 울리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보고서 심사를 하고, 매우 감도 높은 권고(5.11)를 했다. 심의 내내 한국정부의 인권철화 빈곤을 질타(4.30, 5.1)하던 사회권위원회는 경제논리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언급하면서, 고용불안·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교원에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권연대회의는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을 요구(5.25)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 서명식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촉진하는 '삼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는 김 대통령은 '지행합일'을 포기한 사람으로 보인다.

4. 야만의 현장, 대우캐리어 - 노동자 쇠파이프 폭행·188명 무더기 해고

'4·10 부평만행'에 어떤 경찰관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 광주에서 경찰이 한 노동자를 차 안에서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용역강제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개폐듯이 패는 데도 방관(4.30, 5.1)했다. 또 경찰은 피해노동자의 가족에게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 초안'으로 사건을 유야무야(5.14)하려고 했다. 광주 캐리어는 용역강제를 동원해 캐리어 사태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까지 폭행했다.

'4·10 부평만행'의 피해노동자들은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불모로 잡혀있다(5.9). 이무영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발언과는 상관없이 인천지방경찰청은 "요우면 손해배상 해라.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목을 뺏뺏이 세우고 있다.

논평

-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5.5)
- 사회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5.12)
-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5.19)
- 1인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5.26)

인권이야기

- 공안정국 국관을 집어치워라! -하종감(5.3)
-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최민식(5.8)
-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엄혜진(5.15)
- 5월을 생각하며-정태욱(5.22)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 -하종감(5.29)

청소년단체 탐방

- ①'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을 찾아(5.19)
- ②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5.26)

기획-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 ④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5.3)
- ⑤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대상(5.5)

법원 판결

-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을 막지 못한다(5.16)

기고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방청기-최정민(5.18)
-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자들-시타(5.23)
-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신형록(5.31)

인권하루소식

2001년 6월

(제1866호 - 제1886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1일(금)

제 18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금단의 벽은 허물어질 것인가? 수십년간 군사적 대치의 세월을 보내온 탓에 누구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병역제도'. 올해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31일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양심·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이를 위한 군 대체복무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주장됐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결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인의 부담으로 방치돼 왔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약 1천6백 명. 해마다 4~5백 명의 젊은 이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들이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기독교단에서 '이단'으로 취급되어 온 소수종파였기에, 문제가 방치·외면되어 왔다는 것. (→ 2면에 관련기사)

조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특정 종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도, 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며, "모든 평화주의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라고 못박았다. 조국 교수는 이어, 1943년 미 대법원의 '바네트 판결'을 소개했다. 판결의 요지는 "다들

수 있다는 자유'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룰 수 있다는 자유"라는 것. 즉, "국가준립의 핵심적 사안인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는 소수자집단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곧 소수자 인권 의 문제"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공론의 대상이 된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 역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이 순

간에도 양심을 지키려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 변론을 맡고 있는 임종인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질타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와 싸우려는 게 아니고 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영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며 "병역특례자를 포함해 이미 7만2천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진우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는 "시국관련 양심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수감중인데도 이제야 공론화된 점에 대해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소수자에 대한 배격, 격리보다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면에 이어짐)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우리와 달리,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래, 유럽에서는 1949년 독일헌법, 1976년 포르투갈 헌법, 1978년 스페인 헌법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동구권에서도 러시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헌법에 명문조항이 생겼고, 브라질, 우루과이, 잠비아 등 제3세계 국가들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1997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9개국에 아예 징병제가 없으며, 15개국에선 사실상 징병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징병제를 실시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봉사 또는 비무장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30개국에 달한다. 조국 교수는 "팔레스타인과 대치중인 이스라엘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다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4개월 정도이다"고 밝혔다.

유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 목록'에 올리고 있다. 1987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가 채택된 이래, 89년, 93년, 95년 계속해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양심·사상·종교의 자유)에 포괄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95년 결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항명 혐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더 자세히 검토해겠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 관심이 집중된 이날 주심판사는 선고 후에 가족들에게 "실정법이 있는 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주심 이인상 군판사는 "피고인들이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은 높이 산다"고 전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사회적인 존재가 아님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인상 주심판사는 변호인

단이 제기한 형량 문제에 대해 "3년이나 2년 6월이나 27개월이 지나면 똑같이 가석방 대상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임종인 변호사는 "(현재 26개월인) 현역복무자의 군복무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부과해 달랬더니 자신이 판단해야 할 부분을 법무부에 떠넘겼다"며 "이는 사법부 고유의 책임을 회피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형법 절차상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22) 씨의 아버지는 재판정을 나오며 "지난번에 선고가 연기돼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전과 달리 이렇게 부딪혀본 것만도 큰 의미가 있다"며 "수십년동안 나왔던 똑같은 결과도 우리가 노력하다보면 분명 변한다는 희망을 갖자"고 함께 방청한 사람들을 위로했다. 60여명의 방청객이 참관한 이번 공판이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나자 10여명의 부모·친인척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심태섭)

'의경구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의경들 사이에 공공연히 구타가 자행되고 이들을 지휘하는 경찰이 구타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고발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경찰내부의 폭력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회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는 지난 달 31일 성명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재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경의 제보가 "수차례 탈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찰내부에 폭력과 인권침해가 일상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폭력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경찰조직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규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며, "경찰조직의 폭력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들의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심보선)

(=> 1면에서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병역기피종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조국 교수는 "사전심사, 사후관찰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병제 근본 논의 등 길길 멀어

금기에 대해 도전했다는 점에서 토론회는 개최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의 구체적 방안, 나아가 징병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등 앞으로는 논의해야 할 과제는 많다.

"저는 육군장교로 제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의 느닷없는 '커밍아웃'은 '군대에 다니오지 않고는 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폐쇄적 논의문화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편 이날 토론장엔 과거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을 살았던 피해자들이 다수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법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들의 소박한 주장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답할 차례다. (이창조)

만화사랑방

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2일(토)

제 18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법원 '업무방해', 눈물머금고 1인시위만

"이년아, 1인 시위면 단 줄 알아?" 지난 16일부터 '해고자 원직복직'과 삼성의 '세습경영을 반대'하며 삼성 본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삼성해고자 가족인 임정옥 씨에게 24일 삼성직원이 다가와 욕을 하며 밀어냈다.

집시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1인 시위조차 이처럼 삼성이 오만방자하게 무시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4월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관 사 박재윤)가 내린 판결이 있다. (주) 삼성생명보험이 해고자 및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김성환, 아래 삼성해복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서울지법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98년 5월과 10월에 삼성생명은 3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고직급, 고연령 등의 여성노동자에게 사직할 것을 강요했다. 심지어 "지금 퇴직하지 않으면 위로금은 물론 퇴직금도 없다"는 등, "후배보가 미안하지도 않느냐"는 등, 협박 아닌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 결국 1700여명의 여성노동자를 퇴출시켰다. 그러나 그 해 결산 결과 삼성생명은 1천억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냈고, 퇴출기업 삼성자동차 직원을 대거 전입시켰다. 이에 노동자들과 삼성해복투는 99년 5월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시작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특정한 구호를 외치거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서울지법에 신청. 서울지법은 이런 신청을 고스란히 받아 들였고 이를 어

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물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 이후 노동자들은 사실상 삼성 본관 앞의 집회가 불가능해졌다.

<논평> 의경구타 사건 재조사해야 한다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의경들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구타와 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얼마 전 인터넷 제보를 통해 공개된 수원남부경찰서 내 구타사건은 의경 집단 내의 폭력수준이 이미 갈 데까지 간 지경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한가로이 도심을 지나는 동안에도, 도로 옆 전경버스 안에서는 인간 이하의 학대와 구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의경들에겐 '일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다. 폭행의 정도가 오죽했으면 탈영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잇따르고, 한 탈영병은 부대복귀 대신 교도소 복역을 선택했겠는가? 특히 시위진압 직전에 집중적으로 구타가 가해지고, 그렇게 격양된 상태에서 시위진압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증인은 '업기'에 다름 아니다. 의경들은 시위진압을 위해 '끓주린 사냥개'처럼 사육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폭력이 조직적으로 묵인·은폐되어 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사건은 이미 지난해와 올 4월초에 발생한 일이다. 한 피해자는 다섯차례나 탈영과 복귀를 반복한 끝에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개월간 진실은 은폐되어 왔고, 실상이 탄로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자체 조사에 나선 게 경찰이다.

1일 경찰이 발표한 후속조치는 그러한 조사마저도 '시늬'이었을 뿐임을 확인케 한다. 구타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방조·묵인·은폐되었는지에 대해선 일인연구의 해명도 없다. 감독책임자 및 명을 짐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든 재복귀가 가능한 직위해제일 뿐이며, 그마저도 중대장 이하 하급 지휘관들만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은 굶을 대로 굶은 의경 집단 내 폭력문화가 일순 바깥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얼마 전 대우차 노동자 폭력진압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밀둥까지 썩어 문드러진 경찰은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불행하게도 경찰은 스스로를 치료하고 쇠신할 어떠한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게 역사와 현실의 가르침이었기에, 민간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민간에 의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경찰은 칼자루를 넘기고 순순히 치료를 기다리는 게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군산개정병원(이 사장 이상용, 아래 개정병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임종률, 아래 중노위)가 부당 해고 사실을 확인했다. 중노위는 지난 23일 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김의영, 아래 지노위)가 결정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은 99년 병원을 인수해 이사장이 된 후 2000년 '경영 정상화'를 피한다며 보건의료노동조합 군산개정병원지부(위원장 김은혜, 아래 군산개정지부) 조합원 손종근 씨 등 14명을 해고 및 징계 시킨바 있다. 이에 군산개정지부는 이를 부당 해고·징계라며 지난해 11월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올 2월 지노위는 군산개정지부가 낸 신청에 대해 부당 해고·징계라며 "개정병원은 해당자들을 복직시키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이에 불복한 개정병원이 낸 재심신청에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재심판정서에서 "신청인이 조합원들을 징계하면서 징계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킨 사실은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징계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제척규정을 위배한 것"이며 "또 피신청인들이 징계제심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대법원 93다29662)이 되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상용 이사장은 지난 4월 21일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이사장은 "병원에 투자했다"는 자금 대부분의 행방이 묘연해 군산개정지부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며, 이 수사는 현재 군산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심태섭)

(→ 1면에서 계속) 2년이 넘도록 싸움이 계속되자 삼성이 무리수를 쓴 것. 결국 5월 14일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삼성해부투 전영숙 씨는 "우리에게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거냐"며 "우리의 주장을 사회에 알릴 방법을 원천봉쇄하려는 삼성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또 "삼성이 즉별세습경영을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재산축적을 위해 주가를 조작, 탈세를 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건희와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김영원)

● 정보섬 ●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때: 6월 5일(화요일) 오후 2시~8시 / 곳: 종로성당
주최: 민주노총, 민변, 사회진보연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2001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AI 보고서 2001'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0년도 AI가 관심을 가졌던 인권문제들이 다루어지고, 각 나라의 인권상황이 요약된다. 여기서는 보고서 중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 북한의 인권상황 ●

북한은 외교·무역 면에서 개방정책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식량위기는 조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보통제에 의해 독립적인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외교·무역에서의 유대 강화

2000년 한 해 동안 북한 정부는 지역적, 국제적 사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1월에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최초로 북한과 공식 수교관계를 맺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과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4월에는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양국은 식민지기간 보상 문제와 7,800대에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 국적의 실종자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도 가속화되었다. 10월에는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클린턴 미 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양국은 관계 개선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 상호간 상업 활동을 허락했으며 6월에는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응하여 북한은 한국 전 당시 사망한 미군 26인의 유해를 반환했으며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결과 궁극적 통일을 지향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후 남북 관계자 사이에 여러 회담이 이어졌으며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에 합의했다. 8월과 11월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인도적 위기

인도적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지만, 식량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북한은 6년 연속 막대한 식량 부족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식량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분배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한 프랑스의 구호기관(Action contre la faim)은 3월에 '기근 희생자에 대한 자유롭고 직접적인 접근이 거부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했다. (→ 3면에 계속)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2001

(→ 2면에서 이어짐)

정보 통제

북한에 공개처형, 고문, 정치범 구금 및 비인간적인 감옥 상황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으나, 감추어져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보고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난민

식량위기로 인해 수백, 혹은 수천의 북한인이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그곳에서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몇몇은 중국과 북한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됐다. 송환 이후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바 없으나, 몇몇 소식통은 장기간의 심문절차와 고문이 뒤따른다고 전했다.

13세 소년을 포함한 7명의 북한인이 중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갔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으며, 이들은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다. 6월에 이중 6명은 '단기복역'을 하고 있으며 13세 소년은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정부간 기구

97년, 북한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3월에 북한 정부는 조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2차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최초 보고서는 84년 제출된 바 있다.

● 남한의 인권상황 ●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포함하는 정치·법률적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기 양심수의 숫자는 감소했으나 아직도 많은 정치범들이 아직도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금지된 친북성향 단체 소속 학생들과 활동가들이다.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 아래 계속 수감돼 있다. 노조탄압에 과도한 물리력이 사용되었으며 많은 노조원들이 체포됐다.

배경

올해는 남북한 사이의 해빙 무드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4월 국회 총선거 며칠 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국가수반 김정일의 정상회담 초청을 받아들였다.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새천년민주당은 자민련과의 연합을 필요로 했다.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의 원동력이 되었다. 8월과 12월에는 각 100 가구의 이산가족상봉이 있었다. 남측 국방장관 조성태와 북측 국방장관 김일철은 제주도에서 최초의 회담을 가졌다. 또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과 민주주의 발전, 동티모르 사건에의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국가보안법

2000년 8월 25일 당시 수감되어 있던 99명의 정치범 중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감됐다. 이 중 대부분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7조 위반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주요부분의 개정이 지지되고 있다.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양심수 박경순은 여전히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간경화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한 구 정치범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는데 여전히 보안관찰법이 이용되고 있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구 정치범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의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제한을 받고 다른 정치범을 만나거나 집회, 특히 정치적 집회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 '준법서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석방된 최초의 정치범인 서준식(인권운동가, 옛 양심수)은 자신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연장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9월).

고문 / 학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용의자들이 친지와 변호사와의 접촉마저 제한당한 채 한 달 여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고되었다.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 반을 선고받은 김경환은 조사 도중 반복해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경찰은 노조의 파업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 2000년 8월 당시 99명의 정치범 중 노동운동가는 29명에 달했다. 6월에는 경찰이 롯데 호텔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던 노동운동가들을 곤봉으로 진압했으며, 막혀있는 호텔 7층 복도에 최루가스를 쏘기도 했다.

난민

1992년 유엔난민조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남한 정부는 북한에서 온 망명자 외에게는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난민신청자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주어지지 않는다. 아직까지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전례가 없는 가운데, 28명의 미얀마 난민신청자들의 신청서 접수가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이다.

사형제도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이래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사형제도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안되었으나 2000년 동안에는 통과되지 않았다.

(번역: 김민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5일(화)

제 18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아래 보상심의회)가 1차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시작하자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접수된 사례만 8,440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건 400여건.

그러나 이 중 국보법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 관련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아래 추모제준비위)는 6월 4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운동 관련 열사들의 명예를 ‘선별회복’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추모제준비위는 회견에서 “국보법 관련·노동운동관련, 김영삼정권 시절의 사건과 연관된 열사들은 아예 심의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보법 관련자를 가려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접수된 사건 중 10% 정도인 750여 건이 국보법 관련사건이고 이 중 75%가 국보법 7조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보상심의회는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심의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 및 김영삼 정권 시절의 사건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보상심의회가 “정치권의 반발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모제준비위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이 비밀

에 부쳐져 있다”며 “조사과정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가해기관으로서 “국정원, 군, 기무사, 경찰은 과거를 반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추모제준비위는 4일부터 9일까지 투쟁주년을 선포하고 11시 30분부

터 1시까지 민주화보상지원단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앞에서 사회 각계 대표들이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추모제준비위는 이 두 위원회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지결여에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청와대 근처에 있는 민주화보상지원단 앞에서 국보법관련 사건의 명예회복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영원]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때: 2001년 6월 8일(금) 오후 2~5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종로 5가)

-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 (발제- 박노현 방승대 법학과 교수)
-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교환

국가인권위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인권단체들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3개 단체는 인권단체들이 공유해야 할 문제들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국가인권위 성립 진행상황 보고 및 설립과정’, 6월 1일에는 ‘국가인권위 어떻게 조직될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3차와 4차는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래 3개 단체는 국가인권위 설립에 대응하는 인권단체들의 상호협력 문제, 나아가 상설연대기구 결성문제까지도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상설연대기구 결성문제는 제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식 제안이 아니라 간담의 주제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설립 자체는 인권운동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일입니다. 국가인권위 설립과 동시에 개정투쟁에 돌입해야 할뿐더러,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와 비판적 협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있고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의논하는 이 자리에 부디 각 인권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2000여 명에 이르던 (주)효성의 노조원이 4-5년 사이에 900여 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정문을 통해 회사내로 출근하는 사람의 숫자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몇 년전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소사장제도와 도급화, 그리고 IMF 이후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가 바로 그 이유다.

(주)효성이 파업10일째를 넘어서면서 화섬업계 전체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화섬협회(www.kcfa.or.kr)는 호소문을 통해 효성 울산공장에 “하루빨리 공권력을 투입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방지할 경우 태풍·대한·고합 등 인근공장으로 파업의 여파가 확산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공급과잉, 경쟁심화 등으로 화섬업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그대로 화섬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요인은 뒤떨어지는 품질, 마케팅 능력부족,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한 시장원리에 기인한 것이다(국제섬유신문 5월 14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섬업계는 사장단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공동대응하면서 정부에게 공권력 투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효성의 이번 파업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과연 화섬업계의 주장처럼 무리한 임금인상 등에 있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효성은 수년동안 정년퇴직 및 사직자들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부분적으로 개별라인의 도급화를 진행하여왔다. 97년 공무계전 부문이 ‘M-Tec’라는 하청회사로 분리되더니 2000년 초에 코드3과까지 ‘상원’으로 바뀌었다. 효성 노동자들에게 있어 ‘배치전환’이란 바로 비정규직 채용, 그리고 라인의 ‘도급화’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작년 말부터 사측은 또다시 설비변경 및 체산성을 이유로 들면서 연신과에서 17명의 인력감소가 필요하다고 연신1반의 36명 정직원중 남자 6명과 여자 1명을 방사3과로, 남·여 각 1명씩은 연신2반으로 전환배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는 효성의 묘사 생산팀장의 말은 대한화섬협회의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주장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기에 효성노동자들의 싸움은 개별기업 노동자들의 싸움이 아닌, 화섬업계의 중심에선 싸움이며, 신자유주의 시장하의 ‘경쟁력’이란 이 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싸움이며, 사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는 싸움인 것이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주간인권호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1. 제계의 오만방자, 방귀 편 놀이 성넌다더니!

효성울산공장, 생선회칼·야구방망이로 파업 진압시도(5.28)/ 캐리어, 광주지방노동청 시정명령 무시하고 하청노조원 188명 계약해지(5.28)/ 전경련, “노조 불법행위에 정부 엄정대처” 촉구(5.29)/ 경총, “초법적 상황 방지 말라” 정부협박(6.30), ‘6월총파업 불법지침’ 하달(6.30)

2. 오죽 때렸으면... ‘부대보다 교도소가 낫다’

경찰, 구탁 은혜의혹 또 ‘은혜’ 다산인권센터 등, 의경구타사건 사실확인(5.30)/ 다산인권센터 등, 의경구타사건 철저조사 성명(5.31)/ 구타 후 탈영 의경, 구치소에서 “부대 복귀 대신 교도소 가겠다”(5.31)/ 수원남부서, 구타사실 확인하고 관련 의경 14명 징계, 구타은혜 의혹은 또 ‘은혜’(6.1)

3. 과거청산, 눈 가리고 아웅말라

민주화정신계승연대, 국보법사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청회(5.28)/ 민주화보상심의회, 91년 분신한 천세용 씨 등 88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5.29)/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과정 공개 및 의문사법 개정 성명(6.1)/ 민족민주열사추모준비위, 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주간 선포(6.4)

4. 건강보험 정책, 아랫돌 빼어 윗돌 끼기

복지부, 국가지원금 50% 확대, 전자건강카드화(5.28)/ 민주당, “담배 준조세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투입”(5.29)/ 사회진보연대 등, 전자건강카드 백지화 요구(5.29)/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 위해 5년간 매년 보험료 8-8% 인상(5.31)/ 참여연대 등, 수가인하 및 본인 부담금 인상계획 철회 성명(5.31)/ 인의협, 의보수가 재조정 및 의약분업에 주사제 포함 요구(5.31)

5. 산자부장관의 ‘개똥’ 철학, “기업가는 모두 애국자”

GM 협상단 입국(5.28)/ 대우차채권단, GM과 협상개시(5.29)/ 대우차노조 해외매각 반대, “정리하고 특별투쟁위원회” 발족(5.30)/ 잠재식 산자부장관, “기업가는 모두 애국자”, “대우차 가격을 적당히 불러야 한다”(5.31)/ 대우차 협력업체 27곳 부도, 30여곳 부도위기(5.31)/ 대우차노조, GM인수지지 결사대 미국 파견(6.1)

◎ 주요판결 및 결정 ◎

서울고법, 매항리 미군폭격장 철조망 끊은 전만규 씨에게 선고유예(5.3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삼성해복투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5.30)/ 독일 법원, 2차대전 당시 강제수용소 경비원, 살해죄로 종신형 선고(5.30)/ 여호와의증인, 항명죄에 징역 3년형 선고(5.31)/ 일 오사카지법,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 곽귀운 씨에게 건강관리수당 지급판정, 평등권 옹호(6.1)/ 서울지법, 공방바닥에서 잡자다 숨진 데 대해 고용주 책임인정(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단하라"는 재계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정부는 5일 새벽 5시 20분경 (주)효성 울산 공장(아래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7백여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최민석 직무대행 등 7명은 5일 저녁 12시 현재 방사와 옥탑을 거점으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공장을 빠져나온 효성노조(위원장 박현정) 노동자들은 경찰의 효성노조 침탈에 대해 항의하며, 오전 10시경 울산 남구 야음삼거리에 모여 공업탑 로타리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이때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태광노동자 등이 가세하여, 시위대는 2천5백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저녁 8시경까지 공업탑 로타리, 울산시청 및 삼산동 현대백화점에서 거리집회를 계속했다.

이날 금속연맹 울산본부 이정현 조직부장 등 60여 명이 연행됐다. 한편 이상도 씨 등 현대자동차 노조원 9명은 부상을 당해 제일병원 등으로 후송됐다. 특히 효성 정은희 조합원은 전경의 방패에 머리가 찍혀 울산대학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경찰병력 투입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의 경고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 남영우 노사대책팀장은 "효성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도 하지 않은 불법"이라며 경찰병력 투입을 두둔했다. 남 팀장은 "효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것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신했다. 이러한

불신은 노조의 교섭에 일질 불응했던 효성의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인권운동연대(대표 최민석) 김석환 활동가는 "93년까지 2천명이던 정규직 노동자들 중 1천1백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됐다"며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한번도 교섭에 임하지 않고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 고소고발만 남발했다"며, "효성파업은 실정법상 불법이지만,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예초부터 자율협상을 무시하며 공권력 타령만 해 왔던 효성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직접 대화를 주선했지만, 정계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효성이 받아들이도록 하지는 못했다. 노동부 노사조정과 0감독관은 "국가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경찰병력 투입을 정당화했다. 노사갈

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조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민주노총은 5일 울산에 임원을 급파하는 한편 "경찰과 김대중 정권은 재계의 사냥개가 됐다"며 경찰력 투입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효성문제의 책임은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측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교섭중인 집행부를 구속시켜 버린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국민중연대(준)도 성명을 발표하여 "경찰의 침탈이 전경련과 경총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이후 일어난 점을 주목"하며, "김대중정권이 하는 일이란 초국적자본과 극소수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를 때려잡는 것 외에는 없다"고 규탄했다.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6일 오후 3시 30분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9일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영남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효성 경찰병력 투입을 규탄하며 7, 8, 9일 전경련 앞에서 연일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국민중연대(준)은 7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경찰, 수사대, 용역강제 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연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6월 월례포럼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국가보안법

- 때: 6월9일(토) 오후3시 / ·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
- 사회: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제: 홍순석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 국가보안법의 전방한총련 관계자 1인 -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 내용: 6·15 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정세변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각 세력의 태도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투쟁 경과와 방향
- 문의: 배경내(3675-5363) / 이광길(741-5363)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1심 공판에서 '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현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소1부(재판장 김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94-95년 전노협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지하철노조 파업 독려 등의 혐의로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양 씨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삼성 윤진열 씨도 '집행유예'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생명해고자 북지투쟁위원회 윤진열 위원장에 대해서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는 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심대섭)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시 학도호국단 편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전시 학도호국단은 2급비밀인 충무계획에 의해 편성조직이 아닌 가상으로 편성되었다"며,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권운동사랑방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고등학생 학도호국단의 △편성근거 규정 △편성의 목적·규모·활동범위 △운영규정 △2001년 편성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에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고근예)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앞세워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변이 공동주최한 '노동법 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에서는 노동관련법을 둘러싼 최근 정세의 성격과 투쟁방향을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맨 처음 발제에 나선 이종희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유연화와 고용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의 본질적 문제"라며 "노동인구를 흡수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축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도를 법제화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강제하여 노동유연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은 IMF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돼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정책실장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경제논리로 보면 '사회적 약자는 단지 사회적 무능력자'이며, 이들 비정규직·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과 유 정책실장은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에서 합의를 내세워 복수노조가 5년간 유예한 사실 등을 들며 앞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전면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특위에서 유급 생리휴가 및 월차유급휴가 폐지, 경제사회특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삭감하는 방안 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유병홍 정책실장은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구조조정특별법 등 노동법 말고도 노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여러 법률의 개정 혹은 제정을 통해 "노동권 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실장은 또 "한국 노동법이 개악을 저지해야 할 정도로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노동법 개악저지라는 수준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희 사무처장은 "노동법 개악을 바라보는 서로간의 시각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 같다"며 "노동법 개악저지"는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의 면면을 볼 때 '상반기 임단협 투쟁, 하반기 제도개선 투쟁'이라는 범주에 포괄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제에 칼을 들이대는 보다 근본적인 투쟁을 조직할 결실점으로서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치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병홍 정책실장은 "예전보다 투쟁전선의 폭이 더욱 넓어져 폭 넓은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곧 여성·인권·사회·장애인·이주노동자 단체 등에 공동투쟁 조직을 꾸리기 위한 제안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투쟁 조직에서 올 하반기 투쟁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계획이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계약직노조 강규봉 쟁의국장, 전경련 김욱 정책기획국장, 교수노조(준) 정여화 서경대 교수, 이윤주 서울염인지역 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장이 나와 비정규직·공무원 단결권·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청원경찰...

파업파괴 '경찰2중대' 비난, 폭력방관 의혹도

파업현장에 구사대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 파업·철거현장에 가끔 등장하던 구사대는 대우캐리어, 안산 동아공업, 한국통신 114 농성장에 이어 울산 효성노조 파업현장에도 등장했다.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을 위한 전국민중연대(준)'(공동대표 단병호 등, 민중연대)는 7일 광화문 앞 열린시민마당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적 폭력'이 "제복을 입지 않은 공권력이다"고 주장했다.

민중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정권아래서는 경찰만 노동자·민중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구사대와 용역강패들까지도 합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중연대는 이어 "지난 28일 효성노조가 용역강패에게 압수한 파업진압용 야구방망이·쇠파이프·가스총 등을 공개했을 땐 철저히 침묵했다"며 "경찰이 '사적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중연대는 또 "경찰뿐만 아니라 구사대·용역강패의 테러로 노동자·민중들이 피를 흘리는 반면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분노를 토했다.

민중연대 단병호 공동대표는 이날 "김대통령 취임 후 98년부터 현대자동차·만도기계·롯데호텔·사회보험노조 등 경찰을 앞세운 폭력사태가 잦아질 틈이 없더니 이제는 구사대·용역강패들까지 합세해 마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한다"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구사대와 용역강패들에 의해 폭력을 당한 피해사례 발표에서 한국통신 114

노조 윤경숙 조합원은 일선 경찰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윤 조합원은 "지난 달 31일 청원경찰들과 구사대들이 한국통신 분당본사 앞 농성장에 쳐들어와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조합원 20여 명이 이빨이 나가고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를 쏟아냈다.

'4월 10일 부평만행' 이후 길으로는 경찰의 폭력행사는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줄어든 '경찰폭력'은 청원경찰·경비용역 등 구사대가 차지했다. 욕먹을 짓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

가 노사대립이 악화되고 이른바 '노노대립'이 심화되면 이를 '평정'하려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구사대 폭력은 지켜보기만 함으로써 폭력을 묵인, 조장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4월 29일 캐리어 사내하청노조, 5월 2일 건설운송노조 유진분회 홍석훈 평의부장, 5월 11일 김포 신곡리 철거현장, 5월 31일 한국통신 114노조가 구사대·용역강패·청원경찰 등의 습격을 받았다. 이 중 가해자들이 처벌된 경우는 없다.

민중연대는 "특정세력만 용역집단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대다수가 강패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구사대가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연대는 또 "용역집단들이 '오늘은 철거민 탄압, 내일은 파업파괴'와 같이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소수의 권력집단에게는 희망일지 모르지만 절대다수의 민중들에게는 절망과 재앙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심태성)

만화사랑방

이동수



2001년 6월 8일(금)

제 18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무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뜰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에 따르면 한국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OECD평균(2000년 자료)의 2.3~2.7배에 달해 최상위에 속한다. 건강보험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LO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 대부분의 경우 기업주의 부담비율이 더 크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낮은 보험료율을 내세워 정부책임을 회피하고 보험료만 올리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김

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대원칙 하에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이번 정부대책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현행 3천2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5.1%인상"되고 "물리치료, 치석제거 등에 적용되던 급여가 축소되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사회보험의 원칙마저 후퇴시켰다"며 이번 정부 정책이 "한심한 미봉책이자 국민기만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보건의료체계가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의료서비스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막이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지난달 31일과 7일 정부종합대책 철회를 위한 사이버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9일 오후 3시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건강보험재정파산 정부종합대책안 저지와 건강보험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집회를 열어 "△정부의 종합대책 철회 △보험급여의 전면확대 △누진적 보험

료를 적용 △기업주의 부담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영원)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사부 '불법' 재강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단정하고 있는 정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공련 등은 한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해 9일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전국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등은 대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주장하며, 특히 '공무원노조 도입'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하위직 공무원 스스로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거부하고 공직사회개혁의 주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쟁취를 대중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와 각종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미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사회적·국제적 여론이 조성됐다"며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지난 5월 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현실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현재 공무원노조 결성을 찬성하는 여론이 81%에 이르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민변준 사무관은 이에 대해 "전공련은 명백한 불법단체"라는 원칙만을 반복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불허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제2조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간의 연합체건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 사무관은 "공무원대회 참가 허용 여부나 참가자 징계는 해당 관계기관의 문제"라며 "이번 행사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특정한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범용)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법 세미나

- 때: 2001년 6월8일(금) 오후 2~5시
-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발제-곽도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교환

인권운동사랑방 6월 월례포럼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국가보안법

- 때: 6월9일(토) 오후3시
- 발제: 홍순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 국가보안법의 전망
한총련 관계자 1인 -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및 월례포럼 장소는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종로 5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9일(토)

제 18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아래 한기총)가 대체복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기총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또 대체복무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특혜”라며 “오히려 병역기피를 조장하고 사회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며 병역거부가 반사회적인 행동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 한기총의 공식 입장이다.

“반기독교적 발상” 반론도

이에 대해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는 “이단이라고 치부하며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만을 위해 특혜를 베푸는 법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정민 씨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군복무에 상응하거나, 어쩌면 더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군복무자들과의 형평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정민 씨는 또 한기총이 우려한 병역기피에 대해 “대

체복무 기간을 군복무기간보다 늘리거나 자적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후에도 병역기피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대만의 사례가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사회단체들의 공개적인 문제제기에 이어, 국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입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

☞ 2면으로 이어짐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전자신분증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99년 사망선고를 받았던 전자주민카드 구상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카드(건강보험증) 사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 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들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는 수록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전자주민카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주민번호, 이름, 혈액형, 처방내역, 병력사항 등 각종 개인정보가 IC칩 카드에 기록되고, 그것이 전산망을 통해 오가며 관리된다. 또 신원확인을 위해 전자지문을 카드에 삽입한다고 한다. 개인으로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병력정보가 유출돼 취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며, 병·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전자지문감식 시스템은 그 편리성으로 인해 언제든 전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자기록으로 남는 시대, 이른바 ‘전자감시’ 시대가 현실화된다는 게 기우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특히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부여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대금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로 넘어간 정보들은 얼마든지 민간보험이나 제약회사 등으로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다른 실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부담·허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건강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서, 곧바로 “정보화로 인한 편익증진이 주목적이며 허위·부당청구 방지는 부수적 효과”라고 말을 바꿨다. 단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 전체의 인권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인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자건강카드가 막대한 아권사업이라는 점이다. 연간 수조원 대 시장을 형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경쟁과 로비가 이미 가열되고 있다.

전자건강카드 도입으로 누가 이득을 보게 되며,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지는 분명하다.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 혹, 업계의 로비에 밀린 것은 아닌가? 막대한 현세를 남비한 끝에 폐기된 전자주민카드사업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전자건강카드사업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전자건강카드 저지운동 나서 사회단체들, “인권침해” 비판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반대운동을 적극 조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각계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12일에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자건강카드 도입반대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5월 29일엔 24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해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 관련 조항이 삽입된 건강보험특별법을 6월 국회 회기 중에 서둘러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창조)

◎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과 대응을 위한 ◎

사회단체 간담회

- 대상 : 사회단체, 개인, 언론사
- 일시 : 6월 11일(월) 오후 7시
- 장소 : 용산구 갈매동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778-4001)
- 논의 내용 : 전자건강카드의 인권침해 문제 / 보건복지부 논리의 허구성 / 사회단체 대응방향 및 사업계획
- 참여문의 : 사회진보연대 홍석만/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 〈병역거부권〉기사,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의 장영달, 천정배 의원은 각각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성안한 상태며, 7월중으로 국회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두 의원이 제안할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사회봉사와 공익근무로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연)

〈바로잡습니다〉

8일자 ‘공무원노조’ 관련 기사에서, 9일 열릴 창원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 공무원대회’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민변춘 사무관의 말을 인용, “행자부가 특정한 지점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한 보도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민 사무관은 “행정자치부는 유선, 각종회의, 문서를 통해 창원에서 열리는 공무원대회 참가를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전공련과 관련해 직장협의회 연합은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8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팔라룸푸르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9일로 예정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사회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수아람(SUARAM)의 한 활동가는 전화 통화에서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집회를 비롯해 정부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저항은 지난 4월 정부가 10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적용해 구속함으로써 촉발되었다. 구속 사유는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의 유죄판결 2주년 집회 준비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민주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저항해왔다.

연행자 중 이잠 모하메드 노어, 티안 추아, 히사무딘 라이스, 사리 순집 등 4명은 압둘라 내무장관의 구금 명령에 따라 지난 6월 2일 카문딩 구치소로 이송돼,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앞으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내무장관은 이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마하티르 정부를 전복하려 공모했다는 혐의가 명백하다고 구금 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에 따르면, 경찰은 연행자를 재판 회부 전 60일 동안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내무장관의 구금 명령이 있으면 정식 재판 없이 구금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사법부의 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연행자 중 2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40여일 만에 풀려났고, 또 다른 2명은 지난 5월 30일 인신보호 심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로써 아직 구금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2명이다. 이들은 14일 인신 보호 청구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앞서 5월 30일 인신보호 심사 결과는 매우 이례적인데, 당시 심사를 맡은 모하메드 히사무딘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금은 법에 합당하지 않으며, 구금을 연장할 만한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히사무딘 판사는 이어 “40일이 넘는 구금 기간 동안 가족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연행됐던 10명 모두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가족과의 면회가 오랜 기간 금지되었다. 그들은 모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유치되었다.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90년만의 가뭄으로 논바닥이 썩썩 갈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파업을 매도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월 연대파업을 자체해 달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특히 가뭄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정부는 담화문에서 경제가 어렵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현시점에서 전국적인 연대파업은 자제'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노사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정부가 언제부터 농민의 아픔을 생각했나?"며 정부의 위선을 지적하고, "가뭄이 노동정책 실패나 농업정책 실행의 바람막이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단협은 노동자에게 1년 농사"라며 "가뭄을 악용해서 노동탄압의 명분으로 삼는 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담화문에서는 경영자에게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불법적 노동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공권력 투입의 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했다.

2001년 6월 12일(화)

제 18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학성유연맹 소속 노조 1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은 파업에 들어가고, 13일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도 파업에 돌입한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교섭과 대화를 통해 좋은 합의를 만들어서 원만하게 타결하고 싶은 것이 노동자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불가피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정부가 절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개입은 진짜 큰 후유증을 남긴다"고 경고했다. (범용)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인권·사회단체들이 노동자 연대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1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이하 사회권 연대회의)는 11일 성명에서 "올해 들어 구속노동자가 100명, 수배된 노동자가 73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어 여천 NCC 등에 또다시 경찰력 투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이어 "정부는 대한항공, 코오롱, 한국중공업, 두산기계, 코랩프라스틱, 금속노조 마창지회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지시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관례와 반대로 위 사업장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권연대회의는 또 "(정부가) 전공련 지도부와 창원공무원대회 참가자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정반대 조치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서)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또 △노사간 자율해결을 방해하는 경찰의 강경탄압 중단, △노동부·노동위원회·검찰의 불법파업규정 중단, △구속 노동자 석방과 수배조치의 해제, △전공련 지도부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 처리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김일숙)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내규를 제정하고 나서

얼마 전 WTO/투자협정 반대 국민행동(KOPA) 토론회에서 우리 단체가 발제를 맡은 일이 있었다. 토론회장에 도착해서야 그 날 사회자가 '100인 위원회'에서 발표한 16명의 성폭력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토론회 준비팀에 "우리 내규에 반여성적 단체나 활동가와는 연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사회자를 바꾸지 않을 경우 발제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시작 직전이라 설마 했는데 의외로 사회자를 바꾸겠다고 응답했다. 패기였다.

사실 삐끼스(PICIS)와 같은 작은 단체가 연대사업 안 하겠다고 선언해봤자 별 위협(?)이 안 되겠지만 민주성, 남녀평등성, 반권위주의성 등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정치성을 고려한다는 연대의 원칙 하에 지금까지 관계를 청산한(?) 조직과 활동가가 적지 않다.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이 중단되지 않는 현실의 한 견에는 가해자를 제멋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운동사회의 관성적 풍토가 들어 있어 있다. 성폭력 근절 구호를 수백 번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동의 마디마디에 그 정신을 관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최근 삐끼스의 주요현안은 활동가 총원이다. 어느 단체나 활동가를 총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겠지만, 삐끼스의 경우는 좀더 까다롭다. 출신학교별로 3명씩만 받고, 여성이 전체 활동가의 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내규상의 규정 때문이다. 운동사회의 학력주의(특히 서울대주의)가 배타적인 파벌을 형성하고, 더욱이 남성들만의 네트워크의 근저로 작용되어왔다는 반성에서 제정되었다.

"비서울대 출신 여성활동가를 모집합니다"라는 활동가 모집공고를 보고 온 한 여성활동가는 "업무상의 능력은 개의치 마십시오. 같이 배우면 되니까요"라는 문안이 제일 감동적이었는데, 막상 활동해보니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규에는 엄연히 '상호자원 나누기의 원칙'을 두고, 서로 다른 자원, 정보, 능력 등을 환류하자고 했지만, 여전히 활동가 개개인이 여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데 나 또한 동의한다. 영어가 대표적이다. 업무의 태반이 영어와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적인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도 없으며 술자리에서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것만큼은 서로 민감하지 않다. 장벽이 없다고 하지만 은밀하게 철책을 두르고 있는 꼴이다. 경제적 능력 풍부하고, 국제적 이슈에 해박하며, 영어에 능숙한 사람들만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조직이 되어갈 때, 내규의 정신인 친여성적/반위계적/자율주의적 운동은 사라진다. 새로이 활동가를 모집하는 광고 문안을 고민하면서 들어선 반성이다.

엄혜진(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

운동사회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1. 난데없는 '가뭄' 공세, 파업을 '제약'으로 여기다
경총 시국성명,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방지하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이어진다(6.4)/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대처(6.8)/ 정부 담화문, '가뭄·경제사정 들며 연대파업 자제' 강변(6.11)

2. 민주노총, 6·12 총력투쟁 돌입
민주노총 대표단과 ILO 사무총장 회동, 한국 노동인권 상황 파악위해 '쏘마비아 사무총장 한국방문 검토'(6.8)/ 민주노총 공공연맹·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회사측 '파업 불법화 유도' 문서 공개(6.10)/ 포항 인천제철, '노조원 성향파악' 문건 공개(6.10)/ 민주노총 기자회견, 6·12 총력투쟁 돌입 선언(6.11)/ 사회권 연대회의, 경찰력 투입 등 파업권 제한 중지 촉구 성명(6.11)

3. 무기력을 떨치고 싶었다 : 효성, 그들이 파업을 한 이유
울산 효성공장에 경찰 투입해 파업노동자 강제해산(6.5)/ 울산시민단체, "김·경은 효성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경찰력 철수해야"(6.7)/ 효성노조, 조경태(주)효성 대표이사 등을 '살인미수·폭력' 등 혐의로 고소(6.8)/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5천여 노동자, 태화강에서 효성 경찰병력 철수, 구조조정 저지 대회(6.9)

4.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 '구조조정'
양규현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3차 개입금지' 적용 유죄선고(6.5)/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토론회,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은 '노동권'을 위협한다"(6.5)/ 올해 노동쟁의로 90명 구속, 73명 체포영장 발부(6.6)/ 전국민중연대(준), 경찰·용역·구사대 폭력 실태 고발(6.7)/ 민주당, "구속노동자 석방 등 요청 검토할 것"(6.8)

5. 조사는 철저하게 - '알리바이 조사' 안 된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진상조사 과정 공개 요구 1인 시위(6.4)/ 의문사진상규명위, 청송교도소 사망 박영두 씨-"교도관 집단폭행 증언 확보"(6.4)/ 의문사진상규명위, 군복무중 사망한 김두환 씨의 타살가능성 시사하는 중요증거 발견(6.8)

6. 공무원 단결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행정자치부, 9일 열릴 창원 공무원집회 참가 저지 종용(6.7)/ 전공련, 창원에서 5천여명 모여 공무원노조 설립 결의(6.9)

◎ 기타 ◎

보건복지민중연대, "건강보험 대책은 국가 책임회피 대책"(6.7)/ 보건복지민중연대, "출산휴가 30일 연장에 여성관련 근거법 조항 내줄 수 없다"(6.7)/ 정보통신윤리위,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6.7)/ 김인규 교사 영장 재청구(6.11)/ 일본 정부, '외국거주 원폭피해자에게도 건강관리수당 지급하라는 오사카지법 결정에 불복, 항소 방침(6.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13일(수)

제 18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이 사이트는 학교라는 존재를 철저히 비판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 자퇴나 기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바 이용해지를 심의의결함.”

정부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 단속’을 위해 ‘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연달아 2곳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넷(inoschool.net, 아래 노스쿨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폐쇄를 결정했다. 노스쿨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 중 3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 결국 노스쿨 사이트는 지난 8일 일방적으로 폐쇄됐다.

정보통신윤리위 사무국 유호경 심의 조정부장은 “노스쿨 사이트에 학교를 그만두는 방법, 부모님께 자퇴 허락을 얻는 방법 등의 글이 올라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노스쿨 사이트 운영자 김진혁 씨는 사이트가 폐쇄된 직후 정보통신윤리위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렸다. “학교를 비판하였다고 폐쇄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노스쿨은 불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시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폐쇄를 결정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하고, “폐쇄조치는 ‘학교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고정관념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장에 따르면 노스쿨 사이트 개설목적은 △학교 밖의 사람들이 친목

을 도모하고 △학교라는 존재를 비판하며 △이 세상에서 자퇴생을 보는 편견을 극복하여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 학교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노스쿨 사이트의 개설목적은 ‘자퇴나 기출을 유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노스쿨은 “오로지 자퇴를 하려는 사람이 의견을 나누고 자퇴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라며, “자퇴는 자신의 뜻”이며 “자퇴하라고 외치지 말아 달라”고 밝히고 있다고 유 부장은 밝혔다.

‘나체사진’ 사이트도 폐쇄

노스쿨 사이트 폐쇄에 앞서 7일에는 정보통신윤리위 권고에 따라 김인규(39, 충남 서천 비인중학교) 교사 개인사이트의 초기화면이 삭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한 상임전문위원이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김 교사 사이트에 있는 ‘나체사진’이 전문가들의 검토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을 통해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검증됐다”며 “그에 대한 사법적 판

단이 진행중임을 고려한다면 정보통신 윤리위의 자의적 판단 및 삭제요청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가 노스쿨, 김인규 교사 사이트 폐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 민족예술인총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미술교사 김인규 씨 사이트 폐쇄는 ‘민원이 너무 많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는 국가행정적 차원에서 예술가 개인의 작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추상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예총은 이어 “이런 논리가 낡은 행정적 폐단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문화예술의 위축을 가져와 사회발전을 심각히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예총은 또 “정보통신윤리위가 홈페이지를 폐쇄하면서 제시한 ‘불온’은 누가 보아도 자의적”이라며 “이런 잣대를 적용한다면 어떤 사이트든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제환 판사는 12일 김인규 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기원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음란성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당사자가 자유롭게 공판과정에서 사실유무를 밝힐 수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용·김일숙)

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공개세미나(4)

· 때: 6월 15일(금) 오후 2시 /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

· 내용: 국가인권위법 조문 연구(2)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폐’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 시행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2일 오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면 개인 정보에 속하는 병력(病歷)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부담·허위청구를 방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실시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종합대책 발표 당시, “전자건강카드 도입으로 △진료비 청구 투명화 △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효율화 △국민생활 관리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청구 및 처방전 위·변조 방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하는 방향으로 올해에 시범 실시하고 이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현행 부담·허위 청구는 대부분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건강카드로는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전자건강카드에 의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또 “개인 정보 보호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수집·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전자건강카드를 강행한다면 전자주민카드 때와 같은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들은 6월 안으로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연대기구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심태섭)

<인터뷰> 효성노동조합 3차 파업지도부 윤진용 조직부장 왜 ‘불법’의 멍에를 썼는가?

울산 효성노조파업은 실정법상 ‘불법파업’을 감행했다. 심지어 ‘노조원들이 관리직 사원 옷을 벗겨 끌고 다녔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 지난 10일 울산 북산성당에서 효성파업 ‘3차 지도부’ 윤진용(36) 조직부장을 만났다.

□ 효성노조 파업속보에 보면 ‘3차 지도부’라고 돼 있다.

= 박현정 노조위원장에 이어 최만식 쟁의대책위원장이 현장에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어 ‘북산성당 지도부’가 된 것이다.

□ 왜 ‘불법파업’을 하게 됐나?

= 사업장이 울산, 안양, 언양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총회기간을 일주일로 잡았다. 그러나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총회를 방해했다. 언양지부에서는 반장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조합원 2백여 명을 외지로 놀러가게 했다. 본사하고 가까운 안양지부는 본사관리직들이 투표장을 에워싸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조가 있는 울산에서는 총회기간에 각 라인의 문을 용접하기까지 했다. (효성 인력운영팀 관계자는 12일 “휴가를 주고, 각 반별로 쉬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투표를 방해·감시하는 분위기에서 총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 ‘불법’ 멍에를 쓸 정도로 절박했는가?

= 13년 동안 회사의 구조조정에 속수무책이었다. 또 전환배치, 소사장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라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졌다. 정규직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푸대접받는 그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 또 노조가 싸우지 않으면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지도 더욱 나빠진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비정규직까지 조직대상으로 하는 규약개정안이 부결됐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도 구체적으로 내걸게 됐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손 놓고 바라 볼 수 없었다.

□ 비정규직 노동자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비록 지난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비정규직까지 조직대상으로 하는 규약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노조집행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조직할 것이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더욱 더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총회 찬반투표 이전에 노시간 현안은 무엇이었는가?

= 연신과의 부서전환배치 문제가 올 초에 불거졌다. 노조는 이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또 이 와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반장급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단합에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으니 하루 전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곤 했다. 교육일정,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구했으나 막무가내로 실시됐다. 5월 6일 새벽 교육과 연신과 전환배치 문제를 막는 과정에서 박현정 노조위원장, 김필호 수석부위원장, 김충열 부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회사안에서 이들을 연행했다.

□ ‘노조원들이 관리직 사원 옷을 벗겨 끌고 다녔다’는 말이 나오는 데...

= 아마 용역강패 이야기인 것 같다. 일당 몇만원 받기 위해 온 용역강패하고 질박한 노동자들과 싸움이 붙었다. 노조원들이 용역강패를 붙잡는 과정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웃옷을 벗긴 적이 있다. 참고로 용역강패는 5월15일부터 28일까지 주둔했다. 회사에서 17일 ‘강패철수’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효성 인력운영팀 관계자는 “노조에서 불법파업을 해 힘으로 탈환하기 위해 용역을 불렀다”고 밝혔다.)

□ ‘불법’의 멍에를 피할 방법은 없었는가?

= 우리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총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쟁의발생 결의(5월12일)를 하기도 전에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을 연행, 구속된 것을 봐도 어떤 절차를 거쳤어도 결국 불법이 됐을 것이다. 경찰은 용역강패와 회사의 만행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지 않았는가?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한국통신노조 이동걸 위원장의 직권 조인으로 흔들렸던 114 분사 철회 투쟁이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13일 오후 4시30분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 ‘114 분사 철회를 향한 한통노동자 총단결 총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114 분사에 반대하는 한국통신 정규직 조합원들과 파업 183일째를 맞는 한국통신 계약직 조합원들이 400여명 참석했다. 이들은 △114 분사 철회 △직권조인 원천무효 △한

통노조 비대위와 한통계약직노조의 공동투쟁 등을 결의했다.

한국통신노조 서울번호 안내국 유양자 지부장은 “만약 114가 분사된다면 전화번호 안내 단가가 건당 300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저자운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일을 돈으로 따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지부장은 약 2천만 유선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모두 여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114의 ‘성차

2001년 6월 14일(목)

제 18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별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114 분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4 분사와 관련되어 고용불안의 문제도 심각하다. 98년 114 정규직 노동자는 4천5백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900여 명. 그러나 정규직의 빈자리를 계약직 노동자들이 메웠기 때문에 114 전체 노동자 수는 그대로다. 하지만 계약직 노동자들은 언제나 정리해고 대상 1순위. 이는 작년 말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당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특히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계약지화-정리해고’라는 도식이 114 분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한국통신노조 이동걸 위원장은 한국통신과 114 분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114 분사의 당사자들인 114 조합원들은 이에 즉각 발발하고 오히려 ‘공작적 노사관계 분쇄 및 분사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임규)’를 결성했다. 김임규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직권조인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무효화하고 114 분사를 철회시킬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단결 총투쟁 결의대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김임규 위원장과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이춘하 직무대행이 두 팔을 높이 올려 손을 맞잡았다. 한국통신이 그토록 우려하던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편 한국통신 비대위는 13일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위원들을 방문했다.

비대위는 정보통신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에게 △114분사 자체의 부당성 △분사할 경우 국민에게 통신요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직권조인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범용)

● 정보샘 ●

◎ 6월 14일(목)

- 12시, 광화문, 경찰폭력, 구사대·옹역 폭력 규탄집회 (전국민중연대)
- 12시, 국제방송센터 앞, KBS 노조 부위원장 사퇴촉구 집회 (공대위)
- 12시, 전경련 앞,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결의대회 (민주노총)

◎ 6월 15일(금)

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공개세미나(4)

-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
- 내용: 국가인권위법 조문 연구(2)
- 여는 곳 :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가칭)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2차회의
- 저녁 7시, 사회진보연대, 전화 : 778-4001

◎ 6월 16일(토)

- 13시, 대학로, MD 공대위 사전집회
- 14시, 대학로, 민생파탄 민주압살 김대중정권 퇴진! 경제침략 평화위협 미국반대! 2001년 2차 민중대회

환경조항 등 한미행정협정 전면재개정 요구 미8군사령부 앞 3박4일 철야농성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매항 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 12일부터 ‘용산 미8군 사령부 앞 3박 4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8개 단체 ‘미8군 사령부 앞 농성단’은 12일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과 ‘방위비 분담협정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환경파괴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8군 사령부 앞 농성단’은 지난 2일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해 “최고 수준에 이르는 한국 분담금에 대해 2002년 미국이 또다시 32%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분담금이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터무니없다”며 “미국의 생떼 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일에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에 신설된 환경조항에 대해 “정부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하지만, 실제 평택 송탄 미국기지 항공유 유출, 대구 미군 기름 수송용 송유관 파열 기름유출, 불법 쓰레기 매립, 한강 독극물 방류, 원주 캠프용 미군기지 기름유출 등에 대해 환경파괴 원상 복구, 복구 비용지원,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소재가 빠졌다”며 “사실상 효력 없는 환경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김현철 사무국장은 “신설된 환경조항에 추가된 ‘미군 폭격지역 민간인 접근 금지’ 조항은 환경오염 실태조사 마저도 원천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우리의 생명과 인권, 주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8군 사령부 앞 농성단’은 14일 미8군 사령부, 미대사관, 국방부, 환경부 등을 방문해 ‘불평등 한미행정협정 전면 재개정’과 ‘방위비 분담협정 폐지’, ‘전국 93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원상복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당일 저녁 8시에 미8군 사령부 앞 농성장에서 <주한미군 없는 평화세상을 여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5

일 농성정리집회로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가 진행해 온 금요집회를 대신할 예정이다. 또 16일에는 원주 ‘우리 땅 미군기지되찾기 원주민모임’에서 주최하는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농성 이틀째인 13일, 매항리범대위 전만규 위원장은 “대동 문화제를 통해 평화적인 자주주권수호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길 바란다”며 나아가 “독립운동 정신을 살려 시민이 미군기지의 벽을 망치로 부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8군 사령부 앞 농성단’ 35명은 13일 밤 9시 30분경 전경차 3대에 실려 일산, 미사리 등 서울외곽지역에 내팽개쳐졌다. (김일숙)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 명예훼손 ’ 손해소송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보고 다시 취재해 보도했던 <미디어오늘>이 피소 당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4월 20일 ‘한 언론사의 재소자 죽이기’란 제목 하에, <국민일보>의 박병권기자가 작성, 4월 16일 보도된 ‘교도관들 “재소자가 무서워”...폭행증증’(http://www.kukminilbo.co.kr)란 기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사실확인조차 없이 쓰여졌고, 박 기자가 본지 취재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기자의 도덕적 책임성은 물론 기사의 진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다시 취재한 <미디어오늘>은 4월 26일자 여론란을 통해 ‘국민 “재소자 교도관 폭행” 작문 의혹’(http://www.mediaonul.com)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박 기자는 <국민일보>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오늘>의 이호석기자, 안영배 편집국장 그리고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지난 달 11일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 1)당시 자신이 다른 기사 취재건으로 몹시 바빴던데다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무의식 중 말한 것을 마치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보도했으며, 2) <미디어오늘>이 형식적으로는 양쪽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는 모양을 취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지 않음은 물론 제목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넣어 마치 원고가 종사하는 <국민일보>의 기사가 작문이나 하는 허무맹랑한 보도를 하는 양 보도해 <국민일보>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소당한 <미디어오늘>은 담당하다. 안영배 편집국장은 “양쪽을 모두 균형있게 취재, 보도한 것으로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오늘>은 답답한 마음으로 재판을 준비중이다.

박 기자의 기사를 역추적해 보도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의 유혜정 상임활동가 역시 단호한 입장이다. “6만이 넘는 재소자의 수용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취재했어야할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기자, 또한 몇 차례의 확인전화 끝에 자신의 처가와 지명을 헛갈렸다고 말을 바꾸는 기자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제 <미디어오늘>이 정말 박 기자와 국민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닌 듯 하다. 기자의 말 바꾸기가 기사진위여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보도된 기사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15일(금)

제 18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비용을 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의 근로 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보다 완화돼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법이라고 불려진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대신 2년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자와 18세 미만'인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환노위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일할 우려도 생겼다.

또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범위를 '여자와 18세 미만'에서 '임산부와 18세 미만'노동자로 완화시켜 일반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금지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 단체협약에 정해졌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근기법에 비해 개정안은 임산부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근로 및 휴

일근로, 시간의 근로를 완화한다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실에서 이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성보호법안은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여성보호'는 약화시키고 있다. (→ 2면에 계속)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지난 해 6월 29일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설, 유급출산휴가 30일 연장,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의 모성급여 분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연장되는 산전후휴가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의 임금지급,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전, 유급사산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어 지난 해 11월 25일 임신여성보호조항, 산전후 휴가연장 등의 내용이 민주당 한명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됐다. 그러나 한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의 근로 금지규정이 대폭 삭제됐다.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은 12월 생리휴가의 삭제를 전제로 하는 산전후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2000년 12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정숙 의원 발의안,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 청원안, 한명숙 의원 발의안, 정우택 의원 발의안 등 4가지 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올 4월 환경노동위는 '모성보호법'에 대해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환노위 대안'과 자민련 정우택 의원 발의안 등을 중심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올 4월 17일 경총 등은 모성보호확대 및 육아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후 휴가연장 시행을 2년 유보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4월 24, 25일 민주노총이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기습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5월 9일에 '2년 유예'를 폐기하고, '육아휴직 때 일부 소득보장,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등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이어 다음 날 자민련은 산전후 휴가 30일 연장을 받아들여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했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생리휴가 폐지를 환노위에 계류중인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과 연계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자본측의 비용 덜어내기 공세 속에 각 정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현장의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을 현행법보다 더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도록 할 계획이다(본지 5월 29일, 6월 9일자).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및 급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자건강카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건강카드의 사용과 수록내용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또 전자건강카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도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따르도록 했다. 결국 올해 안에 전자건강카드 시범사업을 벌이고, 내년 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구상이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내주 초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에 들어가며, 이르면 6월 22일(금)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자건강카드 시행 반대 나선 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게 됐다. '(가칭)전자건강카드 시행 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가 가져올 위험성과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내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끝나지 않았는데도, 법안부터 통과시킨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국회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속보) 음악회를 진행하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14일 오후 9시 30분경,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진행되던 '불평등한 소파 전면 재개정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열린음악회 도중,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평등한소파 개정국민행동 오두희 집행위원장, 자통협 김관대 사무처장,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김현철 사무국장 등 참석자 41명을 연행해 용산경찰서와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등에 분산 구금했다. 경찰은 "야간에 진행된 집회이므로 불법이고, 따라서 모두 현행범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조치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2일부터 사흘간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14일은 노숙탐생농성 마지막 날이었다. 용산서에 구금된 김용환 매항리법대위 집행위원장은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가 '두 곡만 부르면 끝난다. 지켜봐 달라'고 용산서장에게 요청했는데도 곧바로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행자 가운데엔 녹색연합 자

에서의 논의 추이에 따라 규탄집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안은 전자건강카드 발급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인정함으로써, 당초 '한푼도 들이지 않고(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겠다'던 복지부의 약속은 공수표임이 드러났다. (이창조)

원활동가 에이미(미국인) 씨도 포함됐다. 녹색연합은 미군환경문제를 고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에이미 씨의 캠페인 음악회에 참가했다가 국내 활동가들과 함께 연행됐다.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미군이 백주대 낮에 무적차량을 운행하는 걸 발견, 신고해도 경찰은 단속하려는 시늉도 안 했다"며 "단지 미군에 '무적차량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 경찰이 전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차량들은 보란듯이 다녔다"고 주장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무적차량 운행과 관련, 미8군을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보선)

(→1면 '모성보호법'에서 이어짐)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13일 "어느 것이 우선하거나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성보호 조항은 '여성노동권'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남녀동등 대우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모성보호관련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계 인사 300인 선언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 서울여성노조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묘한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심보선)

(가칭)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2차 회의

- 때: 6월 15일(금) 오후 7시 / 곳: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 참가대상: 전자건강카드 시행에 반대하는 모든 사회단체
- 문의: 홍석만(778-4001), 이창조(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노동계에 대한 공안 광풍이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 지도부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99년 8·15사면 당시 형기 2개월 4일을 남기고 출소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그를 재수감하기 위해 검·경에 검거지시를 내렸다. 또 검찰은 민주노총 이흥우 사무총장,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았다고 해 기하 전방위적인 민주노총 탄압 국면이 예상된다.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검거 시도는 비단 민주노총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인데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따르지 않고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중재결정이 내려진 사업장은 사실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사측으로 하여금 불성실한 교섭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외에도 '6·12 총력투쟁'에 돌입한 이후 효성울산공장 8명, 114 노조원 2명이 구속됐으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4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 여천NCC·여의도 건설운송노조 노숙농성장 주변에 경찰병력이 항시 대기

중이라 언제든지 투입돼 검거가 가능

한 상태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6·12 총력투쟁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라며 "집권후반기에 약화된 권력기반을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대섭)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가뭇에 지친 농민들의 한숨에 평이 끼지는가 싶더니, 이젠 '권력'으로부터 '집단 몰매'를 당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까지 다다를 정도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양 매도하는 데다, 이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빌미로까지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져보자. 과연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그토록 매도당해야만 했던 '짓'인가? 정부와 언론은 철차상의 티끌을 문제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불법이니 때려잡아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논리를 앞세웠다. 또한 '불법'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파업에 대해선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 운운하며 여론의 비난을 선동했다.

그러나 먼저 확인되어야 할 점은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파업이 회사측에 의해 계획적으로 유도됐다는 사실이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요청을 10여 차례씩 무시하고,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노조에게 '최후의 선택'을 강제했다. 편히 아는 사실을 놓고도 정부와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노조를 '집단이주의자'들로 몰아갔던 것이다.

'시민불편'이니, '경제적 손실'이니 하는 주장도 파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파업이 무엇인가? 생산수단과 권력을 쥐 자본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가 아니었던가? 노동자들은 놀고 싶어 일손을 멈추는 게 아니다. 자본가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입힘으로써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파업하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왜 문제되어야 하는가? 항공기가 멈추면 승객의 불편이 따르고, 공장가동이 멈추면 제품생산이 차질을 빚는다. 이러한 불편과 손실 역시 민주사회를 향유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비용'이다. 불편을 빙자해 파업을 비난하는 것은 남의 권리에 눈감고 자신의 편리만을 주장하는 편협한 이기주의자일 따름이다. 한편에선 '때가 아니다'며 시기타령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언제고 노동자의 파업이 '적절했던' 때가 있었는가? 이 또한 상투적인 핑계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헌법 33조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까닭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맞선 불가피한 저항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복수노조 유보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후퇴... 그런데도 정부는 '엄정 대처'와 '사법처리'만을 뽐내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것 자체가 나라를 망치고 경제의 덩미를 잡는 결정적 장애요인임을 직시하고,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으로부터 제명된 KBS노조 강철구 씨를 KBS(사장 박권상)가 비호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강씨가 임단협팀에 소속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12시 KBS본사 IBC관 앞에서 긴급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씨는 "몰염치한 성폭력범 강철구 씨"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성폭력을 은폐하는 KBS노조 8대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영경 정책실장은 "피해자들은 사건 공개 이후 온갖 희유와 협박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직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이선희 여성위원장은 "KBS 사측이 강 씨를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인정하지 말고 사규에 따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KBS노조의 입장은 단호했다. "강 씨가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강 씨가 임단협팀에 소속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씨를 옹호했다. KBS사측 또한 이번 사건에 수수방관하면서 강 씨를 간접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측의 책임있는 조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KBS 감사실 기예과 관계자는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서 투서가 들어왔을 경우, 기예과에서 조사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씨 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언급 자체를 매우 난처해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1일 언론노조는 KBS 박권상 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강 씨를 전임해제하라고 요구했고, 28일에는 이에 대한 KBS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KBS사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 이에 공대위에서는 16일 KBS 사장 앞으로 강 씨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계획이다. 한편 긴급집회가 열린던 시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는 KBS노조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발기인에는 대의원 232명 중 127명과 평조합원 285명이 서명했다. KBS노조 김용덕 전 중앙위원은 "강철구 씨 성폭력 사건 등 KBS노조의 부도덕성을 개혁하고 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상화추진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 집행부로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7일 PD협회가 KBS노조를 집단 탈퇴했고, 그 전날에는 기자회견이 현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현재 강철구 씨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지난 5월 15일 3차 출두 이후 검찰이 자료를 검토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은 지금까지 피고측과 원고측이 한 차례씩 서면답변서를 주고받았다. 100인위원회 시타 씨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대위의 활동이 계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용)

'미군사령부 앞 농성' 다시 시작

밤샘수사 등 항의

15일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324회 금요일집회'로 진행된 '용산 미군기지 앞 시민사회단체 철야농성 정리 및 농성장 41명 연행에 대한 규탄집회'에 참석한 불평등한소과개정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는 "연행자 전원을 석방할 때까지 밤샘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족화해자주동일협의회(자통협) 박유순 사무처장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피해를 일삼는 주한미군에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요일집회'에는 전날 서부경찰서로 연행됐다가 이날 오전 풀려난 사람들도 참가했다.

한편 자통협은 "(15일 저녁 10시 현재) 용산경찰서에 구금 중인 불평등한소과개정국민행동 오우희 사무국장, 김관태 사무처장, 우리땅 미군기지찾기 공동대책위원회 김용한 집행위원장 등 13명에 대해 밤샘수사를 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13명은 이에 항의, 단식을 하고 있다. 서부경찰서에 연행된 자통협 공동길 홍보국장은 15일 10시 현재까지 조사를 계속받고 있다.

(김일숙)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19일(화)

제 18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가을에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작업이 정치권의 두터운 장막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인권운동계는 ‘힘없는 국민의 호민관’ 역할을 하게 될 인권위원장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은 최영도 변호사(63세)라고 답변했다.

<인권하루소식>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동안 인권옹호활동에 간여해온 각 단체대표와 사무국장 등 집행책임자급 이상의 인권운동가, 인권변호사, 연구자(교수) 등 135명. 그 중 설문에 응한 사람은 100명에 이르렀으며 최 변호사는 김창국, 이문병, 조준희, 한승현, 유현석, 고영구 변호사 그리고 박노현 교수 등을 밀리 따돌려 23명의 추천(복수응답 가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권위원으로는 박노현 교수,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영에 성폭력상담소장, 이석태 변호사, 신인령 교수 등이 많은 ‘표’를 얻었다. 또 인권위원으로 거명된 사람 수만 해도 112명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인권개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활동 경력’을 가장 중요시

[설문 1]에서 인권운동계는 인권위원

장의 필수적 자질로서 ‘인권활동 경

력’(69명)과 ‘강직한 성격’(68명)을 꼽았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풀 수 있고 여타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활동 경력’은 인권위원에게도 강하게 요구(66명)되었으며 위원에게는 이 밖에 ‘활동력’(63명)과 ‘강직한 성격’(46명)이 중요한 자질로 지적되었다.

(=> 2면에 계속됩니다)

설문조사 대상 (총 135명)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위와 같이 모두 135명에게 설문서를 발송하고 10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했다. (응답률 74%)

- ▷ 인권관련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급 활동가
민가협 임기란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에 소장, 문정현 신부, 사회진보연대 이종희 사무처장 등 66명
- ▷ 인권옹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조인
최영도, 송두환, 김철준, 이석태 변호사 등 37명
- ▷ 인권옹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연구자
최갑수, 박노현, 조희연, 안병욱 교수 등 22명
- ▷ 인권분야 담당기자 등 언론인

민언련 성유보 이사장, <미디어오늘> 남영진 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인 사무총장, <월간동아> 김당 기자, <한겨레21> 신윤동욱 기자 등 10명

설문항목 및 결과 (인권위원장:응답자 수/인권위원:응답자 수)

[설문 1] 인권위원장 및 위원의 자질 (2가지만 선택)
① 상징성 (37/6) ② 강직한 성격 (68/46) ③ 활동력 (18/63) ④ 인권활동 경력 (69/66) ⑤ 해박한 지식 (4/14)

[설문 2] 인권위원장 및 위원의 연령층 (1가지 선택)
① 70세 이상 (1/0) ② 50세에서 70세 사이 (78/29) ③ 50세 이하 (8/62)
*예시항목에 관계없이 ‘나이무관 (8/9), 40세 이상 (1/3)’도 있었음.

[설문 3] 전직 공무원이 위원장 및 위원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모두 표시

① 전직 판사 (38/25) ② 전직 검사 (82/74) ③ 전직 경찰관 (92/89) ④ 전직 행정관리 (74/65) ⑤ 전직 군인 (88/87)

[설문 4] 인권위원장 및 위원 추천 (직접 이름 거명, 복수추천)

◎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시대에 인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산물이지만, 다시 민주주의의 현실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 인권은 그 내용이 자명한 듯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인권은 항상 다른 권익과 충돌하며 또 다른 인권들과 경쟁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민주주의 시대에 인권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항상 민주적 심의(審議) 절차를 통하여 규정되고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체제보다 ‘공동체’성이 미약하다. 예전의 종교나 다른 이데올로기적 공동체는 일정한 이념과 가치로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인간의 지위에 관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면,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강조되는 반면에 공동체성은 약화된다. 민주주의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어공동체’ 혹은 ‘의사소통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그럴 뿐이다. 그리고 인권의 바탕을 이루는 이념과 가치도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대중의 언어적 표상과 또 무의식적 상징에 의하여 지배된다.

이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언어공동체의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 인권이지만, 그것이 매체를 통하여 대중의 타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차원에 이르면 그 자유는 위협하기도 한 것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언어와 의사소통의 이미지를 장악하는 자는 곧 인권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인권은 매체들에게 정복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언어철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언어와 실제(實態)는 항상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가 실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때가 많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실재를 가리우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의 실재는 언어의 감옥에 갇히고 뿌리 없는 언어적 인권만이 춤을 추는 것이다.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며 인권의 지반인 평화를 교란해 온 언론들이 마치 언론자유 수호자인양 행세하는 것이나, 상품의 논리를 내세우며 인권에 치명적인 무분별한 폭력을 미화하는 예술인들이 자랑스레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인권의 위기를 절감한다.

21세기 인권운동은 무책임한 언어와 허황된 이미지와의 투쟁, 곧 시민적 문화혁명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정태욱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인권운동계의 희망은 위원장 및 위원의 연령대를 묻는 [설문 2]에서도 반영이 되었다. 즉 70세 이상의 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은 단 1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압도적 다수가 50세-70세 사이가 위원장의 연령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인권위원의 중요한 자질로 ‘활동력’을 꼽은 인권운동계는 대다수가 연령에 있어서도 50세 이하의 ‘활동력’(62명) 왕성한 인권위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국 인권운동계는 [설문 3]에서 경찰관, 군인, 검사, 행정관리 등 전직 공무원이 인권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는 데 대한 매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전직 판사에 대해서도 인권위원장(38명) 혹은 위원(25명)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존 ‘제도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들 개개인 차원의 인권의식에 상관없이 출신 조직과 완전히 절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설문주체 등을 들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보선)

주간인권흐름, 기사 넘쳐 다음 호에 실습니다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 2)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4)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5)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인권위원 선정은 이 법에 따라 철저히 정치권의 나뉘먹기 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문회나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단체나 국민의 희망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20일(수)

제 18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하다.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봉 속에 '동대문 경찰 서장이 넘어진 사건'을 호재로 삼아 19일에는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레미콘건설노동자들의 노숙 파업농성을 진압했다. 죄목은 '집시법 위반'이었다.

이처럼 노동운동 씨 말리기 작전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인의협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 철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노동계 탄압 중단 등을 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의장은 "정부와 검찰·경찰이 노동자에 대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구속자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민변 김도형 변호사는 "정부가 많은 노조들의 합법파업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조차 불법으로 매도하며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민중대회 때 정선모 동대문경찰서장의 부상에 대해 "신고되지 않은 조형물을 강제로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불법조형물은 집회 사후 사법적 책임을 물을 문제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강제로 압수할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일용 공동대표는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에 대한 검거령, 파업을 끝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집행부 구속, 파업중인 병원이 오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순태 교수는 시위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검찰방침에 대해 "민사상의 문제는 당사자 자치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한쪽의 일방적 지원은 그 자체로 다른 한쪽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노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론하며, "정부의 태도는 노동조합을 범죄조직으로, 노동자를 조직폭력배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노조(준) 조승현 대의협력국장은 "사소한 업무방해 등은 파업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업무방해죄 적용의 남발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서는 많은 질문과 답

변이 오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순태 교수는 시위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검찰방침에 대해 "민사상의 문제는 당사자 자치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한쪽의 일방적 지원은 그 자체로 다른 한쪽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또 '가뭇에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정서'에 관한 질문에, 김도형 변호사는 "그것이 과연 국민의 정서인가 아니면 언론의 정서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여대 연봉 운운하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을 비판하기 전에, 월 50만원 정도 받고 일하다가 해고돼 6개월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계 약직노조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언론을 질책했다. (범용)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총파업 71일째인 19일 오전 9시. 해머와 도끼를 든 2천여 명의 경찰이 레미콘노동자의 농성장을 습격했다. 여의동 공원 문화마당 1분 앞 보조도로에서 25일째 '노숙투쟁'을 진행해 온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장문기 위원장, 건설산업조합연맹 이용식 위원장 등을 포함한 건설운송노조원 301명은 서울시내 21곳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장문기 위원장과 이용식 위원장의 가족에게 보낸 체포사유서는 "...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보조도로상에 레미콘 70여대와 승용차 300여대 무단 주차 및 방치하고, 야간에 문화마당을 열고 차량·레미콘 등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숙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이라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경찰 스스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19일 건설운송노조 경기북부지부 강기태 조직부장은 "합법적으로 집회한 농성단이 잘못된 것은 불법주차 밖에 없다"며 "과연 불법주차한 것이 차를 부수고 사람을 잡아갈 정도냐"고 분개했다. 강 조직부장은 또 "불량 레미콘을 고발하고, 추방운동에 나선 것도 죄가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민주노총 때려잡기" 과정에서 "집시법"을 빌미로 파업하는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했지만, 우리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후 건설운송노조는 서울대 학생회관 앞으로 거점을 옮겨 '노숙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일숙)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벌써부터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지난 1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낮 12시부터 2시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전자건강카드가 상용화될 경우 예상되는 일들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그려보았다. (편집자주)

시나리오 1.

영화배우 박영자 씨가 '연예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과거 성병(性病)에 걸렸던 사실이 한 연예잡지를 통해 폭로되면서 박 씨에겐 온갖 억측과 비난이 쏟아지던 터였다. 연예잡지사로 박 씨의 병력정보가 흘러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전자건강카드였다.

박 씨는 얼마전 자신의 전자건강카드를 분실한 일이 있으며, 그것을 입수한 한 해커가 전자건강카드를 통해 박 씨의 병력정보를 풀어내고, 이를 연예잡지사에 팔아넘겼던 것. 박 씨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 사이에선 전자건강카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시나리오 2.

경찰청이 경찰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개개인의 각종 정보가 전산화되고 하나의 망으로 통합관리됨에 따라, 그동안 '발품'을 팔아 정보를 수집해왔던 인력

들이 이젠 '전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된 까닭이다.

경찰 내부에까지 구조조정의 바람을 몰고 온 공신은 전자건강카드. 2002년부터 시행된 전자건강카드가 이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치고 가장 광범위한 국가신분증으로 자리잡았으며, 각종 관공서나 대중교통 이용에도 사용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을 전산조회만으로도 확인하기 쉬워진 결과다. 구조조정 앞에 직면한 현직 정보과 형사들 사이에선 살아남기 위한 '전산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시나리오 3.

건강증이 있는 회사원 김경태 씨는 오늘 또 회사에 지각했다. 회사출입증을 집에 두고 출근한 탓에 다시 집까지 되돌아간 일이 이번 달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전자건강카드의 지문을 확인하기 위한 단말기가 전국의 병·의원으로 보급된 이래, 사회 곳곳에 전자지문 감식시스템이 들어서더니, 김 씨의 회사도 얼마 전 직원 출근부를 전자지문감식장치로 교체했다. 김 씨는 "건강증을 닦아야 할 지, 전자카드를 닦아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답배만 연신 피워냈다.

시나리오 4.

지침이의 일기. "... 나는 오늘 또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다. 병원에 갔다오다가 전자건강카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게 공짜로 발급하는

건 줄 아냐며 돈타령을 하였고, '카드 발급받을 때까지 아프지도 마라'며 마구 화를 내셨다. 엄마는 또 '정부가 맨날 국민 호주머니만 텅내고 혼자발을 하겠다. 카드 하나 때문에 하루종일 기분이 우울했다.'

시나리오 5.

오늘 하루 병원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환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었다. 전산망의 마비와 동시에 전자건강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처방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속출했던 것. 환자 이미영씨는 "환자들에게 1분이 하루와 맞먹는 시간"이라며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했다. 2002년 전자건강카드가 시행된 이래, 전산망 장애에 따른 병원대란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시나리오 6.

삼대SDI와 현성카드의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까? 2001년 전자건강카드 사업권을 따낸 두 회사가 주식시장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자건강카드에 신용카드기능이 부가된 결과,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 현성카드의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자지문감식 단말기 보급과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맡은 삼대SDI 역시 매년 엄청난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차기 전경련 회장은 두 회사 가운데 한 쪽에서 나올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창조)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때 : 6월 21일(목) 오전 10시
- 곳 :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902호 (기독교회관이 아님)
- 내용 : 전자건강카드 문제점 소개 / 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 문의 : 778-4001(홍석만), 741-5363(이창조)

<사회단체 입장표명에 동참할 단체는 연락바랍니다>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이트 폐쇄를 조직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쪽거에 맞서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지난 7일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부분폐쇄 및 8일 아이노스쿨넷 전면폐쇄 조치에 맞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 소속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온라인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현재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에 대한 복제(미러링) 사이트가 구축됐다(<http://freekig.jinbo.net>). '복제'란 논란이 일고 있는 홈페이지를 여러 곳에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의 폐쇄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소프트웨어로부터 폐쇄당했던 아이노스쿨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 공간을 빌어 다시 홈페이지를 열었다(<http://inoschool.jinbo.net>). 이는 공동행동 소속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통신윤리위의 폐쇄 권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은 이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가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폐쇄된 표현물들을 적극적으로 복구하여 재표현하는 것은 싸움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사법적 강제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폐쇄 권고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28일 매일 정오경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26일 오후 2시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29일부터 3일간 첫 온라인 사이트 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매일 밤 9시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가상 연좌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사이트 파업이란 서비스를 중단하고 첫 화면에 사이트 파업의 의의와 온라인 시위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만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아래 통신망이용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되면, 정보통신윤리위의 검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망이용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이원재 정보팀장은 "유해매체가 청소년들에게 차단되려면 유해매체 표시와 함께 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며, "이는 실질적인 내용등급제이며,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검열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범용)

주간인권호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1. "뿔가 무서워! 법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밀어부쳐!" 노동관계 장관회의 "불법파업 엄정 대응"(6.11, 13)/ 경찰특공대, 효성 울산공장 40미터 옥탑 농성조합원 8명 연행(6.12)/ 대검공안부(부장검사 박종렬), 민주노총 지도부·대한항공조종사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등 29명에 체포영장 발부 받다(6.15)/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성재 위원장 등 4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6.17)

2. 40년 만에 민간인 학살보고서 공개 전갑길(민주당)의원, 60년 4대국회 당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현지조사보고서 공개(6.12)/ 전의원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민관합동 민간인학살 대책 범정부기구 설치' 촉구(6.13)

3. 가뭄 핍박대고 미룬 국가보안법 토론회 한나라당 '가뭄 때문에' 국가보안법 토론회 연기(6.11)/ 고대총학 '통일대토론회 초청' 송두율교수 입국 또 불발(6.12)/ '2000 국보법 보고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국보법 구속자 수가 더 늘었다고 발표. 그 중 7조 찬양·고무 위반자가 91%를 차지(6.15)

4. '천국의 신화': '신화'가 되다 서울지법 형사합소6부, '천국의 신화'에 무죄선고. "집단 강간장면만으로 만화를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

5. 부시맨, 어딜 가나 구박당어리 유럽순방 시작한 부시 첫 방문국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반대 시위(6.11)/ 벨기에 브뤼셀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교도협약 인준거부한 부시를 반대한다"(6.12, 13)/ 스웨덴 에테보리, "환경과파자 부시를 반대한다"(6.14)/ 중러,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체제를 반대, 탄도 탄약격미사일협정(ABM) 지지협정 서명(6.15)

6. 일 교과서 왜곡, 더 이상 두고 못 본다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태국, 영국 등 전 세계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6.12)/ 국제기자연맹(IFJ) 서울총회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결의문' 채택(6.14)/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토론회 참가자 6백 70여명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활동을 규탄하는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6.15)

7. 정보통신위, "온라인 공간은 내 땅이다" 정보통신윤리위, '학교비판, 자퇴조장' 이유로 자퇴생 모임사이트(inoschool.net) 폐쇄명령(6.11)/ 대전지법 흥성지원, 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을 게시한 김인규교사 구속영장 다시 기각(6.12)

8. 매항리 사격장도 폐쇄하라 미 행정부 60여년간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섬에서 실시한 미 해군 사격훈련을 2003년 5월부터 전면중단 발표(6.14)/ 국방부관리 KBS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국방부가 매항리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축소 발표했다."(6.15)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21일(목)

제 18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광주교도소가 최악의 의료공황상태를 맞고 있다. 소내 의료관들의 사임으로 수개월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천9백여 명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광주교도소 담당 의료관(의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한 후 새 의료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교도소측도 "지난 4개월간 재소자들의 치료는 타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의사들의 자원봉사에 전적으로 의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광주교도소 보안과장은 "이미 도움을 받을 곳은 다 받았으며 현재 진료는 전직 의료관들의 도움으로 일주일에 세 번 2시간 정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자기 환자처럼 치료해 주길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이며, 현재의 치료로는 환자의 수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교도소 의료관 턱없이 모자라

국가기관이 4개월간 의사 한두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의료현실을 조금만 들여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2000년 8월 31일 현재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6만8천명. 그러나 의료관 수는 불과 58명이다. 의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재소자 수는 1천2백여 명에 달하고, 1일 평균 진료자 수는 2백54명이 넘는다. 특히 마산교도소와 영등포교도소의 의료관

들은 각각 2천2백17명과 2천94명의 재소자를 담당해야 하니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다. 다른 인력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44개 교정시설의 간호사와 약사, 의료기사를 통 털어 봐도 1백명을 넘지 않는다. 시설이나 장비 역시

7-80년대 수준이고, 거기다 교도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 좋지 않다보니 웬만한 사망감이나 특별한 동기 부여 없이는 의사들이 오질 않는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광주교도소 의료관들 역시 "너무나 열악한 의료환경과 턱없이 낮은 보수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퇴직 사유였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의료관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보내 봤지만, 의사들은 찾아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사고 역시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 2면에 계속)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너트나무 카페에서 '민주노총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국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단체들은 "정부당국이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등 노조간부에 대한 '대량검거공세'를 펴며 노동운동에 대한 초강경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붙여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진압은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편파적 공권력 행사"라며 이는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는 반개혁적·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43개 사회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결국 무덤에 묻히고 말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적 탄압은 시민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위축과 약화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정부에 대해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노총과 연대한 강력한 반정부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일숙)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잦아들다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

인터넷에 형성된 동성애자 모임들이 잇따라 폐쇄당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성적소수자들이 그나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다음커뮤니케이션 내 동성애자 카페 '81CLUB'과 세이클럽 내 동성애자 동호회 '조금만 사랑했다면'이 음란성, 풍기문란 등의 이유로 두 통신사에 의해 강제 폐쇄됐다. 관례상 사이트 폐쇄에 앞서 사업자가 한 두 차례 행하는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사이트 전반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경고 조치 없이 폐쇄하기도 한다"면서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음란한 게시물 때문에 폐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81CLUB' 관계자는 "천목을 목적으로 만든 카페였기 때문에 사적인 내용의 게시물도 대부분이었고 음란성 여부가 논란이 될만한 글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문제가 될만한 글이 있었다면 남성 동성애자의 키스씬이 담긴 게시물 정도"라고 덧붙였다.

사이트 폐쇄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겪는 괴로움은 심각하다. '조금만 사랑했다면' 관계자는 "하찮은 대화방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억압을 당해야 하나"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사이버 세계에서까지 푸대접받는 게 너무나 속상하다"고 슬픔을 토로했다.

잇달아 발생한 사이트 폐쇄 사태에 대해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박수진 간사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특정 게시물을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동성애 혐오자가 악의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동성애자 사이트에 올리고 사업자에게 신고해도 그 사이트는 곧장 폐쇄되고 말 것"이라고 평했다. 박 간사는 이어 "동성애자 운동이 통신을 매개로 발전해 온 배경을 볼 때, 사이트 강제 폐쇄 조치는 동성애자 운동에 전반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 차단사이트 목록 10만8천 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 기준에는 동성애가 '퇴폐 2등급'이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동성애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접근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 끼리끼리는 근래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성애자 사이트 폐쇄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심태섭]

민중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난민지원위)를 설치한 것. 민변에 난민지원위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민변 난민지원위는 난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해설책을 발행할 예정이다.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

(=>1면 '광주교도소'에서 이어짐)

법무부측은 대책마련 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발생한 상황이다", "일차적 책임은 소추에 있다"는 등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다. 광주교도소측 역시 "의사가 싫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무대책에 재소자들만 죽어나

이러한 와중에 심각한 건 재소자들 뿐이다. 지난해 만성 남막염 관정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문 모씨. 문 씨는 전에 있던 교도소에서 처방받은 약을 넘달째 복용중이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평상시라면 새로운 처방을 요구했겠지만, 현재 교도소 사정을 봤을 때 응급환자도 아닌 그에게 진료 기회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임동규 의사는 "일정기간의 약물치료가 효능이 없다면 조속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며 "남막염이 악화되면 몸에 균이 퍼져 폐혈증으로 발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지난 1월 만성위염 및 장염 진단을 받은 김 모씨도 '혹시 암이 아닐까'하는 두려움 속에 대책없이 병만 키우고 있다. 때문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외부

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받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지원위)를 설치한 것.

민변에 난민지원위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민변 난민지원위는 난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해설책을 발행할 예정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한국의 난민신청자들 중 아프리카 및 동남아 출신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 난민신청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또한 "최소생계비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용]

진료를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외부 진료를 신청한 재소자만 150명이 넘는 다. 순서대로라면 석 달은 기다려야할 형편.

교도소 의료공황 전국으로 확산 우려

일부에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나마 공중보건의(아래 공보의)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한 우리사회에서 공보의만이 유일하게 동원가능한 의사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보의는 도청소재지 및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의 교도소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본래 공보의 제도가 의료가 취약한 곳, 즉 농어촌 지역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로 교도소에 공보의를 파견하게 된다면 교도소와 법무부가 의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회피해 모든 교도소에 공보의 파견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교도소의 의료공황사태는 어느 교도소에서라도 드러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유혜정]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22일(금)

제 18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충격을 틈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졸속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에 인권사회단체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사회진보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6개 인권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전자건강카드의 시행방점을 철저히 추궁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전자건강카드가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하여 국민에 대한 초감시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건강카드가 신용카드·교통카드의 기능을 겸하게 될 때, 개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전산망을 통해 저장된다"며, "이렇게 됐을 때 국가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 선별하여, 국민들의 삶을 자기방식대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료집단이 개인정보 '짜지우지'

한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전자건강카드 발급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3천6백만여 명을 훨씬 초과한 4천5백만여 명이며, 전자건강카드에 사용될 IC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결제 등의 필요성으로 신용카드와

의 연계가 적극 검토되고 있기에, 소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짜지우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인 강태희 교수(중앙대 영문학)는 이와 같은 상황을 러시아에 빗대었다. 현재 러시아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피아는 구소련의 지배관료 출신. 강 교수는 "관료집단이 타락할 경우에 국민들이 직면하게 될 무시무시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특히 소수의 관료집단이 국민들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용산경찰서, 의경 사망사건

끊이지 않는 '의문사', 투명한 조사 필요

전입한지 열흘도 안 된 의경이 경찰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어 수사 담당 형사들이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들에게 미리 작성한 '사체인도확인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서장 김동민)는 "17일 오전 10시 55분께 용산구 원효로 용산서 별관 4층 내무반에서 방범순찰대 본부중대 곡모(22, 경기 군포시)이경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2층 베란다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꼭 이경이 내무반에서 수건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베란다 쪽 알루미늄 창틀을 벌려 뛰어내려 자살했다"면서 "꼭 이경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꼭 이경의 가족들은 "자살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꼭 이경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해 현재까지 용산서 형사1반에서 꼭 이경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꼭 이경의 대학 동아리 선배 김익준 씨는 "(꼭 이경이) 죽기 전, 지난 15일 한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내 무반에서 고참들이 괴롭힌다. 면회 좀 와달라'고 했다"면서 "면회까지 부탁한 사람이 자살을 했잖나"며 꼭 이경이 자살했다는 경찰 측 주장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또 "(꼭 이경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데다가 의지가 굳어 나약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짜맞추기 수사 의혹

20일에 담당 검사 지휘아래 꼭 이경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당시 용산서 담당 형사는 부검이 끝나기 5분여 전 부검실에서 나와 유족에게 "꼭 이경의 소지품을 전달할 테니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꼭 이경의 아버지는 경황이 없어 유품을 접수해야 한다는 마음에 서류 내용도 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다. 그러나 나중에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화 신부)에서 서류를 살펴본 결과, "변사체에 대하여 검시한 바, 타살혐의 없으므로 검사 지휘에 의하여 사체를 유족에 인도한다"는 내용이 끼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군폭력 대책위 안원영 활동가는 "부검도 마치기전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용산서가 짜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냐"며 "특히 부검도 끝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검사 지휘' 운운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과 천주교인권위 군폭력대책위 관계자들은 21일 용산서를 방문해 △경찰청 또는 서울청으로 수사기관 교체, △허위공문서 작성 관계자 처벌 △용산경찰서장 사과 등을 요구했다.

꼭 이경은 서울 모 대학 한문학과에 재학중 지난 4월 23일 자원 입대, 지난 8일 용산경찰서에 배치됐다. (심태섭)

<기고>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 동성애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6월 20일, 까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이 '차단목록'은 각 업체의 소프트웨어에 장착되고 PC방, 공공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목록'에 오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차단, 격리되는 셈이다.

'차단등급' 부여과정은 해당사이트를 찾아오는 기술적 경로 그리고 이에 일일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포르노 사이트에 링크된 사이트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긁어 오면 3명의 모니터(아르바이트)들이 '노출, 섹스, 혐오, 퇴폐, 폭력, 사행, 불법'의 등급기준으로 나누고 그 정도를 표기한다. 윤리위원회는 차단목록의 99%가 '포르노'이고 '음란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단지 3명이 하루에 3백여건 씩 처리하다보니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차단이 이루어진다. '아르바이트'의 고정관념에 어긋나면 차단되는 것.

자의적으로 '차단' 여부 결정

동성에 관련 사이트들은 b, c, g(노출, 성, 퇴폐) 범주에서 2, 3, 4등급으로 고루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약하게 분류된 g-2등급에는 인권운동 사이트, 동성애자 뉴스 사이트도 속해 있었으며 b, c-4등급으로 분류된 사이트 중에는 여행안내 사이트, 각종 생활정보를 주는 사이트, 동성애관련 지역정보(gaytoronto, gayvancouver) 사이트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클린턴도 표지인물로 등장했던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동성애 잡지(advocate.com)',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네트워크(ilga.org)도 차단대상이다. 동성애자들은 뉴스를 공유해도 안되고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사이트를 만들어도 '퇴폐 등급'에 의해 세계에서 차단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권리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일까?

결국 이 목록에 들어있는 동성애 사이트들은 그저 '동성애' 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진짜 차단되어야 하는 사이트'에 '링크돼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에 뜬 광고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 사이트들이 차단목록에 오르게 된다. 광고가 잘못되었으면 그 광고를 낸 쪽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링크시킨 사이트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이트와 해결을 봐야지 왜 멀쩡한 사이트를 목록에 올려놓고 퇴폐네, 음란이네 하느냐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동성애자'변태, 동성애=비정상적, 퇴폐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충실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등급을 부여받은 해외 동성애 인권운동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당신들의 사이트가 퇴폐 사이트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사이트는 한국 네티즌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서신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우이현주 (한국여성성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까리끼리' 회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23일(토)
제 18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번 확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 민주당 간사인 신계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는 지난 20일 노동부 김호진 장관과 민주당 이상수 총무, 환노위 유용태 위원장 등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민련이 주장하고 있는 생리휴가 폐지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민주당안에서 대폭 후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도입만을 유지하고, 경총·전경련이 반대하던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 휴가, 가족간호휴직'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한 것이다. 그동안 입장이 갈려왔던 한나라당의 이재오 총무는 "민주당과 합의 상태에 있다"고 말해 모성보호법이 여야 합의에 가까이 왔음을 시사했다. 이제 자민련만 동의해준다면 모성보호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여성노조, 파견철폐공대위 등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2일 '여성보호조항 삭제 없이 환노위 대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국회근처 한나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주당안 반대 △여성보호법 사

제 없는 모성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유현경 씨는 "3당간 의견조율이 안 되자 모성보호라는 입

법취지마저 무시한 채 여성근로조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조 투입,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성노동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의 모성보호법안은 25일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심의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심태섭)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

지난 17일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중대 곡형근 이경이 대기발령 10일만에 사망했다. 또 사체부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타살의 혐의 없음으로...' 운운한 구절이 적힌 사체인도확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사실로 볼 때 이미 '사고'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사건을 껴맞추려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꼭 이경 사망사건이 지난 달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의경을 구타한 사실이 확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경조직에 구타 등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수원 남부경찰서 '의경 구타' 이후 경찰청장의 지휘서신에 따라 '전·의경 관리대책 전담추진반'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꼭 이경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의경 관리대책 전담추진반'의 대책은 군대나 전·의경으로 복무한 사람이라면 '사고'가 나면 의례적으로 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소원수리, 신체검사를 통한 구타행위 확인 및 색출, 취약장소 순찰 강화... 또 정신병동까지 갈 정도로 구타를 한 것에 대해 취한 조치는 기껏 수원남부경찰서장 서면경고, 방범순찰대장 직위해제 정도이다. 당국이 취한 조치는 직접 구타에 가담했던 재대 의경을 불구속한 것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타를 방조·묵인·은폐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다. 대신 경찰청장 지휘서신에 따라 '전·의경 구타방지 및 경찰관 인권 결의대회'를 했다고 생색내기에 바쁘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데 누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겠는가? '군기를 잡는다'고 의경들이 나서는데 어느 지휘자가 기를 쓰고 그걸 말리겠는가?

용산경찰서에서 사망한 꼭 이경의 상급자는 유족에게 '군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않느냐'고 얼버무렸다고 한다. 수원 남부경찰서 구타사건 이후에도 '군기잡기'는 계속된 것이다. 이미 '사체인도확인서' 사건을 통해 용산경찰서에서 자신을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경찰은 또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한구하면서도 언론에는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말을 흘리는 등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경찰이 자신을 치료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관행'을 통해 또 한번 확인되었다. 이런 경찰에게 꼭 이경 사망사건을 조사하라고 말할 수 없다. 경찰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치료하려면 민간에게 조사를 맡기고, '... 결의대회' 대신에 '군기잡기'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5월 24일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건 올 11월 말. 3년을 넘게 끌어온 '격투'치고는 싱겁게 끝났다. 법 공포후 한 달. 정부는 인권위원장과 위원, 사무총장 인선에 여념이 없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침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긴 싸움의 여진이 가시지 않아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위 시대를 가늠할 수 없어서. 사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숙명이라 할 것이다.

'인권위 시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인권위 시대에 인권활동가와 단체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인권위 시대에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권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인권위가 뭘지 모르면서 인권위 시대를 예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경비견이다

인권위는 한마디로 인권이라는 간판을 들고 다니며 짖어대는 '경비견'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마음껏 휘젓고 다니다, 인권침해에 대해 짖어대는 것이다. 짖어대고 눈을 흘길 수는 있으나 물어뜯을 수는 없다. 이른바 '권고적 효력'이다.

수사도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조사가 끝난 뒤 인권위가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당사자에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인권위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다.

권고란 받아들여도 그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이다. 다만 권고를 받

은 해당기관은 인권위에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넘겨 받은 처리 결과를 살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론에 공표하여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 어찌 보면 국가기관이면서도 시민단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곳저곳 사이렌을 울리며 누빌 수 있되, 감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

또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조정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이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어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결국 인권위는 아주 잘 만들어진 경우에도 개별 인권침해 사안

에 대한 구제에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가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령이나 관행 등을 고치도록 요청하고, 이행실태를 감찰하는 정책권고 분야와 인권교육 분야이다. 이때 인권위가 맞추고 있는 눈높이는 국제인권기준이다. 다른 국가기관이 국내법에 활동근거를 두고 있다면 인권위는 국제인권법에 활동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권위는 국가가 자신이 과거에 저질러온 인권 침해행위를 반성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한 눈은 시민사회에, 다른 한 눈은 국제인권법에 고정하고 활동하는 국가기구내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이다. (이광길·법용)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일명 '파리원칙'으로 불리는 93년의 원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기본준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 권한과 의무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입법·사법·행정 관련 법조항, 인권침해 상황 및 일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정부, 의회,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을 장려하고 명백히 이행되도록 하며, 국내 법조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인권문제를 여론화한다.

◎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세력, 특히 '아래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독립성 확보와 안정적 권한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직무수행기간이 명확히 보장되어야 한다.

◎ 운영방식 - 국가인권기구는 자유로운 심사, 증언청취, 정보나 문서 입수, 여론에의 호소, 다른 기관과의 협의, 실무그룹 및 지방조직 구성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인권보장과 증진, 경제적·사회적 발전, 민주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관한 고발과 청원을 조사·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고, 청원자가 유리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발 및 청원을 직접 조사하거나 적절한 다른 기관에 이송하며, 관련된 법률, 법규정, 행정관행의 개선을 권할 수 있는 기관에 제안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26일(화)

제 188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25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4년 청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 중인 의문사 사건 가운데 타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0년 7월 계엄군에 붙들려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다 균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 씨는 감호소에서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채 방치됐다가 84년 10월 14일 청송감호소 지하조실에서 사망했다.

당시 감호소 관계자들은 박 씨 사망 이후 경위서를 조작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부검해 사인을 심장마비로 꾸미는 등 진상을 조작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사실 또한 조사 결과 드러났

다. 그러나 위원회는 박 씨를 직접 폭행한 이집술, 박수호, 김의식, 김명겸 씨 등 교도관과 사건을 은폐한 교도소장 김명식·보안과장 서장권·의무과장 서근수·검사 최복성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양승규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사회보호법에 의거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감호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정부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위원장 등을 파면해 공무원노동자들의 단결권 쟁취를 향한 첫걸음부터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것을 문제삼아 차 위원장(국회사무처) 등 주요 간부 5명을 파면하도록 했다.

박재범 전공련 사무처장은 "행자부는 23일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고광식 사무총장, 부산지역연합 이용한 대표, 경남지역연합 이영길 대표, 강원대 사무처장 등 5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전하고, "검찰이 전국공무원결의대회 '주도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25일 성명에서 "전국공무원결의대회 탄압사태를 수집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25일 성명에서 이구동성으로 △전공련 탄압 중지 △공무원 노조 인정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무원노조 허용' 권고를 무시"하고, "제2의 전교조 사태"로 물고가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결성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고 상기시키고, "전공련 탄압은 정권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ILO에 가입한 175개국 중 우리나라와 대만만 빼고 다 있는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민주주의 바늘이 멈추었거나 거꾸로 간 것이 아니냐"며 규탄했다. (김일숙)

이번 주부터 '인권이야기'는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김혜란(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신운동욱(한겨레 21 기자),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씨가 맡습니다.

그동안 인권이야기를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철단, 편리 그리고 감시

지금 대부분의 서울 시내버스에 CCTV가 달리게 된 시연은 이례하다. 지난 96년 10월, 석달 전의 버스요금 인상이 실은 2백38억여 원의 운송 수입금을 빼돌려 회사를 적자 상태로 만든 업주들의 '조작극'에 의한 것이었음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그런데도 다음해 3월 버스 요금이 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버스 수익 투명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때 '버스 수익이 불투명한 것은 운전기사들의 뺑뺑이 때문'이라는 업주의 주장이 부각되었고, 애초에는 버스업주들의 비리 때문에 시작된 '시내버스개선종합대책'은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남겨놓고 마무리되었다.

서울시는 업주들에게 거액의 CCTV 설치비를 지원했고 서울 시내버스에 일제히 CCTV가 달리게 되었다. CCTV는 이제 더 이상 버스 수익 투명화와는 관계가 없다. 몇 년 새 널리 보급된 교통 카드가 요금을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 명분을 다했음에도 CCTV는 여전히 견제하다. 사업주들이 버스 CCTV에 상당한 예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CCTV를 백배 활용한다.

어떤 버스회사는 "물증을 잡았다"며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해고했고 또 다른 회사는 관례대로 커피값을 뽑아간 노동자에게 "200원 뺑뺑했다"는 이유를 들어 퇴사를 종용했다. 때때로 그들은 CCTV의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기도 한다. 9시 뉴스에서는 버스 CCTV에 잡힌 소매치기 장면을 생생하게 중계한다. 시청자는 소매치기의 행위에 분노하면서 CCTV가 우리에게 주는 기능적 효용에 안도한다.

우리 눈앞에서 늘 CCTV가 노동자를, 승객을, 일거수일투족을, 대화내용을 감시하고 녹화하는데 어째서 이 문제는 중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감시기술이 절대 노골적인 '감시'의 이름으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아니, 감시기술은 늘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등장한다. 때로는 첨단이라는 이름을, 때로는 편리함을, 때로는 공익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다. 버스 CCTV가 그랬고, 전자주민카드가 그랬고, 전자건강카드가 그렇다.

그러나 감시의 본질은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하게 불평등한 권력관계다. 첨단 감시 기술일수록 '기술의 중립성' 속에 권력관계를 은폐한다. 그것을 통찰할 때만이 우리는 소중한 인권을 지켜낼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또 다른 기술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차단 기술과 그 차단 기술의 뒤에서 휘둘리는 감시와 검열 권력이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처럼 순진한 생각은 없을 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주간인권호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1. '고무줄' 법,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검찰, '집단행동 피해자의 손해소송 적극 지원'(6.18)/ 서울지법, 집회금지 가져본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입류(6.18)/ 서울지법, 시위현장에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기로(6.19)/ 19개 인권단체, "노동운동 탄압말라" 기자회견(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편파적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6.20)
 2. 공무원노조 필요하다면서 노조 만들려니까 '파면' 근로복지공단,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행위로 발생한 우물증은 산재"(6.14)/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75%가 근기법 위반(6.16)/ 행자부, 전공련 차부천 위원장 등에게 파면지시(6.23)
 3. 7월 5일, 우리는 '총파업'으로 간다 경찰, 합법노숙과업에 집시법 들이대 강제해산(6.19)/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 우려"(6.19)/ 민주노총 비상중앙위, "7월 5일 1일 '총파업'·7월 6일부터 2차 연대파업"(6.22)/ 민주노총 '명동집회',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 등 중단 요구(6.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운동 탄압 중단하라"(6.24)
 4. 인터넷공안, "맘에 안 들면 온라인에서 유배" 서천교육청, 김인규 교사 직위해제, 징계위 회부(6.18)/ 진보넷등 불복종 선언, 사이트 폐쇄된 김인규·아이노스쿨 복원 및 미러링((6.18)/ 검찰발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정봉무 앞 1인시위(6.20-28)
 5. "가난한 이유로 지적재산권의 굴레에 갇힐 수 없다" 국경없는 의사회등, "민중들이 필수약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적용해야"(6.19)/ 세계은행 개발정책연례회의, 반세계화 시위 우려 사이버회의로 대체(6.19)
 6. 동남아? 주한미군이나 제대로 단속하도록... 부시, '미국 1만8천여 개 핵탄두 보유에 경악'(6.18)/ 찰스 로버트슨 미국 기동군 사령관, "동북아말고도 동남아까지 미군기지 확대" 주장(6.19)
 7. 대량학살, 발본색원해야 할 것 한국전쟁범죄 국제민간법정, "미군 민간인학살 유죄"(6.24)/ 유고, 밀로세비치 국제 전법법정에 세우기로(6.23)/ MBC 시사프로, 한국전쟁 때 일본군 참전한 사실 다뤄(6.22)/ 옛소련, 핵투하 뒤 민간인등 투입 관찰(6.24)
- ◎ 기타 ◎
 용산경찰서 의경 사망, 사망경위에 의혹(6.17)/ 고양교육청, 임의단체에 학생 가입시키고 동원(6.19)/ 서울지법, "간척사업으로 어장손실" 어민에 배상판결(6.22)/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전면반대 기자회견(6.21)/ 민변,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설치(6.20)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27일(수)

제 188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행위 처벌, 유급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즉,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대상을 '여자와 18세 미만'에서 '임산부와 18세 미만'으로 바꿨으며,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성인여성들은 특히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하지 않을 경우 유해·위험사업장에서 근로할 길을 열어놓고 있어 오히려 모성보호라는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법에서 유해·위험사업장을 금지하던 것이 '6·26일 환노위대안'은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복지연대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라며 "(6·26 환노위 대안)은 여성노동자를 더욱 고통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환노위대안은 모성보호를 미끼로 여성노동을 유연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지켜보던 심재욱 공공연맹 여성국장 등 10여 명의 활동가들은 환노위에서 위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로비에서 "근기법 개악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여성노동법개정 연

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6·26 환노위 대안)은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고용평등 강화와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의 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지난 해 12월에 마련된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의 대안법률 중 일부가 누락돼 아쉬움이 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속에 의결될 것"을 희망했다. 또 "향후 노동시간 단축운동과 함께 근로조건개선 없는 생리휴가제도 수정반대 및 이번 개정에서 누락된 모성보호 조항 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남녀노동자 모두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보선)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2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서유럽 자본주의사회의 토양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 이론을 민족적·변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진정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인권이론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인권운동연구소가 2기 비상임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단체 활동가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인권'과 '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 비상임연구원은 원하는 세미나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간과 조건이 맞으면 선택과목 및 그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비상임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7월 5일까지 '이름, 나이, 연락처, 인권운동 경력, 현재 하는 일, 참가 세미나 과목'을 기록한 자기소개서(A4 1매)를 보내 주십시오.

□ 개강 : 7월 19일(목) / 오리엔테이션 : 7월 13일(금) 오후 7시

□ 제2기 커리큘럼 및 시간표는
 (월) 오후 7시-9시: 근대사(하) / 오후 9시-10시: 정세동향
 (화) 오후 7시-9시: 근대 정치사회사상 / 오후 9시-10시: 인권운동동향
 (목) 오후 7시-9시: 인권문헌연구(하) / 오후 9시-11시: 영어강독(하)
 (금) 오후 7시-9시: 마르크스주의법학(법학 하)

(토) 오전 11시-오후 1시: 일어강독(하)

□ 접수 및 문의 : ☎ 3675-5363/ (팩스)3676-1302

전자우편 ihm@sarangbang.or.kr

□ 무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기획>②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길가는 평범한 시민을 붙잡고 "당신은 어떤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다고 하자.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교정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 체포, 가혹행위를 지목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래되고 보편적인 인권 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맞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교정 시설에서 불법체포, 가혹행위를 당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해 신속한 인권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 씨가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불심검문을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 받다 '건방지다'며 형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경찰서에 들렀던 사람중 홍 씨를 아는 사람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때, 인권위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우선 관련 경찰서장에 지금 벌어지는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현장을 보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내부 비리를 덮어주는 걸 의리라 여기는 경찰의 속성상 권고를 이행하기보다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권위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인권위 직원들이 현장에 뛰어가 구타하고 있는 형사들을 제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경찰서 직원들이 동업자 의식을 발동해 인권위의 조치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긴급구제 조치권을 실속 있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가담 정도가 무거운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고 가벼운 사람에겐 징계를 권고하고, 더 악한 경우에는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고발이든 징계고든 조정이든 권고를 받은 쪽에서 거부하면 다른 강제 수단이 없다. 권고적 효력의 한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홍 씨를 구타하는 데 소극적으로 가담한 형사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하자. 물론 권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와 이유를 인권위에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경찰서장이 통보한 이행조치 결과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론에 공포해 여론을 압력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인권위의 권한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 없을 수도 있다.

인권위, '강제권'은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조사 절차에 있다. 인권위원들이 '구타 형사'를 바로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반드시 서면 진술서를 먼저 받고, 진술서를 검토한 뒤에야 '구타 형사'를 부를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구타 형사'에 통보하고, 진술서를 받고, 진술서 내용을 판단해서 출석 통보하다 보면 2개월이 후박 지나가 버린다.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인권위가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채집한 후라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위에 진정하는 사건의 99%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임을 감안하면 서면조사수선주의는 인권위가 현안에 대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혹행위 등을 한 경찰관이나 검사까지도 인권위에 불러 조사할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검사가 인권위에 불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억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면전 진정권 등 보장

구금·보호시설에서 일어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교도관에게 두들겨 맞은 재소자는 서면으로 또는 교도소를 방문한 인권위원에게 직접 자신이 당한 사실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방해하거나 밀봉한 진정서를 뜯어본 교정 시설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면전 진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인권위가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소자 진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을 때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 구타 교도관을 바로 부를 수도 없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도 강제력이 없다.

인권위의 효력, '일반조사권'

오히려 인권위가 가진 효과적 수단은 개별사안에 대한 조사권보다 '일반조사권'일 것이다. 인권위는 불법 수사 관행 및 실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이를 바꾸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나 사안의 특성상 법으로 강제하기 힘든 경우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음흉한 눈빛이 뭐냐'는 물음이 인구에 회자된 적 있다. 인권침해를 둘러싼 기준이 제정과정에도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불법은 아닌 데 그렇다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딱히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이나 고압적 태도 등 경계가 모호한 것들에 대해 인권위가 권위 있게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건 사회전반에 강력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 및 형법 관련 법제를 연구해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이광길)

경찰, 미군학살 사죄요구 학생에 몰매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 도중 미군 담을 넘어 건조물 투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6일 구속된 이덕용(경원대 식품공학과 3학년) 씨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몰매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이 씨를 면회한 학교동료 신은경 씨는 "용산경찰서 조사2계장 등 7-8명이 목비권을 행사하는 이 씨를 제압할 목적으로 손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집단구타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26일 오후 2시 무렵 용산경찰서 앞에서 이 씨에 대한 감압수사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하던 고대생 등 학생 40여명이 전원연행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에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열린 '학살만행 사죄배상 미국반대 결의대회'에 참가, 미8군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막는 전경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동료의 무릎을 타고 미군기지 담을 넘어갔다가 미군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24일 집회 때 아무 길도 터주지 않고 도로 양방향에서 시위를 진압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연우 씨는 밀고 들어오는 경찰에 밀려 넘어지는 시위대에 깔려 실신할 정도였다. (심보선)

남부지역 노동단체, '이적단체' 연행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최석희(38)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홍재동 대공분실)는 또 서울민주노동자회 사무실을 수색해 컴퓨터 모니터 2대, 본체 3대, 서류 등을 압수했다.

26일 체포된 사람은 최석희(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민주노동당원), 문재훈(서울민주노동자회 정책국장), 문종찬(서울민주노동자회 조직국장), 김소연(갑을전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신(태광하이텍노동조합 전 조직부장), 김봉림(서울민주노동자회 전 대표), 최미선(동해노동조합 전 사무장), 김순희(민주노동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사무국장), 곽은주(마마노동조합 부위원장) 씨 등이다.

민주노동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민주노동자회는 지난 97년 6월 이적단체 혐의로 옥고를 치른 적이 있다"고 밝히며, "4년이 지난 후 이적단체의 명운을 또 다시 씌우는 것은 울긋불긋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본부는 또 "(이적단체 혐의 연행은) 노동운동 진영을 공안분위기로 탄압해 7월 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료 및 가족들은 민주노동 서울지역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사무실에 임시연락처로 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민주노동자회'는 서울남부지역 등에서 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해왔다. (심보선)

'말기 암' 환자 아버지와 국보법 구속자 아들

"아버지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앉은 곳이 경찰서 유치장이라니... 아들은 수배생활 4년을 보내고 손목에 수갑을 차고, 아버지는 수술도 못한다는 의사의 '말기 암' 진단을 뒤로하고 병과의 투쟁을 시작하고 계셨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금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98년 6기 한총련 의장 손준혁(29) 씨가 부친 손영삼(64) 씨에게 보낸 안타까운 편지 내용이다.

손 씨는 올해 5월 21일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붙잡히기 전까지 4년 동안 수배생활을 해왔다. 가족들과 생이 별했던 손 씨가 경찰에 붙들리고 나서 맨 처음 알게된 소식은 부친이 '담도암 말기'라는 사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외아들인 손 씨는 당장이라도 집에 들어가 부친을 간병하고 싶었지만 자신은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 단체를 구성한 한총련 의장'이라는 혐의를 받는 몸.

일본 일초가 아까운 아버지와 아들이 그동안 만난 횟수는 경찰 유치장에서 만난 단 한 번이다. 부친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전립선에까지 암세포가 퍼져 면회마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부친은 손 씨 연행 당시 보다 몸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줄었으며 지금은 음식물 섭취조차 못해 주사영양제를 맞고 있다.

손 씨 연행 직후 대구지역에선 양심수 후원회, 영남대 민주운동회,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연합, 영남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손준혁학생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함철호)를 꾸리고 손씨에 대한 석방·탈원 운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결성이후 청와대·법무부·국회 등에 탄원서를 발송하고, 6월 14일에는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서울 시민들에게 손씨의 '한 맺힌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손씨는 16일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손 씨 부친은 치료차 있던 암 환자 요양소에서 '있어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집에서 투병 중이다. 그가 간간히 대책위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은 "아들놈 때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년지시 "그래, 우리 핵이는 언제쯤 나올 수 있더냐"라고 묻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송구스러울 뿐이다.

대책위 사무국장 곽은경 씨는 말한다. "25일부터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간혹 지나가다 '힘내라'하시며 음식을 전해 주곤 하죠. 그런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준혁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준혁이 아버님은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데, 옆에서 보기가 어찌나 죄송한지..." 떨리는 목소리에 말끝을 흐리는 그다. 손씨 가족과 대책위는 이번 주에 손 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 할 예정이다. 보석 신청을 하며 손 씨 부친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영남대 총장·교수들이 작성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이 갈라놓은 아버지와 아들. 생이 별 4년을 강요한 국가보안법이 오늘도 두 사람의 마음을 산산이 갈라놓고 있다. (심태섭)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자, 법률가들이 모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도중에 오고 간 사람까지 치면 대회의실을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관심사는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가 자신을 민간자율기구로 자처하며 인터넷 상에서 해 온 '검열'이 국가의 검열이 아니라고 강변해온 탓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행정기관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민간자율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부행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해 △조직 및 예산에서 정통부의 승인과 경비보조를 받아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관련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 변호사는 또 "시정권고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체검열을 강요하여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정보통신윤리위

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정보, 범위·내용이 경직됐다

헌법재판소 황성기 헌법연구원은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지돼야 할 불법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그것이 가진 책임성과 한계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노스쿨 전면폐쇄 등에서 볼 때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황 헌법연구원은 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성태(상지대, 사회학) 교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등급기준, 등급부여체계, 내용선별체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검열등급제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윤리위가 등급기준을 정해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런 등급제는 '검열 없는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검열'을 초래해 '알아서 기도'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검열+내용등급제' 결합은 야만

홍 교수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2001년 6월 28일(목)
제 188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윤리위원회의 검열과 '전자적 표시'로 표현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결합될 경우 우리사회 인터넷은 전체주의적 야만이 지배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선 김인규(비인중 미술) 교사는 "비인지역의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었다"며 "검찰이 긴급체포하는 등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이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국가가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형(15, 아이노스쿨 운영자) 씨는 "학교문제를 이야기하는 사이트 중 최고수준의 '진전성'유지해 온 아이노스쿨을 폐쇄한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별소프트웨어 기준, 윤리위 장악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제23조는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9월 시행될 음란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 제32조는 PC방 업자에게 컴퓨터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음란을 이유로 사실상 '검열'을 공식화한 법 조항들. 이때 음란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근거한다.

내용등급제에 대해 "인터넷이 생긴지 얼마 안 됐고 기술적 진보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 너무 닫힌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홍성태 교수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실상 검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과연 그런 문제제기가 아이노스쿨 폐쇄 등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지 되새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경쟁하도록 하고 있는 데 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겠다"는 한 연구자의 지적에 대해 이원재 문화연대 정보팀장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는 여러 곳에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표준으로 삼는 '차단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정한다"며 "9월 실시될 음비게임에 모든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심보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기획> ③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앞에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 조항 조차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맹목적 검열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계속해서 찢려 나간다. 지난 2월 인사동 '노컷전'에서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안성금 화백의 '아!한반도'에 시비를 걸었다. 작품에 사용된 인공기가 안보에 어긋난다는 이유.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부분폐쇄 해프닝 및 자퇴생 사이트인 아이노스쿨넷의 전면폐쇄 조치는 불온을 이유로 한 검열이다.

한편 7월 1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제23조는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9월 시행될 음란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 제32조는 PC방 업자에게 컴퓨터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음란을 이유로 사실상 '검열'을 공식화한 법 조항들. 이때 음란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근거한다.

검열피해는 국가인권위의 구제대상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국가기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도 활용된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아직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진다.

국가인권위 시대, 표현의 자유를 침

해당한 주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30조에 의해,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국가인권위는 조사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국가인권위가 갖는 감정은 국제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아이노스쿨넷이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폐쇄당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있었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장에게 이를 원상회복하고 관련 정책이나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할 땐 정당한 이유를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이때 국가인권위는 이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고발 및 징계권과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쉽게 무시하기란 어렵게 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또 하나의 권리구제 절차가 생긴 것.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가기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국가의 인터넷상 검열'에 대해 "명확한 대안은 없으나, 검열의 위험성을 네티즌 및 대중들에게 알려 인터넷상 해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정보팀장이 이야기한 지극히 당연한 대응에 관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는 법 제28조를 근거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불온·음란 등 모호하여 남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지침을 제시할 수 있

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때 주장해 왔던 기준과 근거들이 국가기관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

계속되는 법 개악은 이제 그만

표현의 한 방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도 국가기관에 의해 계속 침해되고 있다. 지난 16일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민중대회는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징물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매도됐다. 이를 틈타 이팔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하지만 집시법은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1백미터 이내 및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지난 99년 5월 24일 개악되어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다. 당시 집시법개악은 부지불식간에 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시대에는 집시법처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제·개정될 때, 미리 국가인권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인권관련법안들에 대한 의견개진과 여론화를 통해 법안들이 형식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이면서도 국가기관의 검열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의무를 가진 독특한 기구다. 안보·불온·음란이라는 논리로 국가기관에 의해 끊임없이 침해되어 온 표현의 자유가 바야흐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범용)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함께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파업 및 가상연좌시위

6월 29일 낮 12시부터 7월 2일 낮 12시까지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 사이트파업'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사이트에 오셔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청와대를 상대로 가상연좌시위를 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29일(금)

제 18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시 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신관련법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망법)의 개악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은 지난 15일 통신망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한 것.

법안은 현행 통신망법 21조 '전자문서에 대한 공개제한 규정'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다.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낱조·유포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기록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문서 중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한다." 쉽게 말해, 검찰·경찰이 영장발부 같은 '거주장스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명예훼손·유언비어성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아래 정통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검토한 정통위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보호비밀법 등 통신관련법들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하나가 통신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도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통신망법 개정시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삭제됐던 부분"이라며, "공안기관이 아무런 제약없이 통신망 이용자들의 '접속기록'에 접근한다면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상적 통신 검열이 강화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뜻.

여기서 '접속기록'이란 통신망 이용자들이 통신망에 접속할 때 통신회사 컴퓨터에 남게 되는 접속 시작·종료 시간, 사용한 접속주소(IP address), 접속 아이디 등을 말한다. [심태섭]

서민노회, 전원 구속

<속보> 26일 서울지방법청청 보안3과에 의해 체포된 서울민주노동자회(대표 최석희, 아래 서민노회) 소속 활동가 9명에게 28일 전원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 모두에 대한 영장청구를 받아들인 것. <관련기사 본지 6월 27일자>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흥재동 대공본실에서 수사 받고 있다. 구속자들 가운데 4명은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문재훈(서민노회 정책국장)씨는 경찰로부터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 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접견을 다녀온 가족이 전했다.

한편 구속자 대부분은 이를 동안 평균 3~4시간 정도 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해 매우 지쳐 있다고 한다. [심태섭]

만화사랑방

이동수



<기획>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④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마리오(서울영상집단 소속) 씨.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해왔고,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없는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이 씨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4월 8일 강원대를 방문했던 이 씨는 소형 오토바이(스쿠터)를 빌어 타고 잠시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됐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탓이다. 그런데 이 씨는 무면허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았기 때문에 곧바로 과출소로 연행됐다.

문제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 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여권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지문정보가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면 신원확인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종용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의 요구에 따르고 말았지만, 이 씨는 "해의에서조차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여권이 있는데, 왜 반드시 지문을 찍어야 하나?"며 아직도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의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려 했지만 곧 포기하고 말았다.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볼 수는 있지만 뾰족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는 11월 설립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씨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기 때문.

국가인권위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개인정보 축적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전자정보의 집적이다. 현재 경·검은 국민들의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기 위해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안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정보를 관리하려는 국가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유전자는 소량의 샘플만으로도 무수한 신체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인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 파악되고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곧 국민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제어할 만한 마땅한 장치는 없다.

오히려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유전자정보 수집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다. 아울러 유전자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개인정보의 축적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에 요청되는 과제는 클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법 제20조는 "국가행정기관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는 "(국가인권위가) 인권에 관

한 법령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들을 충분히 실효성있게 만들고, 정보화라는 명분 아래 가속화되는 '개인정보의 축적'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역시 국가인권위의 역할이다.

작업장 감시에도 도전

지난해 11월 대전에 위치한 한라공조에서는, 작업장에 자동센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자동센서가 부착되면 노동자들의 생산공정이 실시간으로 경영진의 컴퓨터로 전송되기 때문.

회사측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자동센서 도입을 합리화했지만, 노동자들은 사실상의 '감시체제'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이 갈등은 회사측이 '자동센서를 작업공정 개선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쓰는 것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그 '괴물'은 언제고 무서운 '감시장치'로 돌변할 수 있다.

한편 97년 현대자동차에 도입된 RF카드 신분증도 작업장 감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RF카드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및 식당이용 시간을 전자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수백미터까지 감지 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회사 내에서 경영자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 이 RF카드는 LG전자와 삼성SDI 등 각 기업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 간에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못박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은 필수적이다.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스스로의 활동을 확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인권위의 몫이다. [범용]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1년 6월 30일(토)

제 18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검거령이 내려진지 15일만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다. 단 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민주노총의 명운을 걸고 진정한 개혁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15일 검거령이 내려진 후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포상에 쫓기던 단 위원장은 29일 명동성당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단 위원장은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우 사무총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모든 투쟁체계를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단병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다"고 밝혔다. 즉, 단 위원장이 참가해야 할 각종 투쟁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는 것이다.

단 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비상중앙위원회의 7월 5일 전 사업장 1일 총파업결정 등을 상기시키며 "노정 대처국면을 풀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을 풀고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단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정책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고, 철도에서 민주집행부가 탄생해 "민영화 전면 저항을 선언하는 등 노동운동 전체판도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급격히 나아가는 것을 봉쇄"해서, "휴일휴가 축소와 변형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파견근로 확대와 연속근로에 따른 정규직화 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하

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아울러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양심세력과 굳건하게 연대하겠다"며, "민주노총이 사느냐 죽느냐, 진정한 개혁의 희망을 일구느냐 잃어버리느냐 하는 비장한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종로공원에서 '노동운동 탄압 규탄 시국대회'를 연다. (심보선)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이른바 '모성보호법'이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세 당이 합의처리한 것이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다. 예초 알려졌듯이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30일 연장된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성보호'로 치장된 근기법 개정안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

현행 근기법 제63조(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제68조(야간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70조(경내근로금지)는 여성노동자의 장시간·야간·위험노동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최소한의 조항마저도 아예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일각에선 그런 조항들이 이미 사문화돼서 있으나마나한 장치라고 말한다. 또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주12시간까지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있다고도 리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사용주가 자신에게 불리한 노동법을 알아서 스스로 지킨 적이 있던 말인가. 그렇다면 새로운 법은 굳이 왜 만드는가. 실효성도 가능할 수 없는데 말이다. 법률의 존재와 무관하게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야간·연장노동을 강요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조항은 그런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노동자들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특정 일 12시간, 특정 주 56시간까지 일을 해도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직업병·과로사 등을 호소해왔다.

'밀바다를 향한 경쟁'이 아니고서야, 열악한 조건이 같아졌으니 남녀평등이 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강요된 선택'이 아니고서야 장시간·야간·위험노동을 감내할 노동자는 단연코 없다. '차이'속의 평등을 추구하며 남녀 모두의 인간다운 노동을 향해 가야할 가시밭길을 버리고, 차이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상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셈이다. 조만간 생리휴가제의 폐지 또한 노동위원회의 논의된다는 것은 그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여성노동자는 차별 받아온 것이지만 차이를 인정받아온 것이 아니다. '차이'를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밀바다를 향한 경쟁에 뛰어들라는 논리에 우리는 언제까지 휘둘릴 것인가.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흐름과 쟁점

1. '반갑다 기쁨,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기쁨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6월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회권 연대회의'(6.11), 19개 인권단체(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6.20)의 연이은 노동운동 탄압중단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 위원장은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그물을 놓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6.29)했다.

한편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이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6.26)되고, 법원은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6.28)했다.

2. '자본의 용병, 경찰2중대', 강패들의 노다지는 노사쟁의 현장

회사의 방해로 총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파업을 시작해 '불법'의 낙인이 찍힌 효성 울산공장에 강패가 출현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질 테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몰아내라'는 회사 고위간부의 다그침까지 받은 용역강패들과 노조원들은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 정부는 경총의 지원과 위협에 못이기는 척 공권력을 투입(6.5)해 울산공장을 점거했다.

노사분규가 있는 곳이면 나타나 어느 새 '친숙한' 모습이 돼버린 용역강패는 이미 광주 대우캐리어, 부평 대우공장, 김포 신곡리 철거현장 등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용역강패들은 효성 울산공장에서 정보과 형사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강패들과 '친하게' 지내며 배웠는지 경찰은 망치와 도끼라는 불법무기까지 동원해 합법적으로 파업농성을 하고 있는 레미콘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습격(6.19)하기 까지 했다.

3. 날찍한 곳에서는 '구타근절 결의대회', 음습한 구석에서는 '구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의경에 대한 구타사실이 확인된 후 이무영 경찰청장은 지휘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경찰청 산하 모든 전·의경 중대에 대한 점검을 벌이던 중, 전입 10일 밖에 안 된 곡형근 이경이 용산경찰서에서 사망(6.17)했다. 용산경찰서는 부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향이 없는 유족에게 '타살혐의 없다'는 사체인도확인서를 교부(6.20),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고 지으려 하고 있다.

또 용산경찰서 조사2계장 등 경찰 7~8명은 미8군사령부 앞에서 미군 민간인학살 사죄를 요구하다 담을 넘어 미군 영내에 떨어진 이덕용(경원대 식품공학과) 씨의 '복부를 가격하고 발로 머리를 차는'의 몰매(6.24)를 가했다.

4. 금단의 영역 -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철용성으로만 보였던 '신체건강한 사람은 모두 군대간다'는 병역제도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군복무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5.31)을 벌인 것. 같은 날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총거부 등이 이해할만한 점이 많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구조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고백(5.31)하기에 이르렀다.

5. '정보통신윤리위에 밑보이면 당신의 세계가 닫힙니다'

지금 세계역사상 초유의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권·사회단체, 개인사이트 등 2백여개 사이트가 29일 낮 12시부터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 용등급제에 반대하며 사이트 파업에 들어간 것. '불온통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이현령비현령 조항에 의해 폐쇄·차단되던 사이트나 웹페이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PC방은 윤리위가 정한 기준을 따른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논평

- 의경구타사건 재조사해야 한다(6.2)
-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6.9)
-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6.16)
-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6.23)
-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6.30)

인권이야기

- "연신교"는 70만원짜리가 들려야 한다" - 최민식(6.5)
- 내규를 제정하고 나서-엄혜진(6.12)
- 언론의 자유와 인권- 정태욱(6.19)
-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 - 장여경(6.26)

설문조사

-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결과(6.19)

기획-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 ① 국가인권위원회란 무엇인가? (6.23)
- ②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6.27)
- ③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6.28)
- ④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6.29) (7월에 계속됩니다)

가상 시나리오

- 제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6.20)

기고

- 정보통신윤리위 '차단목록' 열람기-동성에 사이트에 철조망을 치다 우이현주(6.22/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회원)